

U N I F I C A T I O N
W H I T E P A P E R

통일 백서 • 2005



통일부



발 간 사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2년 동안 한반도 평화증진과 동북아 공동번영을 구현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북한 핵문제, 이라크전, 주한미군 재조정 등 우리 주위를 둘러싼 안보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세변화 속에서도 우리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여건 조성에 주력하는 한편,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해 나감으로써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해 남북간에는 분야별로 총 25회의 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서는 북측에 핵문제 해결을 촉구함으로써 6자회담이 진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두 차례의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는 서해상 무력충돌 방지책에 합의하는 등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도 하였습니다.

남북을 오고간 인원도 26,534명을 기록하여 바야흐로 '2만명 남북 왕래시대'를 개막할 수 있었고, 남북 민간차원의 교류, 대북 인도지원의 저변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도 두 차례 이루어져 남북정상회담 이후 총 10회에 걸쳐 9,977명이 혈육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편, 3대 경협사업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견인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개성공단 시범단지가 조성되고 입주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게 된 것은 남북 분단사에서 커다란 결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갈등을 녹이고 화해를 만들며 평화를 생산하는 남북공존의 장이 지금 북녘 하늘 아래 펼쳐지고 있습니다.

철도·도로 연결공사, 금강산 육로 관광의 활성화도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민족공동체 건설의 큰 길을 열어 나가는 힘찬 기수로서 그 몫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반기에 남북 당국간 대화가 중단된 것이 아쉬운 점이긴 하지만 남북 경제사업과 민간 교류는 꾸준히 진행되는 등 남북 화해협력의 큰 물줄기는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올해는 광복 60주년이자, 6·15공동선언이 채택된 지 5주년이 되는, 민족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해입니다. 남북이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 해묵은 냉전질서를 극복하고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기틀을 다져 나가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북핵문제는 더 이상 민족의 앞길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6자회담을 통해 조속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나가는데 중지를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남북대화를 하루 빨리 재개하여 남북관계를 전면 복원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차원 높은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내년도 백서에는 보다 많은 남북관계 진전의 발자취가 아로 새겨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2005 통일백서」는 지난 한 해 동안 한반도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위해 쏟은 우리의 노력과 성과들이 빼곡히 담겨져 있습니다.


남북한 사이에 이루어진 만남, 교류, 화합, 신뢰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번영을 위해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는 데 유익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05년 2월

통일부장관 정동영

(알 림)

- 「2005 통일백서」는 2004년도 사항을 중심으로 1년간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기술하였으며, 책에 나오는 통계의 기준시점과 본문내용의 서술시점은 2004년 12월 31일입니다.
- 「2005 통일백서」를 비롯하여 1991년부터 발간된 「통일백서」들은 통일부 홈페이지 www.unikorea.go.kr 「자료실 ➡ 통일부 발간물」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목 차

제1장 평화번영정책의 추진

제1절 통일정책의 역사적 전개 / 13

1.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 / 13
2.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 15

제2절 평화번영정책의 내용 / 17

1. 개념 및 추진배경 / 17
2. 목표 및 추진원칙 / 19
3. 추진전략 / 21
4. 특징 및 의의 / 23

제3절 평화번영정책의 성과 / 25

1.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추진 / 25
2. 한반도 평화정착 기반 조성 / 27
3. 남북관계의 진전과 북한의 변화 / 28
4. 대북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 강화 / 29

제2장 남북회담의 진행

제1절 남북회담 추진현황 / 33

제2절 장관급회담 / 36

1.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 36
2.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 / 38

제3절 군사분야 회담 / 41

1. 남북장성급군사회담 / 41
2.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회담 / 45
3. 남북장성급군사회담 통신실무자접촉 / 47

제4절 경제분야 회담 / 49

1.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 49
2.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접촉 / 53
3. 남북청산결제실무협의 / 55
4.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 60
5.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 / 62
6.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 67
7.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 / 68

제5절 사회문화분야 회담 / 70

1. 용천재난구호회담 / 70
2. 제4차 남북적십자실무접촉 / 71
3. 아테네올림픽 공동입장을 위한 실무접촉 / 73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확대

제1절 남북한 인적교류 / 78

1. 남북한 왕래 / 78
2. 북한주민 접촉 / 83

제2절 남북교역 / 86

1. 남북간 물자교역 / 86
2. 위탁가공교역 / 92

제3절 남북간 통행·통신·통항 / 95

1. 통행 / 95
2. 통신 / 98
3. 통항 / 99

제4절 남북경제협력사업 / 102

1. 경제협력사업 추진현황 / 102
2.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 105
3. 금강산 관광사업 / 108
4. 대북식량차관 제공 / 111

제5절 개성공단 개발 / 115

1. 개관 / 115
2. 1단계 100만평 개발 / 121
3. 개성공단사업 추진기반 구축 / 127

제6절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 134

1. 개관 / 134
2. 남북 사회문화 교류 추진 / 134

제7절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 139

1. 남북교류협력 관련 국내법·제도정비 / 139
2. 남북경협합의서 발효 및 제도화 추진 / 140
3. 남북협력기금의 관리·운용 / 141
4.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 / 147



제4장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제1절 남북이산가족 교류 / 153

1. 당국차원의 교류 / 154
2. 민간차원의 교류 / 157
3.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노력 / 159

제2절 인도적 대북지원 / 160

1. 정부차원의 지원 / 161
2. 민간차원의 지원 / 164
3. 용천재해 복구지원 / 168

제3절 새터민(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171

1. 국내입국 현황 / 171
2. 정착지원 체계 / 172
3. 제도 개선 / 177

제4절 북한인권·환경 개선 노력 / 1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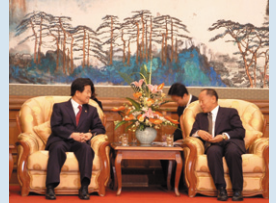
1. 북한인권 문제 / 179
2. 북한환경 개선 / 182

제5장 대북 경수로사업 추진

제1절 추진경과 / 187

제2절 경수로사업 일시 중단 / 189

1. 사업 일시 중단 조치 / 189
2. 사업 중단기간 중 보존·관리활동 시행 / 190
3. 일시 중단조치 1년 연장 결정 / 191



제6장 통일정책의 지지기반 확충

제1절 국민 참여 확대 / 195

1. 정책고객과의 대화 / 195
2. 모니터링단 운영 및 국민여론조사 실시 / 196
3. 자문기구를 통한 국민의견 수렴 / 197
4. 민간 통일단체 활동 지원 / 201

제2절 통일홍보의 다각화 / 203

1. 인터넷을 통한 홍보 강화 / 203
2. 홍보자료 발간·보급 / 210
3. 언론매체 활용 홍보 / 212

제3절 통일교육의 내실화 / 215

1. 통일교육 추진체계 확립 / 215
2. 통일교육의 다양화 / 219
3. 통일교육 지원 확대 / 223

제4절 국제협력 강화 및 해외 홍보 / 233

1. 국제적 지지기반 확대 / 233
2. 국제 네트워크 강화 / 236
3. 해외 정책홍보 확대 / 237

제5절 북한 정보자료 제공 및 개방 확대 / 243

1. 북한 정보자료 제공 / 243
2. 북한 정보자료 개방 확대 / 244

제6절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업무 혁신 / 248

1. 혁신비전과 전략 / 248
2. 통일업무 혁신인프라 구축 / 250

부록

1. 남북관계 주요일지(2004) / 259

2. 남북관계 관련 웹사이트 / 281

3. 통일부 조직표 / 287



제1장



평화번영정책의 추진

제1절 통일정책의 역사적 전개

제2절 평화번영정책의 내용

제3절 평화번영정책의 성과



제1장 평화번영정책의 추진

2003년 2월 출범한 참여정부는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평화번영정책을 제시하였다. 평화번영정책은 그동안 역대정부가 이룩해놓은 통일정책의 성과를 계승 발전시킨 것이다.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은 당시의 국제정세, 남북관계 상황 및 국민여론 등을 반영하여 통일방안, 정책기조 및 내용면에서 탄력적인 변화를 보여 왔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통일정책 기조는 전체적으로 남북간 화해협력이라는 일관된 흐름을 유지하는 가운데 추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남북관계는 점차 불신과 대립의 벽을 제거하고 평화공존을 지향하는 가운데 상호 신뢰를 쌓아 나가고 있다.

제1절 통일정책의 역사적 전개

1.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초대정부로 출범한 이승만 정부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북한도 UN총회 결의에 따라 자유선거를 실시하여 대한민국에 합류해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6.25 전쟁 직후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북한의 전쟁 도발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던 현실을 감안하여 '북진통일'을 주장하였다. 1960년 4.19혁명으로 출범한 장면 정부는 '북진통일'을 반대하고, 'UN 감시하의 남북 자유총선거'를 통일정책의 기조로 제시하였다.

분단 이후 국제 냉전질서 속에서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부정하면서 치열한 대결로 일관했던 남북관계는 1970년대 초반 동·서 데탕트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되었다.

1970년 8월 15일 박정희 대통령은 제25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남북한간 선의의 경쟁을 촉구하는 「평화통일구상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어 1971년 8월 12일 최두선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남북적십자회담 개최를 제의하였고, 이를 북한이 수락함으로써 분단 26년 만에 인도적 문제에서부터 남북대화의 통로가 열리게 되었다. 1972년 7월 4일에는 남북 당국자간의 비공개 접촉과 상호방문을 통해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당국간 합의문서라 할 수 있는 「7.4 남북공동성명」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되고,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이 천명되었다.

1981년 3월 출범한 전두환 정부는 1982년 1월 22일 국정연설을 통하여 「민족통합 민주통일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은 '통일은 민족자결의 원칙에 의거하여 거래 전체의 의사가 골고루 반영되는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으로 성취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입각하여, 통일헌법의 제정으로부터 남북총선거를 통한 통일 민주공화국 완성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1980년대 후반 소련의 개혁·개방정책에 힘입어 동구 공산권 국가들의 개혁과 개방이 급속히 진전되는 등 냉전질서가 해체국면에 접어들면서 남북관계는 중요한 전기를 맞게 되었다.

1988년 2월 출범한 노태우 정부는 국제냉전의 해체에 부응하여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 특별선언)」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내외상황의 변화에 부응하여 북한의 국제적 고립탈피를 지원하고 개방을 유도함으로써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오랜 반목과 대결에서 벗어나 남북관계 개선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천명된 것이었다. 한편 노태우 대통령은 1989년 9월 11일 국회연설을 통해 통일 과도단계인 '남북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1990년 8월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을 제정, 시행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이 1990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되었고, 1992년 2월 평양에서 개최된 제6차 회담에서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및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발효되었다.

1993년 2월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이전 정부의 통일방안을 보완하여, 1994년 8월 15일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국가완성단계’를 주 내용으로 하는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하였다.

1998년 2월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북한을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함께 공존공영하자는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에 따라 ①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②일방적 흡수통일 배제 ③남북간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이라는 원칙을 밝히고 평화와 화해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추구하였다.

즉 튼튼한 안보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면서 화해와 협력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이 스스로 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당장 법적·제도적 통일의 실현을 서두르기보다는 안보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해 나감으로써 남북주민들이 자유롭게 오고가면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게 되는 ‘사실상의 통일상황’을 실현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대북화해협력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결과, 2000년 6월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어 「6.15 남북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이후 다양한 남북대화가 진행되고, 이산가족교류 활성화 등 인적·물적 교류가 증대되는 등 남북관계의 의미있는 진전이 이루어졌다.

2.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역대정부가 발전시켜온 우리의 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1989년 9월 노태우 정부시기에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제시되었으며, 1994년 8월 김영삼 정부가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보완·발전시킨 것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점진적·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기조 위에서 통일과정을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국가 완성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화해협력단계’는 남북한이 적대와 불신, 대립관계를 청산하고, 상호 신뢰 속에

남북화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면서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화해와 공존을 추구해 나가는 단계이다. 즉 남북한이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분단 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적대감과 불신을 해소해 나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상호신뢰가 더욱 쌓이게 되면 남북관계는 평화를 제도화하고 통일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남북연합단계로 발전하게 된다.

‘남북연합단계’는 하나의 완전한 통일국가 건설을 목표로 이를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남북한이 잠정적인 연합을 구성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평화를 제도화하고 민족공동생활권을 형성하면서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과도적 체제에 해당한다. 과도적 체제로서의 남북연합단계는 남북이 서로 다른 체제와 정부 하에서 통일지향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통합과정을 관리해 나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남북한이 합의하는데 따라 각기 대외적 주권을 유지하되, 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 남북공동사무처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된다. 또한 군사적 신뢰가 구축되어 한반도에서 확고한 평화가 정착되고 경제협력과 사회 문화 분야에서 교류 협력이 심화되어 민족공동체가 형성될 것이다.

마지막 단계인 ‘통일국가 완성단계’는 ‘남북연합단계’에서 구축된 민족공동의 생활권을 바탕으로 남북한 두 체제를 완전히 통합하여 정치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1민족 1국가로의 통일을 완성하는 단계이다. 즉, 남북한의 의회대표들이 마련한 통일헌법에 따라 민주적인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회, 통일정부를 구성함으로써 통일국가를 수립하는 것이다.

이처럼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중간 단계인 남북연합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점진적 과정을 거쳐 남북한간 이질감이 해소되고 민족공동체가 형성된 조건 위에서 통일국가를 형성하는 방안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로, 민족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며, 민족구성원 개개인의 자유와 복지, 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선진 민주국가를 통일국가의 미래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2절 평화변영정책의 내용

1. 개념 및 추진배경

평화변영정책은 한반도 평화증진과 남북공동변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여 한반도를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참여정부의 포괄적인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이다. 평화변영정책은 갈등과 대립으로 점철되어 온 한반도를 동북아 평화와 변영의 중심으로 만들어 나감으로써 이 지역의 안정과 변영에도 기여한다는 역사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에서의 안보현안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역점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면서 남북경제 공동체를 건설하는 동시에 동북아의 평화변영을 위한 협력체 창설을 주도해 나가 고자 한다.

진정한 동북아 시대를 열자면 먼저 한반도에 평화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어야 합니다. 한반도가 지구상의 마지막 냉전지대로 남은 것은 20세기의 불행한 유산입니다. 그런 한반도가 21세기에는 세계를 향해 평화의 신호를 발신하는 평화지대로 바뀌어야 합니다.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동북아의 평화로운 관문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부산에서 파리행 기차표를 사서 평양, 신의주, 중국, 몽골, 러시아를 거쳐 유럽의 한복판에 도착하는 날을 앞당겨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사중(2003. 2. 25)

평화변영정책은 그동안 우리가 이룩한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과 남북관계 상황, 그리고 변화된 국제적 환경 등 몇 가지 배경을 바탕으로 제시되었다.

첫째, 그동안의 경제발전과 민주화로 높아진 국가위상과 국민적 자신감이다.

지난 1960~70년대의 경제성장, 1980년대의 민주화, 1990년대의 국제화와 정보화, 그리고 1990년대 말 외환위기 극복 및 2002년 월드컵대회의 성공적 개최과정에서 우리의 국가역량은 신장되고 국민적 자신감도 높아져 왔다. 이처럼 높아진 우리의 국가위상과 국민적 자신감은 평화변영의 동북아 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 우리의 역할 공간을 확대함으로써 평화변영정책 추진을 가능케 하였다.

둘째, 지난 정부에서 이룩해놓은 대북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이 성숙 되었다는 점이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사이에 화해협력이 가속화되어 왔고, 이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에 대한 주변국들의 관심도 높아져 왔다. 특히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사업 추진을 계기로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및 중국횡단철도(TCR) 연결 논의와 함께 지역 내 에너지 협력에 대한 주변국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북한도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특구 확대, 경제관리개선조치 시행 등 제한적이거나 실용주의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북한의 노력이 지속되어 변화와 발전을 안정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반도 문제가 국제문제화 되어 가는 상황에서 정책추진 시야를 남북관계에서 동북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2002년 10월 이후 심각한 안보 현안으로 대두된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이 동북아 지역안정의 관건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의 대북정책이 남북관계 차원을 넘어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함께 고려하면서 주변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과거 서독의 동방정책도 동독과의 쌍무적 관계보다는 유럽차원의 안정적 냉전 상황 관리라는 국제적 협력을 중요시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오늘날 다자간 안보협력의 수준이 높아지고 세계 경제의 지역주의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EAN+3,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다자협의체의 역할 강화에서 볼 수 있듯이 동북아 지역에서도 역내 경제·안보분야에서의 협력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평화변영정책은 이러한 국제정세의 흐름을 반영하였다.

참여정부는 신장된 국력과 국민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동북아 평화변영의 흐름을 주도해 나가기 위해 남북공동변영은 물론 동북아 안정과 변영을 지향하는 평화변영정책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2. 목표 및 추진원칙

가. 목표

평화변영정책은 ‘한반도 평화 증진’과 ‘남북한 공동변영 실현 및 동북아 공동변영 추구’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 증진’은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안보현안을 해결하는 토대위에서, 남북간 실질협력을 증진시키면서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해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분단 반세기 동안 남북은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 속에서 불안정한 평화를 유지해 왔으나, 탈냉전의 세계사적 흐름과 6.15 남북공동선언 등으로 한반도에서도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도래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확고한 평화가 정착되면 한반도가 지니고 있는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구현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짐으로써,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나아가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 공동변영 실현 및 동북아 공동변영 추구’는 남북 모두의 이익을 창출·확대할 수 있도록 경제협력을 활성화시켜 나감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하고, 이를 통해 동북아 이웃국가들의 변영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반도가 지니는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남북경제공동체가 건설되면 한반도가 대륙경제와 해양경제를 연결하고 결속시켜 나갈 수 있는 교량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나. 추진원칙

평화변영정책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①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②상

호신외 우선과 호혜주의 ③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 ④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 등 4가지 추진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모든 갈등과 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원칙이다. 한반도는 불안정한 정전체제와 군사적 대치로 긴장과 갈등이 지속되어 왔으며, 동북아 지역은 세계최대의 군사력 밀집지대로 우발적인 무력충돌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한민족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전쟁도 배제되어야 하며, 무력사용은 최후 방어수단으로만 인정될 수 있다.

둘째, 상호신뢰 우선과 호혜주의 원칙이다. 남북한 및 주변 국가들이 서로를 인정하는 토대위에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신뢰 우선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역의 평화와 협력을 지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한 및 미·일·중·러 등을 포괄하는 동북아지역은 상이한 문화와 정치·경제체제를 가진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남북은 분단 반세기에 걸친 불신과 반목의 대결관계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서로를 인정하는 토대위에서 상호신뢰 우선의 원칙에 입각하여 화해와 협력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셋째,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하되 긴밀한 국제협력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원칙이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 당사자간 문제이면서도 국제적 문제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 당사자로서의 입장과 국제사회의 이해관계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평화체제 구축도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남북한이 협의하되, 주변국가의 이해관계도 동시에 고려할 때 보다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추진 원칙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국민적 합의가 결여되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고,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이 투명하지 않으면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초당적 협력을 토대로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법과 제도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함으로써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국민과 쌍방향 대화를 활성화하고 정치권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강화하는 동시에 정책추진 과정에서 투명성도 높여 나갈 것이다.

3. 추진전략

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평화변영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안보현안인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긴요하다. 북한 핵문제는 7천만 민족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일 뿐 아니라 민족의 공동번영을 가로막는 중대한 장애물이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나가는데 필수불가결하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하에서 △북한 핵 불용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한국의 적극적 역할 등 북핵문제 해결 3대 원칙을 견지하면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해 나가 고자 한다.

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지난 50년간 한반도 질서를 규정해 온 불안정한 정전상태가 평화상태로 전환되고, 이에 대한 남북 당사자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될 뿐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 의한 제도적 보장이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한다.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남북간 평화의 실질적 증진을 위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남북 실질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심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간 경제적 교류협력을 통하여 상호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의 수위도 그만큼 낮아지게 될 것이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이라는 경제협력이 군사·안보 분야의 협력으로 이어지면서 비무장지대의 군사적 긴장완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 그 좋은 예라고 하겠다.

경제 분야의 협력과 함께, 군사 분야에서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국방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통해 군사적 긴장완화와 관련한 조치를 협의·이행해 나가야 한다. 한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적 협력 분위기 조성차원에서 동북아 안보협력을 활성화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남북간 협력이 심화되고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어 한반도에서 평화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남북간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평화협정에는 남북 당사자간 전쟁방지와 평화관리를 위한 조치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기 전까지 남북은 현 정전협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평화체제의 구축도 기본적으로는 자주국방과 한미군사동맹을 양대 축으로 하여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 동북아 시대 추진

평화변영정책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하는 동시에 동북아의 평화변영을 위한 협력체 창설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를 평화와 번영의 중심으로 만들어 나감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반도가 지닌 지경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평화가 정착되는 가운데 남북간 경제 교류협력이 심화되어 남북경제공동체가 실현되면 한반도가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게 될 것이다. 남북경제공동체는 남북이 현재 서로 분리된 경제단위를 유지하면서도 점차 교류 협력을 증대시켜 경제를 하나로 통합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남북간 경제협력은 체제와 이념에 따른 제약이 상대적으로 낮고 상호 보완성이 높다는 점에서 공동체 건설이 비교적 용이할 뿐 아니라 타 분야 공동체 건설을 촉진시킬 수도 있다.

한편 세계경제의 지역화, 블록화 추세에 따라 동북아지역에서도 국가들 간 경제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발전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역내 국가간 안보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동북아 국가들간 경제·안보분야에서의 협력 수준이 높아지면 우리의 경제성장은 물론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동북아 경제·안보 협력과정에 북한이 참여하게 된다면 북한의 개방과 발전을 보다 안

정적으로 지원해 나가는데 유리한 구도가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북아지역 협력체를 구축하는 문제는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역내 국가들 간 경제력의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상이한 체제와 이념이 공존하고 있으며 다자간 안보협의체 구축에 대한 국가간 이해관계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4. 특징 및 의의

평화변영정책은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면서 정책의 추진방식을 개선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과 의의를 지니고 있다.

평화변영정책은 지난 정부가 추구해 온 화해협력, 평화공존, 점진적 통일 등의 대북정책 기조를 계승하고 있다. 즉 평화변영정책은 남북이 서로 체제를 인정하고 평화공존하면서 화해협력을 통해 점진적·단계적으로 사실상의 통일 상태를 실현해 나가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이전 정부에서 이루어진 「7.4 남북공동성명(1972.7.4)」,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1992.2.19)」(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2000. 6.15)」 등 기존의 남북간 합의도 여전히 유효하다.

평화변영정책은 기존 대북정책에 비해 정책의 내용과 외연이 확대되고, 경제와 안보분야 진전의 균형을 중시하고 있다. 과거 대북정책은 남북관계에 중점을 두고 정책의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평화변영정책은 남북관계를 넘어 동북아까지로 정책 시야를 확대했을 뿐 아니라 군사 안보분야의 진전도 중요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외교·안보정책의 유기적인 연계와 조화를 중시한다. 특히 한반도에서 동북아로 정책 시야를 넓힘으로써 남북관계 발전 및 한반도 평화의 당위성을 동북아 차원의 평화와 번영의 관점으로 확대함으로써 동북아속에서 한반도의 위상과 발전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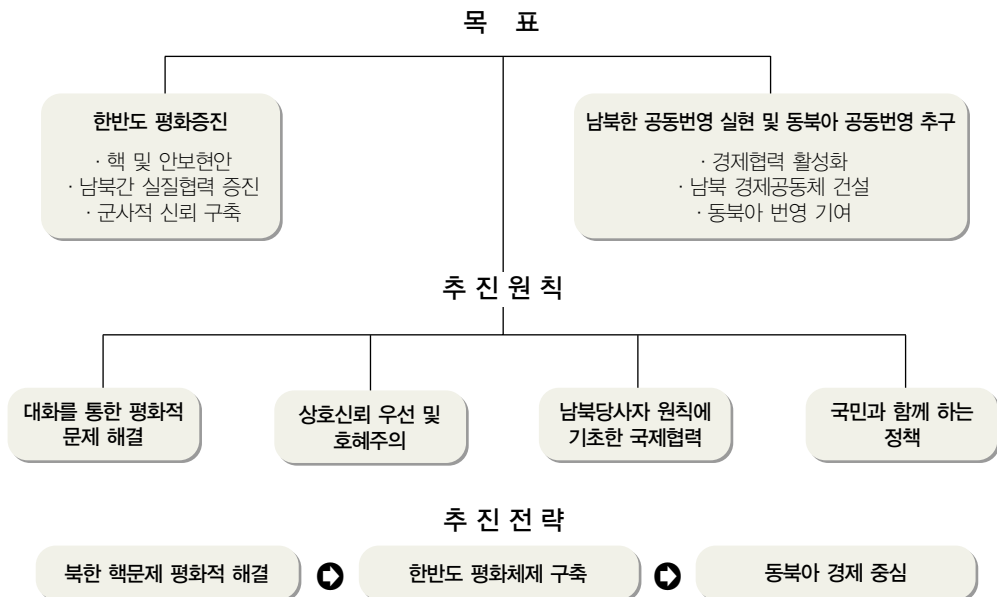
또한 평화변영정책은 남북 경제협력의 성과가 군사 분야의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으로 이어지고, 군사 분야의 진전이 경제협력을 더욱 촉진시키는 구도를 지향하

고 있다. 즉 군사 안보분야의 긴장해소와 경제협력 확대의 효과가 서로 상승작용을 불러일으키는 방향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려는 것이다.

한편 평화변영정책은 정책의 추진방식과 관련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투명한 정책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투명성과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는 정책추진에 대한 정당성과 추진력을 확보해 줄 뿐 아니라 대북 협상력을 높이는데도 도움을 준다. 나아가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평화변영정책은 한반도에서 확고한 평화 정착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경험의 심화 확대를 통해 남북경제공동체 구축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남북 공동변영을 실현한다는 남북협력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동북아 지역에서 갈등의 장이었던 한반도를 지역평화의 축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평화와 변영의 동북아 시대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점도 큰 의의라고 할 수 있다.

【 평화변영정책의 체계 】



제3절 평화번영정책의 성과

참여정부는 북핵 문제, 이라크 전쟁 등 국제적 불안요소와 한반도 안보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속에서 출범하였다. 어려운 대내외 상황속에서도 참여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의 구현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당면 안보현안인 북핵 문제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여건 조성에 주력하는 한편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노력도 병행함으로써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왔다. 또한 남북 실질협력관계를 심화·발전시키고 북한의 의미있는 변화를 촉진하였다. 이와 함께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였다.

1.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추진

2002년 10월 다시 대두된 북핵 문제는 우리의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인 동시에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정부는 ①북한이 어떠한 경우에도 핵을 보유해서는 안되며, ②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북핵문제를 근원적·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원칙과 함께, ③북핵 문제의 직접적 당사자로서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확고한 3원칙 아래 북핵 문제의 조속하고도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함께 남북대화 채널을 통해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을 적극 전개해왔다.

우리 정부와 유관국들의 노력으로 2003년 4월 북경에서 미국, 중국, 북한이 참가한 가운데 3자회담이 개최되어 다자대화의 과정이 시작되었다. 이를 기초로 2003년 8.23~27간 북경에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남·북한이 참여하는 제1차

6자회담이 개최되었으며, 이후 2차례의 6자회담(2차 6자회담 : '04.2.25~28, 3차 6자회담 : '04.6.23~26)과 2차례의 실무그룹회의가 진행되었다. 총 3차례 개최된 6자회담을 통해 회담 참가국들은 △한반도 비핵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포괄적·단계적 해결 등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원칙에 합의를 이루었다.

6자회담 진행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주요 사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구상을 제시함으로써 참여국간 논의의 기초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논의와 의견 접근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적극 경주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남북대화를 통해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도 지속해왔다. 특히 2002년 10월 북핵 문제 대두 이후 총 7차례 개최된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우리측은 북측에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가감없이 전달하고,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태도전환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다. 남북대화를 통한 대북 설득은 6자회담에 북한이 호응해 나오는데 기여하는 등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유용한 채널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북핵문제로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된 상황에서 2003.5~7월 미국·일본·중국 방문 등 일련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확고히 정립하였다. 한·미 정상회담('03.5.14)에서 양 정상은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병행이라는 절충점을 도출함으로써 핵상황의 악화와 군사적 긴장을 막을 수 있었다.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미 관계 악화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었다. 제4차 6자회담 개최를 앞두고, 북한이 대화에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2004년 하반기에는 APEC 계기 한·미 정상회담('04.11.20) 등 6자회담 참가 5개국간 양자 정상회담(11.19~20), ASEAN+3 계기 한·중·일 3국 정상회담(11.29) 등 일련의 정상외교를 통해 △북핵 불용,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의 전략적 결단 필요성, △6자회담 조기재개 필요성 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었다. 특히, APEC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를 한·미간 최우선 과제로 다루어 나가기로 합의하였고, 6자회담 틀 내에서 평화적·외교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6자회담 과정이 지속되고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한·미·일 공조와 더불어 중·러 등 회담 참가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남북대화를 통해 6자회담 진전을 촉진해 나가는 등 적극적 역할

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2. 한반도 평화정착 기반 조성

참여정부는 출범과 함께 평화변영정책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는 불안정한 정전체제 하에서의 상호 불신과 대결로 인한 남북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남북관계를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당면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과 함께, 남북간 교류협력을 심화·확대시켜 나가면서 이러한 성과가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즉, 경제와 안보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정착의 기반을 조성해 온 것이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남북간 교류협력이 진행되면서 오랜 시절 분단과 대결의 상징이던 군사분계선이 남북간 교류와 협력이 일상화 되는 공간으로 변모되고 있다.

북한이 그간 소극적 태도를 보여오던 군사분야에서도 중요한 진전을 이룩하였다. 남북은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2004.2.6)에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남북교류협력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기존의 남북군사실무회담과는 별개로 쌍방 군사당국자간 회담을 개최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두 차례의 남북장성급군사회담(2004.5.26 금강산, 6.3~4 설악산)을 개최하였고 남북은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한 바있다.

이는 분단 이래 처음으로 이루어진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한반도 평화정착은 남북간의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통해 실현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합의는 한반도 평화정착의 기반 조성에 있어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3. 남북관계의 진전과 북한의 변화

참여정부 들어 남북대화와 남북 인적·물적 교류는 더욱 확대되는 추세이며, 개성공단 건설,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 등 3대 경협사업은 제도화 단계에 진입하였다.

남북대화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2004년말까지 총56회 개최되었으며, 합의서 채택 건수가 44건에 이르고 있다. 대화의 분야도 다양해지고, 회담의 내용도 점차 구체화, 전문화되는 등 실질 대화가 증대되었다. 회담 장소도 개성, 문산, 금강산, 설악산 등으로 확대되었다.

남북간 인적왕래도 점차 확대되어 2002년에는 13,877명이었던 왕래인원이 2003년에는 16,303명으로, 2004년에는 2만명을 돌파, 26,534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북을 오갔다. 남북간 교역액도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남북경제협력도 3대 경협사업을 중심으로 꾸준히 진전되어 제도화 단계에 들어섰다. 개성공단은 2003.6.30 착공식을 개최한 이후 1년만인 2004.6.30 시범단지 부지조성공사가 완공되어 2004.12.15 첫제품이 생산되었다. 경의선·동해선 도로는 2004.11 연결공사를 완료하였고, 철도는 2005년 연결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중이다. 금강산 관광도 2003년 9월 육로관광이 실시되면서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참여정부 들어 총4차례의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해 총 3,767명의 이산가족이 상봉하였다. 또한 2003.11 제5차 적십자회담을 통해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우리측이 전담 건설·운영하기로 합의하여 이산가족 상봉을 보다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정부는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비료를 지원하고 식량차관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2004년 발생한 용천 재해를 복구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총 648억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한 바 있다.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한 위와 같은 정부의 꾸준한 노력은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것으로 평가된다.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 조치 이후 최근 북한에서는 경제·사회·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실리·실력·실적(三實主義)¹⁾이 중시되는 사회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적으로 부족한 물자 공급·유통 확대를 위해 시장기능을 강화하고 인센티브 제 등 시장경제적 요소가 도입·확산되고 있으며, 사회·문화적으로는 주민들 사이에 실용주의적 가치관과 시장경제 마인드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정치·사상적 측면에서는 당·정 간부의 세대교체 추진 및 실무중심의 경제분야 인사 기용, 실리사회주의 개념 도입 등 체제내적·미시적 변화의 움직임이 있지만 우리식 사회주의·선군정치를 내세우면서 기존 사회주의의 체제유지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은 향후 물가상승, 재정적자 증가, 사상해이 등 문제점 때문에 개혁·개방의 속도와 범위를 일시적으로 조절할 가능성은 있으나, 변화의 흐름 자체를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국·베트남의 경우에도 개혁·개방과정에서 물가상승 및 부정부패 확산 등 부작용으로 인해 개혁·개방이 일시 후퇴한 바 있으나 각각 남순강화('92년, 중국), 도이모이('86년, 베트남)를 통해 개혁·개방을 본격화한 바 있다.

따라서, 북한의 각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변화는 양적·질적으로 확대·심화되고 제도화 과정을 겪으면서, 변화의 불가역적 특성에 따라 궁극적·장기적으로 전 분야의 「근본적인 변화」로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북한의 변화는 체제생존을 위한 북한 스스로의 자구노력과 함께 우리의 일관된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복합적 작용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대북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 강화

참여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평화변영정책의 추진 원칙중 하나로 삼아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노력해 왔다.

우선, 정부는 정책추진의 대내외적 투명성을 강화해 왔다. 즉,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 대북접촉 과정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법과 제도에 따라 추진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1) 김정일 당 총비서 추대 6돌 기념 중앙보고회('03.10.7)에서 최태복(최고인민회의 의장)은 '경제면에서는 정보 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實利를 중시하고 實力과 實績으로 당을 받들 것(3實)'을 촉구하였음.

아울러 평화변영정책이 정치권의 광범위한 이해와 협조 속에 추진될 수 있도록 여·야당 및 국회와의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힘써 왔다. 주요 정책에 대해 수시로 국회 상임위원회와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등에 보고·협의하고, 여당은 물론 야당측에도 설명하고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대북·통일정책이 초당적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사·수렴하고, 정부와 국민간에 상호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왔다. 각종 위원회와 자문기구 등을 통해 민간 전문가의 참여기회를 넓히고, 「열린 통일포럼」, 「장관-정책고객과의 대화」 등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장을 마련하여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추진에 힘썼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 및 북한실상,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 등에 대해 국민들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통일교육과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남북관계와 국민의식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과 방향을 정립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홍보활동을 통해 대북정책 및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해 오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남북 정상회담 이후 급속히 진전된 남북관계 속에서 빚어졌던 우리 사회 내부의 이른바 ‘남남갈등’과 ‘퍼주기’ 논란 등이 많이 해소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됨으로써 정책 추진과정에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은 적지 않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제2장

남북회담의 진행



제1절 남북회담 추진현황

제2절 장관급회담

제3절 군사분야 회담

제4절 경제분야 회담

제5절 사회문화분야 회담

제2장 남북회담의 진행

제1절 남북회담 추진현황

정부는 남북대화를 통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입장에서 장관급 회담을 중심으로 경제, 군사, 체육, 적십자 등 여러 분야의 회담을 개최하였다. 2004년도에는 총 25회(연61일)의 회담을 개최하여 19건의 합의문건을 채택하였다.

북핵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대화는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진전을 병행해 나간다는 원칙에서 접근하였다.

정부는 6자회담을 통해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북핵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북한에 전달하고 태도 변화를 촉구하였다.

2004년도에는 무엇보다 경제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의 발전과 함께 군사분야에서의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를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장관급회담에서 두 차례의 합의끝에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하여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 및 군사분계선상 선전활동 중지 방안을 합의하고 시행하게 됨에 따라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초보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주요 경협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안정적인 경협 추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보장조치도 강화하였다.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와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하여 남북간 원활한 왕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04년도 청산결제합의서」를 채택하여 청산결제 시행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개성공단 건설,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개통 일정 등 주요 경협사업 추진을 협의하였으며, 민간기업 대북투자 상담 등 대북경협시 편의제공을 도모하기 위해

개성공단 내에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합의하였다.

인도·사회분야 회담도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용천재난구호회담을 개최하여 재해복구에 필요한 긴급구호품과 복구용 자재장비를 지원하였으며, 적십자 실무접촉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생사·주소 확인 및 서신교환 확대 등을 협의하였다. 아테네올림픽 공동입장을 위한 실무접촉에서는 공동입장에 필요한 실무적인 문제들을 논의하였다.

이외에도 남북간 사회문화분야의 별도 협의체인 남북사회문화분과회의의 구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북한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성사되지 못했다.

2004년도 남북회담은 전문화·실무화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졌으며, 또한 남북간 현안에 대한 구체적, 실질적인 협의체로 자리잡아 가고 있었다.

그러나 7월이후 남북관계가 소강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남북당국간 회담도 중단되었다.

북한은 7월8일 김일성 10주기 민간 추모대표단의 방북이 무산된데 대해 우리 정부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7월 13일부터 예정되어 있던 「제5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 개최를 거부하였다. 또한, 7월 19일 예정되어 있던 「장성급군사회담 제3차 실무대표회담」 개최 제의에 대해서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음에 따라 회담이 열리지 못했다.

이어서 7월 21일 북한인권법의 미국 하원 통과, 7월 27일과 28일의 대규모 탈북자(468명) 입국 등 북한 입장에서 볼 때 다소 민감한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였다. 북한은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예정되어 있던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8.3~6)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8.31~9.3)을 무기한 연기시켰다.

그러나 남북회담이 중단된 상황에서도 남북경협, 민간급 사회문화교류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남북관계의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과거와는 달랐던 남북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남북회담 개최현황 】

구 합	분 계	합 계	2000	2001	2002	2003	2004
		131	27	8	33	38	25
정상회담관련 (13)	남북정상회담	1	1				
	남북특사접촉	4	4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	5	5				
	통신 보도 실무접촉	2	2				
	의전 경호 실무접촉	1	1				
장관급회담관련 (15)	장관급회담	14	4	2	2	4	2
	실무접촉	1			1		
군사분야 (31)	남북국방장관회담	1	1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접촉	10	3	2	3	2	
	남북군사실무접촉	10			6	4	
	군사통신실무자접촉	1			1		
	동해선통신선연결실무접촉	2				2	
	장성급 군사회담	2					2
	장성급 실무대표회담, 수석대표접촉	3					3
	장성급 군사통신실무접촉	2					2
경제분야 (50)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9	1		2	4	2
	남북경제협력실무접촉	2	2				
	금강산관광활성화당국회담	2		1	1		
	철도 도로연결실무협의회	4			1	2	1
	남북철도 도로연결실무접촉	10			3	5	2
	임남댐 공동조사실무접촉	1			1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2			1		1
	개성공단건설실무접촉	1			1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3		1	1		1
	남북전력협력실무협의회	1		1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	4			2	1	1
	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	1				1	
	청산결제실무협의	3				1	2
	청산결제거래위한 은행접촉	2					2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4			1	3	
	경제협력제도실무접촉	1					1
인도분야 (15)	남북적십자회담	5	2	1	1	1	
	남북적십자실무접촉	6			2	3	1
	면회소건설추진단회의	3				3	
	용천재난구호회담	1					1
체육분야 (4)	아시아경기대회참가실무접촉	2			2		
	U대회참가실무접촉	1				1	
	아테네올림픽공동입장실무접촉	1					1
	남북특사회담(3)	3	1		1	1	

제2절 장관급회담

남북장관급회담은 2000년 7월부터 개최되어 총 14차례 개최되었다. 장관급회담은 남북간 제반 현안문제들을 협의, 해결하는 중심적 협의체로서 분야별 회담에서 합의된 사항들의 이행을 총괄·조정하고 지원해나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04년에는 남북간 현안 문제 이외에도 북한 핵문제 해결에 주력하였으며,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성사시켜 경제분야와 군사분야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초보적 조치를 이루었다.

1.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제13차 장관급회담은 제12차 회담(2003.10.14~17)에서 합의한대로 2004년 2월 3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제13차 회담에 참석한 북한측 대표단에 일부 교체가 있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정세현(통일부 장관)	김령성(내각 책임참사)
대 표	김광림(재정경제부 차관)	최영건(건설건재공업성 부상)
	오지철(문화관광부 차관)	신병철(내각참사)
	신언상(통일부 실장)	전종수(조평통 서기국 부장)
	서영교(통일부 국장)	김준근(민경련 서기장)

제13차 회담은 2004년 들어 처음으로 열린 고위회담인 만큼 한 해의 남북관계 추진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내외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우리측은 한반도 평화증진과 남북관계의 내실 있는 발전을 2004년도 남북이 함께 추구해야 할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우리측 구상을 밝혔다.

무엇보다도 먼저 핵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야 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강조하였다.

또한 남북관계의 내실있는 발전을 위해 진행중인 경협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며, 정치군사 분야의 신뢰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제의하였다.

아울러 구체적인 과제로 △3대 경협사업의 착실한 추진, △문화재 보존 및 고대사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 △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의 구성·운영, △이산가족상봉 문제, △군사적 신뢰구축을 본격 협의하기 위한 장성급군사회담 개최 등을 제시하였다.

북한측은 제13차 회담이 올해 남북관계의 전도를 가늠하게 되는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는 점을 지적하며 회담에 임하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동결 대 보상」 제안 등 기존 입장을 반복하였다.

또한 남과 북이 우리 민족제일주의를 공동의 정신적 기둥으로 삼고, 쌍방 당국 간 공조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며 남북경제협력을 당국이 책임지고 진척시켜나갈 것을 주장하였다.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사업 등이 북측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은 미국의 압력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밖에도 우리나라 국호 영문표기(COREA)문제를 2004년중 UN에 남북이 공동으로 제의하는 문제, 남북해운합의서 발효문제, 전연지대 비난방송 중지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남북은 수 차례의 수석대표 접촉과 실무대표 접촉을 통해 북한 핵문제와 관련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제2차 6자회담이 결실있는 회담이 되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군사당국자 회담의 조기 개최, 제9차 이산가족 상봉 실시 등에 합의하고 6개항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개성공단의 1단계 100만평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2004년 상반기 중에 1만평 규모의 시범단지를 개발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이밖에 임진강수해방지사업, 해운합의서 발효 문제, 상대방에 대한 방송중지문제 등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공동보도문 요지)

-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제2차 6자회담이 결실있는 회담이 되도록 협력
-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쌍방 군사당국자회담 조속 개최
- 조속한 시일내에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 금년 상반기중에 1만평 규모의 시범단지를 개발하도록 적극 협력
- 임진강수해방지사업, 해운합의서 발효문제, 상대방에 대한 방송중지 문제 등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를 계속 협의
- 제9차 이산가족 상봉을 2004년 3월말 금강산에서 실시
- 제14차 장관급회담을 2004년 5월4일부터 7일까지 평양에서 개최

2.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

제13차 장관급회담 이후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무엇보다도 제13차 회담에서 어렵게 합의한 군사당국자회담이 북한의 무반응으로 개최되지 못했으며, 북한측이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우리들의 정국불안을 이유로 회의장소 변경을 고집함에 따라 경제분야 실무회담들이 제때 열리지 못하고 몇 차례 연기되었다.

한편 북한 용천역 폭발사고(4.22)에 대한 우리측의 신속한 지원과 북한측의 사

의표명은 회담 전망을 밝게 하였다.

여러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제14차 장관급회담은 당초 합의대로 5월 4일부터 7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으며, 북한측 단장이 권호웅 내각참사로 교체되었다.

우리측은 우선 제13차 회담에서 합의한 장성급군사회담이 예정대로 개최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제14차 회담에서는 개최 날짜를 반드시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제3차 6자회담에서 반드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합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북측이 적극적인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를 내실있게 발전시키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필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

요한 추진 과제로서 △원활한 남북경협을 위한 협력방안, △질서있는 민간교류 지원문제, △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 구성·운영문제, △제10차 이산가족 상봉과 면회소 조기

건설 문제 등을 제기하였다.

북한측은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한미합동 군사연습이 우선적으로 중지되어야 하며, 이지스함의 동해배치 계획도 철회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특히 상대방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북한측은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이 시작한 인터넷 라디오 방송의 즉각 중지 등 상대방을 향한 방송 중지문제 등을 제기하였다.

남북은 수 차례 수석대표접촉, 실무대표접촉 등을 통해 제1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의 구성 문제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어려움없이 의견접근을 이루었다.

그러나 장성급군사회담 개최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북한측은 장성급군사회담이 장관급회담 소관 밖의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우리측은 장성급군사회담 개최 약속 이행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북한측의 확고한 의사표명 없이는 다른 합의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대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이 끝까지 장성급군사회담 개최를 거부함으로써 남북은 차기 장관급회담 일정만 합의하고 일단 회담을 종료했다.

그러나 북한측은 우리측 대표단의 귀환 직전에 긴급회담을 제의하면서 장성급군사회담 개최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

이로써 남북은 군사당국자회담을 개최하고, 그 밖에 앞으로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공동보도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6월 20일경 제1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실시하고, 6자회담에서 핵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협력해나가는데 대해서도 의견 접근을 이루었다.

(공동보도문 요지)

- 쌍방 군사당국자 회담 개최
- 앞으로 쌍방이 제기하는 사항들을 계속 협의
- 제15차 장관급회담은 8월3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

제3절 군사분야 회담

제13차 장관급회담('04.2.3~6)에서 군사당국자회담 개최에 합의하였으나, 북측이 우리측의 회담 개최요청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제14차 장관급회담('04.5.4~7)에서 다시 군사당국자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게 되었다.

이후 북한이 5월 26일 금강산에서 남북장성급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고, 우리측이 이에 동의함에 따라 제1차 회담이 개최되었다.

남북은 두 차례의 장성급군사회담과 한 차례의 실무대표회담을 통해 서해상의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방안과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 방안에 대해 합의하였다.

그 결과 6월 15일부터 서해에서 남북 함정간에 유선·무선 통신망 및 시각신호를 사용하였으며,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상호 선전활동을 중지하고, 선전수단 제거 작업을 시작하였다.

1.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가. 제1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및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북한측은 5월 12일 남북군사실무회담 단장

명의를 대남통지문을 통해 5월 26일 금강산에서 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고, 우리측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제1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이 개최 되었다.

【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박정화(국방부 해군준장)	안익산(인민무력부 소장)
대 표	임인수(국방부 대령)	유영철(인민무력부 대좌)
	문성묵(국방부 대령)	김상남(인민무력부 대좌)
	정영도(국방부 대령)	배경삼(인민무력부 상좌)
	배광복(통일부 과장)	박기용(인민무력부 상좌)

우리측은 서해상에서의 우발적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으로 남북 서해함대사간 직통전화 설치·운영, 경비함정간 공용주파수 설정·운영, 시각 신호 제정·활용, 불법 어로행위 단속활동 관련 정보 교환 등 4가지를 제시하였다.

특히 매년 꽃게잡이철이 되면 서해상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본격적인 꽃게잡이철이 시작되기 전에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 방안을 우선 협의·조치할 것을 강조하였다.

북한측은 서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 조치와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선전활동을 중지하고 그 수단들을 제거할 것을 주장하였다.

쌍방은 입장 차이로 인해 1차 회담에서는 합의 도출이 어려운 만큼, 일단 쌍방이 제시한 방안을 검토한 후에 6월 3일 설악산에서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하여 협의를 계속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나.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은 제1차 회담의 합의에 따라 6월 3일~4일 설악산에서 개최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제1차 회담에서 쌍방이 각기 제시한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

조치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다.

우리측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4가지 충돌방지 조치에 대해 우선 합의하여 6월 15일부터 실시할 것을 제의하였다.

북한측은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 조치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공감을 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측과 차이를 보였으며, 1차 회담에서 제기한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해서 일정과 대상 등을 구체화한 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북한측은 서해상의 새로운 해상경계선 설정 문제를 다시 언급하였으나, 우리측은 북방한계선은 현재 남북 쌍방 모두 지난 50여년간 준수해 온 해상 경계선임을 분명히 하고, 북방한계선을 인정하는 가운데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의사소통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설득하였으며 그 결과 북한측은 더 이상 새로운 해상경계선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집하지 않았다.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 조치 합의 후, 쌍방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해 협의를 진행하여 선전활동 중지 시기, 선전수단 제거 범위 및 일정, 제거결과에 대한 이견 해소방법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

쌍방간 이견이 해소되고 문안조정이 완료됨에 따라 남과 북은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를 서명·발효시키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합의서 요지)

- 쌍방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
- 서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6월 15일부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함
 - 국제상선공통망(156.8MHz, 156.6MHz)을 활용
 - 보조수단으로 기류 및 발광신호 규정을 제정
 - 불법조업선박의 동향과 관련한 정보를 상호교환
 - 8월 15일까지 현재의 서해지구 통신선로를 남북관리구역으로 따로 늘여 각기 자기 측 지역에 통신연락소 설치
-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
 - 6월 15일부터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방송과 게시물, 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활동을 중지
 - 8월 15일까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모든 선전수단을 3단계로 나누어 제거
 - 1단계(6.16~6.30) :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001호~제0100호
 - 2단계(7. 1~7.20) :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100호~제0640호
 - 3단계(7.21~8.15) :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640호~제1292호
 - 상대방측의 선전수단 제거결과를 자기측 지역에서 감시하여 확인하되 필요에 따라 상호검증
 - 어떠한 경우에도 선전수단들을 다시 설치하지 않으며 선전활동도 재개하지 않음.

2.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회담

가.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제1차 실무대표회담

6월 4일 합의서가 발효됨에 따라 동 합의서에 나타난 긴장완화 조치들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실무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제1차 실무대표회담이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개성에서 진행되었다. 남과 북은 세부적인 절차에 관해 다소 의견차이를 보였으나 11차례에 걸친 접촉을 통해 서로 양보함으로써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문성묵(국방부 대령)	유영철(인민무력부 대좌)
대 표	권용술(국방부 대령) 오남섭(국방부 대령)	배경삼(인민무력부 상좌) 엄창남(인민무력부 상좌)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 방안과 관련하여 북한측은 통신수단 사전 시험운용, 불법 조업 선박 동향 정보교환 1일 1회 실시 등에 대한 우리측 요구를 수용하였으며, 북한측이 제의한 통신시 감도상태 확인과 8월 12일 통신연락소간 시험통화 실시에 대해서는 우리측이 수용하였다.

선전수단 제거와 관련하여 우리측은 상대측 지역에서 보이거나 들리지 않도록 하자는 원칙을 명기하자는 북한측의 제의를 수용하고, 북한측은 제거목록 사전교환 및 제거결과 확인을 위한 실무대표회담을 개최하자는 우리측 제의를 수용하였다.

아울러 쌍방은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새로운 통신선로와 통신연락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6월중 통신실무자접촉을 통해 협의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남북은 이러한 합의내용을 중심으로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의 부속합의서」를 채택하였다.

(합의서 요지)

-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 조치 문제
 - 국제상선공통망(주 156.8MHz, 보조 156.6MHz)을 활용, 해당 해역에 일방의 함정이 두척 이상 있을 경우 지휘 함정들 사이에만 교신
 - 보조수단으로 기류 및 발광신호 규정을 제정
 - 불법조업 선박의 동향과 관련한 정보(시간, 위치, 척수)를 1일 1회 교환
 - 8월12일 새로운 통신선로 연결 및 시험통화 실시
 - 6월 14일 통신수단별 운영시험 실시
-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
 - 6월15일 0시부터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방송과 게시물, 전광판, 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활동과 풍선, 기구를 이용한 각종 물품 살포를 중지
 - 제거대상의 범위는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체제선전 및 상대측이 비방, 중상, 선동으로 인식하는 모든 확성기, 돌글씨, 입간판, 전광판, 전단, 선전그림, 선전구호 및 글 등을 포함
 - 단계별 제거완료 7일 이전에 제거대상 목록을 교환하여 제거 결과를 검증
 - 육안검증을 원칙으로 하되, 의문시 통지문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며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실무대표회담을 통해 협의 조정
 - 매 단계별로 선전수단 제거완료 1일전 실무대표회담을 열고 그 결과를 최종확인후 다음 단계 제거작업을 시작

나.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제2차 실무대표회담

남북장성급군사회담 합의서에 따라 남북은 6월 14일 공용 통신망 및 기류·발광신호 시험 운용을 실시하였으며, 6월 15일부터 군사분계선 전 지역에서 선전활동을 모두 중지하고, 6월 16일부터 1단계 지역에 대한 선전수단 제거 작업에 착수하였다.

부속합의서에서 ‘매 단계별로 선전수단 제거완료 1일전 실무대표회담을 열고 그 결과를 확인한 후 다음 단계 제거작업을 시작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1단계 제거작업을 확인하기 위해 6월 29일 파주에서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제2차 실무대표회담을 개최하였다.

남북은 짧은 기간에 1단계 지역에 대한 선전 수단 제거작업을 성실하게 진행한 데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8차례의 수석대표 접촉을 통해 제거 대상과 제거 결과에 대한 확인작업을 진행하여 대부분의 사항에 합의하였다.

일부 의견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7월 5일 개성에서 실무대표회담 수석대표 접촉을 개최하여 모두 해결하였으며, 7월 6일부터 2단계 지역에 대한 선전수단 제거 작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한편 제2차 실무대표회담에서 우리측은 서해상의 우발적 충돌방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북측에 제의하였다.

3. 남북장성급군사회담 통신실무자접촉

남북장성급회담 합의에 따라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새로운 통신선로와 통신연락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6월 25일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도로연결 지점에서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제1차 통신실무자 접촉을 진행하였다.

우리측은 합의서에 명시된 대로 통신연락소가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 문제와 관련한 연락사항만을 담당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측은 남북간 통행관련 연락업무 및 남북 관리구역내 작업과 관련한 연락사항도 함께 맡을 것을 주장하였다.

6월 29일 이루어진 제2차 접촉에서 북한측은 우리측 입장대로 기존의 현장 군사상황실간 통신선로와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새로운 통신선로가 기능상 서로 분리된다는 점을 수용하였고, 우리측은 자재지원 등 통신선 연결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제4절 경제분야 회담

2004년에도 정부는 당국간 경험 논의를 통해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일관된 방침하에 남북 당국간 경제분야 회담을 꾸준히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4년 1월부터 제1차 경제협력제도 실무접촉과 제1차 청산결제 실무협의를 시작되어 제8·9차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개최되는 등 2004년 상반기에만 총 13회의 남북 당국간 경제회담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2004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북한측은 조문불허, 새터민 대량 입국 등을 이유로 남북 당국간 접촉에 응해오지 않아 2004년 8월 31일부터 열리기로 예정되었던 제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무산되는 등 남북 회담은 소강상태에 접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당국간 회담의 소강상태에도 불구하고 철도·도로 연결공사의 진행, 개성공단 시범단지 첫 제품 출시 등 남북간 경제협력의 모멘텀은 꾸준히 유지되어 오고 있다.

1.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남북간의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한 6.15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2000.12.12~16, 평양)에서 구성·운영에 합의함으로써 시작되었다.

2000년 12월 제1차 회담을 시작으로 2004년까지 총 9차에 걸친 회담이 개최되어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전력협력 등 남북간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현안 사항들을 논의해 왔다.

경제분야 총괄 협의체인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2004년에도 제8차 회의와 제9차 회의가 서울과 평양에서 두 차례 개최되었으나, 제10차 회의는 북한이 조문 불허 문제 등을 이유로 거부함에 따라 개최되지 못하였다.

가. 제8차 회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 합의에 따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가 2004년 3월 2일부터 5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쌍방은 개성공단건설 착공 및 철도·도로연결 문제 등 남북간 기 합의된 경제협력 현안과제들의 구체적인 이행일정을 협의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김광림(재정경제부 차관)	최영건(건설건설공업성 부상)
대 표	박흥렬(통일부 교류협력국장) 전병성(건설교통부 수자원국장) 김호홍(국무총리실 심의관) 김경중(건설교통부 남북교통과장)	조현주(민족경제협력연합회 참사) 박정성(철도성 대외철도협조국장) 박성희(전기석탄공업성 부국장) 최현구(삼천리총회사 총사장)

개성공단 건설과 관련하여 북한측은 2004년 상반기안에 1만평 규모의 시범공단 부지를 조성하여 생산에 착수하고, 2004년 안에 1단계 100만평 개발구역에 대한 하부구조 건설도 완료하자고 하였으나, 우리측은 물리적·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득하고 토지임차료, 지장물철거보상비 등을 우선 합의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 결과 상반기안으로 1만평 시범단지 부지조성이 완료되는 대로 기업들이 생산에 착수하도록 하고, 1단계 100만평 내부 기반시설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전력·통신 등도 상업적 방식으로 적기에 공급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철도·도로 연결과 관련해서는 우리측이 6.15공동선언 발표 4주년을 기념하여 경의선 도로를 우선 개통하자고 제의한데 반해 북한측은 2004년안에 동해선 온정리~저진 사이, 서해선 개성~문산 사이 철도 시범운행을 진행하고, 동·서해선 도

로포장을 상반기 안으로 끝내자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측은 북한측의 의견을 수용하여 우선 2004년도 내에 철도 시범운행을 진행 하되, 경의선·동해선 도로포장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임진강수해방지 사업의 4월 착수, 남북경협협약사무소 개설 등 7개항에 합의하고, 공동보도문을 발표함으로써 회담을 종료하였다.

(공동보도문 요지)

- 개성공단 개발
 - 상반기안으로 1만평 시범단지 부지조성이 완료되는 대로 기업들이 생산에 착수
 - 1단계 100만평 내부 기반시설 적극 추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업입주
 - 전력·통신 등을 상업적 방식으로 적기에 공급하도록 노력
- 철도·도로 연결
 - 올해안에 경의선(개성-문산), 동해선(온정리-저진) 구간에서 철도시범운행 진행, 경의선·동해선 도로포장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완료
 - 철도개통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분계역사 설계 및 기자재 제공협력 문제 협의
- 금강산관광특구개발계획을 빠른 시일안에 확정, 하위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적극 협력
- 상반기 안으로 직거래 확대를 위한 경협협약사무소를 개성공단개발사무소와 동시에 개설·운영, 민간차원의 경협활성화에 적극 협력
- 임진강 수해방지 합의를 문서교환 방식으로 채택, 4월부터 현지조사 착수
- 남북경제시찰단 북측 방문, 북측경제실무시찰단의 남측 방문이 적절한 시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를 6월 2일부터 5일까지 평양에서 개최

나. 제9차 회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는 제8차 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2004년 6월 2일부터 5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제9차 회의는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6.3~4, 설악산)과 동시에 열리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컸다.

제9차 회의에서는 북한측 대표단 박성희(석탄공업성 부국장)가 윤선호(무역성 국장)로 교체되었다.

남과 북은 제8차 회의에 이어 제9차 회의에서도 개성공단 및 철도·도로 건설일정 등 구체적인 경협 추진일정에 합의하였다. 쌍방은 개성공단 통신 공급문제와 관련하여 입장차이가 있었으나 문산-개성전화국-공단통신센터간 광케이블로 연결하는데 합의하고, 여전히 의견차이가 있는 세부적인 사안들은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에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철도·도로 개통과 관련하여 우리측은 공사가 완료된 경의선 도로를 우선 개통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북한측은 동·서해선 동시추진·동시개통을 제안함에 따라 협의과정을 거쳐 경의선·동해선 도로는 2004년 10월에 개통하고, 철도는 2004년 10월 시범운행후 2005년말에 개통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북한이 쌀 지원 문제를 공식 제기함에 따라 우리측은 같은 날 설악산에서 진행된 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해상 무력 충돌방지 방안에 합의하는 등 남북관계 진전상황을 감안하여 쌀 40만톤을 차관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남북경협협회사무소를 민관합동으로 구성하고, 직거래 주선 및 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의견접근을 이루었으며, 원산지증명서 발급수수료, 현지 기술지도, 선적전 검수 등 민간경협시 제기되는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합의문 요지)

- 개성공단 건설
 - 시범단지 조성공사 완료, 2004년 말까지 제품생산 착수
 - 전력·통신 등을 9월부터 상업적 방식으로 공급하도록 협조
- 철도·도로 개통
 -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구간 개통을 2005년에 동시 진행
 - 열차 시범운행은 2004년 10월경에 진행
 - 경의선·동해선 연결도로는 2004년 10월까지 개통
- 남북경제협력협약사무소 개설·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빠른 시일내에 채택·발효
- 기합의·가서명된 합의서 조속 발효절차 진행 및 후속조치 마련
- 북측에 쌀 40만톤을 차관방식으로 제공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8월31일부터 9월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

2.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접촉

2003년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되었던 남북경협제도실무협의회 제4차회의에서 개성·금강산지구 통행합의서 채택문제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함에 따라 제1차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접촉이 2004년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개성에서 출퇴근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동 회의에서는 개성·금강산지구 통행합의서 채택을 위한 신변안전보장 문제를 집중 협의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대 표	김호년(통일부 교류협력심의관) 이승섭(법무부 특수법령과장)	김춘근(민족경제협력연합회 서기장) 최정원(출입국사업국 처장)

우리측은 지구내 범질서 위반자에 대한 활동중지, 경고 및 범칙금 부과,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위반사실 통보 및 강제송환을 주장하고, 조사기간 동안 대상자의

접견권과 변호인 조력권 등의 기본적인 권리보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우리측은 강제송환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엄중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등 남북간 별도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자고 주장한 반면, 북한측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형사주권에 따라 처리하되 엄중한 주권침해 범죄를 저지른 인원은 남과 북이 별도로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쌍방은 7차례의 접촉을 통해 북한측이 법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한 후 위반 내용을 남한측에 통보하고, 위반정도에 따라 경고, 벌금, 남측 지역 추방 등의 조치를 취하며, 조사기간 동안 대상자의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남과 북이 합의하는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쌍방이 별도로 합의하여 처리하기로 하였다.

체류기간 연장승인 기관과 관련하여 북한측은 지구출입사업기관이 담당하자고 하였으나, 출입증명서가 비자로 운영되지 않기 위해서는 출입증명서 발급기관인 지구관리기관이 연장승인을 담당함이 합리적이라는 우리측 의견을 수용하여 남측당국 및 지구관리기관이 담당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체류, 출입심사, 신변안전보장 등에 대해서 최종 합의하고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합의문 요지)

- 개성·금강산 지구에 출입하는 인원은 남측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한 해당 증명서와 지구관리기관이 발급한 해당 증명서를 소지하고 통행차량 등을 이용하여 출입하며, 북측은 해당 증명서를 소지한 인원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출입을 보장
- 지구에 8일 이상 체류하는 사람은 도착일로부터 48시간 내에 체류등록을 해야 하고, 90일을 초과하는 장기체류나 1년이상 거주시 별도의 등록절차 필요
- 북측은 남측 인원의 신체·주거·개인 재산의 불가침을 보장하며, 법질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조사·통보 후 경고, 범칙금 부과 또는 추방 등 조치를 취하고, 남측은 송환된 인원을 처리한 후 결과를 북측에 통보하며, 피해보상에 협력
- 출입·체류와 관련한 문제는 이 합의서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남과 북은 관련 문제들의 협의·해결을 위해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

3. 남북청산결제실무협의를

가. 제2차 남북청산결제실무협의를

남과 북은 2004년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제2차 남북청산결제실무협의를 개성에서 진행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대 표	김웅희(통일부 교류총괄과장) 이성한(재정경제부 국제경제과장) 정진대(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장)	윤선호(무역성 국장) 진 철(국가계획위원회 국장) 최정식(조선무역은행 부국장)

청산결제 거래방식과 관련하여 우리측은 품목과 품목별 한도에 대한 당국간 합의를 토대로 개별 기업이 상업적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북한측은 당국의 책임하에 청산결제 거래를 진행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였다.

또한, 청산결제 신용한도 및 이자율과 관련하여 북한측은 당초 입장을 수정하여 신용한도를 15%로 하고, 이자율을 0.5%로 조정하였으나 이자율이 최소한 1%가 되어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과 견해차이를 좁히지 못하였다.

연말 차액잔고 청산방식과 관련해서도 북한측이 상품결제 방식으로 처리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고, 우리측은 상품결제시 결제의 편의성이 떨어지고, 차액잔고 처리가 늦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남북 양측은 쟁점사항들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차기 실무협약에서 계속 논의해나가기로 하였다.

(공동보도문 요지)

-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
- 남북 양측은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2004년 합의서와 「수출입은행과 무역은행사이의 청산결제업무에 관한 합의서」를 빠른 시일안에 채택하기 함.
- 제3차 남북청산결제 실무협의 날짜와 장소는 문서교환 방식으로 결정

나. 제3차 남북청산결제실무협의

남과 북은 2004년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제3차 남북청산결제실무협의를 파주에서 진행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대 표	김웅희(통일부 교류총괄과장) 유복환(재정경제부 지역협력과장) 김경원(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장)	윤선호(무역성 국장) 진 철(국가계획위원회 국장) 최정식(조선무역은행 부국장)

북한측은 회담초반 청산결제 거래방식, 이자율, 연말차액잔고 청산 방식 등 쟁점사항에 대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우리측 입장을 수용하여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

무엇보다 연말차액잔고 청산방식이었다. 상호 의견접근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 중 하나는 북한측이 상품결제방식을 강하게 주장함에 따라 우리측은 북한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물자반출 또는 미달러화 중 상환측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수정제의 하고 북한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타결되었다.

또한, 대상품목 선정과 관련하여 서로 희망하는 반입·반출 품목을 중심으로 선정한다는데에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북한측이 품목선정시 수량한도까지 결정하자고 주장함에 따라 난항이 계속되었다. 결국 북한은 개별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측 주장을 수용하고, 이에 따라 쌍방은 대상

품목을 제외한 내용에 대해서 합의하고, 「청산결제 거래를 위한 2004년도 합의서」에 가서명하였다.

(합의서 요지)

- 청산결제에 의한 거래는 이 합의서의 부록1과 2의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
- 청산결제에 의한 거래는 기업들간에 계약의 방식으로 진행
 - 당국이 정한 경제단체가 청산결제 거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청산결제에 의한 거래를 희망하는 기업들을 상호 통지
- 청산결제에 의한 거래기간 : 2004년도 2/4분기중 합의되는 시기~12월31일
- 청산결제한도 : 미화 3천만 달러 범위내
- 신용한도 : 청산결제한도의 15%, 이자율 : 연 1%
- 청산결제 대상품목 : 남북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위탁가공 교역은 제외)
- 2004년도 청산결제 대상품목을 문서교환 방식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협의·확정하고 이 합의서의 부록 1, 2로 첨부
- 청산결제 은행간 지급지시를 위한 통신수단으로 세계은행간 금융통신망(SWIFT)을 이용, 이 밖에 은행업무 수행을 위해 전화, 팩스 등을 이용
- 2004년도 청산결제 차액잔고를 다음해 3월 31일까지 계약방식에 의한 물자반출 또는 미달러화 중 상환측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청산하며 2004년 4/4분기내에 「남북사이의 청산결제 이행을 위한 2005년도 합의서」 체결
- 남과 북은 적절한 시기에 쌍방이 정한 장소에서 남북 기업들이 이 합의서의 대상품목에 대한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협력

다. 남북청산결제 관련 은행간 실무접촉

남과 북은 남북청산결제 관련 거래은행간 제1차 실무접촉을 2004년 5월 18일부터 19일까지 개최하고, 제2차 실무접촉은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개최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대 표	천헌철(한국수출입은행 부부장) 박유환(한국수출입은행 부부장)	최정식(조선무역은행 부국장) 오성철(조선무역은행 실무자)

은행간 협의는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은행명칭 문제, 이자계산 방법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

북한측은 합의서 명칭과 전문 서명란에 들어 있는 은행 명칭에서 각기 ‘한국’ 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분을 삭제하고, ‘수출입은행’, ‘무역은행’ 으로서 명기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자 계산 방법과 관련해서도 우리측이 복리계산과 지연 배상금을 1%를 제시한 데 대해 북한측은 단리계산을 요구하였다.

남북은 서로 입장을 양보하여 합의서 제목 등에서 은행간 공식명칭을 사용하고, 이자 계산에서도 지연 배상금 없이 단리계산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밖에도 남북은 청산결제대상, 결제기간, 결제통화, 대금지급절차 등에 대해 합의하고 「청산결제 업무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여 가서명하였다.

(합의서 요지)

- 청산결제대상 : 남북이 합의하여 정하는 매년도 청산결제거래 대상품목의 결제대금(대
상품목 거래에 수반되는 용역거래 대금 포함)
- 청산결제기간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만, 2004년도는 합의서 발효일로부
터 12월 31일까지
- 청산결제통화 : 계정 기장 및 차액잔고 지급 등의 통화 미달러화(US\$)
- 계정의 개설 : 남북청산결제은행은 각각 상대방 은행 이름의 계정(청산계정 및 이자계
정)을 자기은행에 개설, 반출입대금과 이자를 기장
- 신용한도 : 남북 당국간 합의하여 정한 연간 청산결제한도의 15% 해당 금액(2004년도
신용한도는 3,000만달러의 15% 이내인 미화 450만달러 이내)
- 대금지급 및 기장절차
 - 대금지급 절차
 - ①반출대금 청구 : 반출자 ➡ 반출자 청산결제은행
 - ②반출서류 송부 : 반출자(청산결제은행) ➡ 반입자(청산결제은행)
 - ③대기통지서 통지 : 반입자(청산결제은행) ➡ 반출자(청산결제은행)
 - ④반출대금 지급 : 반출자 청산결제은행 ➡ 반출자
 - 청산계정 기장 절차
 - 반출대금 지급일에 반입자 청산결제은행은 상대방 은행계정에 대기하고, 반출자
청산결제은행은 상대방 은행계정에 차기
 - * 대기 : 상대방 은행의 채권임을 기장
 - 차기 : 상대방 은행의 채무임을 기장
- 이 자
 - 이자계산 및 지급
 - 각각의 청산계정 기장금액에 대해 기장일로부터 실제 이자
상환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자 계산
 - 실제이자 지급할 이자가 많은 은행이 이자계정의 잔고만 상대 은행에 지급
 - 이자율 : 연 1%

○ 청 산

- 청산계정 차액잔고 및 이자는 다음해 3월 31일까지 미달러화 또는 계약방식에 의한 물자반출로 청산
 - 계약방식에 의한 물자반출 청산방식이란 차액잔고 상환측의 기업이 상대측 기업과의 개별 계약조건(품목, 수량, 가격 등)에 따라 차액잔고에 해당하는 물자를 반출하면, 상대측 청산결제은행이 반입물자에 대한 대금을 반입기업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차액잔고와 이자를 상계하는 방식
- 다음해 청산결제업무는 전년도 청산계정 차액잔고 및 이자를 청산한 후에 시행

○ 코레스협정 체결

- 합의서 이행을 위해 남북 청산결제은행간 코레스협정을 합의서 서명 후 체결

○ 통지·송부

- 은행간 지급지시를 위한 통신수단으로 세계은행간 금융통신망(SWIFT)을 이용, 은행 업무 수행을 위해 전화, 팩스 등도 이용

4.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 합의에 따라 개성공단 전력·통신 공급문제와 통신·통관·검역 부속합의서 채택 등을 협의하기 위해 2004년 6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개성에서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박흥렬(통일부 교류협력국장)	최현구(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대 표	김성수(건설교통부 입지계획과장) 이상훈(정보통신부 협력기획과)	김인철(체신성 전기통신국장) 박성일(세관총국 심의원) 최정남(중앙위생검역소 소장) 전승주(체신성 과장)

개성공단 통신공급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측은 남측 사업자가 설비를 제공하고 북한측이 운영하여 이익을 배분하는 합작방식을 주장하면서 통신망 연결은 개성전화국에 전송장비를 설치하는 방식을 주장하였다.

반면 우리측은 통신은 남측의 지정사업자가 상업적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기 합의사항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공단내 통신망은 우리측 사업자가 단독 설치·운영하되, 북한측 구간(MDL-개성전화국-공단경계)은 우리측 설계·기술지원 조건으로 북한측이 시공·유지·보수를 책임지며 필요시 우리측 기술진의 접근을 보장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공단과 남측 지역간 통신망은 개성전화국의 전송장비를 경유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북한측은 통신사업의 정치·군사적 측면을 고려해야 하며, 계속 공단내 통신사업 참여를 주장함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통관·검역 부속합의서 채택과 관련하여 북한측은 기 합의된 기본합의서를 현실에 맞게 수정·보충할 것을 주장함에 따라 쌍방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다.

전력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측은 양질의 전력공급을 위해서 우리측 사업자가 직접 설계·시공·운영해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을 수용하고, 건설·유지보수 인원의 출입보장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이밖에 용수공급을 위한 월고저수지-개성공단간 송수관 건설에 필요한 우리측의 자재·장비 제공, 북한측의 폐기물처리장 무상제공 등에 합의하였으나, 통신문제와 부속합의서 채택에 대한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공동보도문 요지)

- 남과 북은 2004년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개성에서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를 진행
- 쌍방은 개성공단개발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해나가기 위해 전력·통신·용수 및 폐기물 처리와 통관·검역 합의서 이행 등 당면하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협의
- 쌍방은 앞으로 개성공단 개발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추후 실무접촉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함.

5.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

가. 제9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남과 북은 2004년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제9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을 개성에서 개최하였다. 동 접촉에서는 동·서해선 도로 포장 문제와 철도신호·통신·전력계통 공사 착수 문제, 분계역사 건설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김경중(건설교통부 남북교통과장)	박정성(철도성 대외철도협조국장)
대 표	문대근(통일부 경험지원과장)	최진택(국토환경보호성 부국장) 김창식(철도성 책임부원)

우선 북한측이 동·서해선 도로 포장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아스팔트 등 도로 포장재를 신속히 제공해 줄 것과 우기 전에 북강·남강 교량 상판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공사일정에 맞추어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우리측의 남·북·러 ‘TKR-TSR 사업 공동연구를 위한 3자 철도 전문가 회의’에 대한 참가요구에 북측은 회의 자체는 환영하나, 북한 철도 현대화 비용 및 북한철도 실태 조사 문제는 회담의제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측이 분계역사 건축에 필요한 자재·장비 제공을 요청한데 대해 우리측은 동 문제가 새롭게 제기된 만큼 검토한 후 경추위 제8차회의에서 입장을 전달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역사건축 문제 이외의 사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3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합의서 요지)

- 경의선·동해선 연결공사 완공을 위하여 도로 포장용 자재·장비를 3월부터, 동해선 교량상판을 5월부터 공사일정에 맞추어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 자재·장비의 수리·정비 및 아스팔트 혼합장 설치·운영을 위한 기술지원을 다음과 같이 진행
 - 제8차 기술지원은 경의선을 3월 18일부터 27일까지, 동해선을 3월 4일부터 3월 13일까지 실시
 - 아스팔트혼합장 설치·운영을 위한 기술지원은 경의선은 3월 9일부터 4월 4일까지, 동해선은 3월 18일부터 4월 11일까지 진행
 - 동해선 암반제거용 자재제공이 끝나는데 따라 2일간 자재 사용현장 방문 진행
- 차량운행사무소 설치·운영 문제와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는 남북철도·도로실무협의회 제4차회의에서 합의

나.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

남과 북은 2004년 4월 8일부터 10일까지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를 개성에서 개최하였다. 당초 북한측이 3월 24일부터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세부일정 협의중 우리측의 독수리합동군사훈련과 한미 전시증원훈련을 이유로 4월초로 연기되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김경중(건설교통부 남북교통과장)	박정성(철도성 대외철도협조국장)
대 표	문대근(통일부 경험지원과장) 유복환(재정경제부 지역협력과장)	최진택(국토환경보호성 부국장) 김창식(철도성 책임부원)

동 회의에서는 북한측 분계역사건축 관련 기자재 제공 문제와 열차운행합의서 채택, 차량운행사무소 개설·운영 등 남북간 철도·도로 개통에 필요한 제도적 문

제들을 논의하였다.

분계역사건축과 관련하여 판문역·손하역(경의선), 감호역·삼일포역(동해선)은 신설하고, 개성역과 금강산역은 보수하기로 하고, 우리측이 철도개통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범위내에서 기자재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또한, 빠른 시일안에 차량운행사무소를 약식으로 개소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북측은 이를 추후 통검·세관 등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남북은 자재장비 기술지원 일정 등 총 6개항을 담은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합의서 요지)

- 철도 개통에 필요한 분계역사 등에 대한 설계 및 기자재 제공문제들을 적극 협력
 - 설계대상은 판문역·손하역(경의선), 감호역·삼일포역(동해선)은 신설, 개성역과 금강산역은 보수로 하며, 규모 등 구체적 사항은 현장조사 등의 절차를 통해 확정
 - 이와 관련 북측은 관련 자료제공 등에 필요한 편의 보장
- 분계역사 등 설계를 위한 현장조사와 시공과 관련한 기술지원에 적극 협력
 - 현장조사와 시공을 위한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은 본합의서 부록에 따름
- 「남북사이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채택, 빠른 시일안에 교환, 발효
- 남과 북은 빠른 시일안에 차량운행사무소를 약식으로 설치·운영
- 제공된 자재·장비의 수리·정비를 위한 기술지원은 다음과 같이 진행
 - 경의선·동해선 도로 포장용 설비들의 정상운행을 위한 기술지원 : 4월말부터 각각 2~3명씩 체류하는 방식으로 진행
 - 고장장비 수리·정비를 위한 제9차 기술지원 : 경의선 5.28~6.6, 동해선 5.13~5.22
- 제10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은 문서교환 등을 통해 협의·결정

(합의서 부록 요지)

- 설계를 위한 현장조사는 경의선은 4월 19일부터 4월 21일까지, 동해선은 4월 27일부터 4월 29일까지 진행
 - 추가 현장조사는 쌍방 합의에 따라 실시
- 현장조사 구간은 경의선·동해선 분계역을 포함한 남북철도 연결구간으로 하며, 현장조사시 조사대상은 분계역사 설계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진행
 - 현장조사시 제기되는 기술·실무적 문제들은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
- 남측 현장조사 인원은 단장과 설계전문가를 포함하여 9~10명으로 하며 분계역사 등 시공을 위한 기술지원 일정과 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문서교환 방식 등을 통해 협의·결정
- 북측은 남측 현장조사와 기술지원을 위한 인원들의 신변안전과 편의 보장

다. 제10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남과 북은 2004년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제10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을 금강산에서 진행하였다.

북한측은 우리측이 미리 전달한 역사건축 설계도면에 긍정적 입장을 표시하면서 8월초에는 동·서해선 역사 기초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우리측은 8월초 추가적인 기술협의를 통해 기초도면을 북한측에 제공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다만, 북한측이 요구한 자재장비중 철도·도로 개통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영용 물자에 대해서는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외에도 쌍방은 중앙분리대 등 추가 자재제공에 따른 전체분 자재·장비 품목 및 수량을 조정하기로 하고, 총 5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합의서 요지)

- 경의선·동해선 북측 분계역사 등 건축계획설계를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9월말까지 건축실시설계 완료
 - 남측은 북측 분계역사 등 건축 기초공사를 위해 필요한 기초도면을 8월 초순 북측에 제공
 - 쌍방은 분계역사 등의 건축실시설계가 완료되는 시기에 맞추어 건축시공 등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을 협의·확정
- 남측은 10월 중 도로 개통에 필요한 도로 안전용 자재를 제공하고, 북측은 자재 제공과 관련한 편의 보장
- 철도 및 도로 연결공사를 위한 기술지원 실시
 - ① 분계역사 등 건축 관련 : 8월 초순부터, 경의선·동해선 각각 7명 정도
 - ② 신호·통신·전력계통 시공 관련
 - 7월 하순부터(자재·장비 설치와 시공 부분), 경의선·동해선 각각 7명
 - ③ 제공장비의 수리·정비 관련
 - 제10차 : 경의선 7.28~8. 6, 동해선 7.13~7.22
 - 제11차 : 경의선 8.26~9. 4, 동해선 8.12~8.21, 각각 7명 정도
- 전체분 자재·장비 품목 및 수량 조정 : 본합의서 부록
 - 삽(6,500개), 곡괭이(1,500개), 가로등(570주), 중앙분리대(5km), 업무용차량(2대) 등 추가 제공
 - 유제혼합기(2대), 금망(510㎡), 철근망(220㎡), 아스팔트(200톤) 삭감
- 차기 회의는 문서교환방식 등을 통해 협의·결정

6.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남과 북은 2004년 4월 8일부터 10일까지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를 개성에서 진행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채택한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 후속조치로 단독조사 항목, 북측의 사전자료 제공목록, 우리측의 현지 조사용 기자재 제공 목록, 홍수예보시설 설치와 관련한 통보체계 등을 중심으로 협의가 진행되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전병성(건설교통부 수자원국장)	김병철(국토환경보호성 국장)
대 표	심용창(통일부 회담2과장) 심완섭(총리실 과장)	전병환(국토환경보호성 처장) 최태룡(기상수문국 책임부원)

단독조사 항목과 관련하여 홍수피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사방야계 공사 및 댐 신축을 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북한측의 주장에 대해 우리측은 우선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사업부터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설명하고, 댐 신축 등은 홍수예방을 위한 최후의 협력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것을 제외한 산림실태 및 하천실태 조사항목에 합의하였다.

기자재 부분에서도 북한측은 댐 신축 등에 필요한 조사용 시추차, 지반탐사기구를 요구하였으나 댐 신축을 전제로 하지 않는 조사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기자재임을 이유로 조정하였다.

기상·수문 등 사전자료에 대해서도 기존 관측소 현황과 위치, 기상·수문 관측자료뿐만 아니라 기존 및 건설 중인 댐 등 수리시설 현황을 우리측에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홍수예보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기상·수문망 형성 및 통보체계는 우리측의 위성방식 주장에 대해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고, 우리측안을 검토하여 의견을

회신하기로 합의하고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

(공동보도문 요지)

- 쌍방은 단독조사항목과 세부조사내용 및 조사용기자재 제공목록, 북측의 기상·수문 등 자료제공 항목에 합의하고 이를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 부록으로 첨부
- 쌍방이 조사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 날짜와 장소를 문서교 환방식으로 결정

7.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

남과 북은 2003년 11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차회의에서 남북해운합의서 발효 및 부속합의서 체결을 빠른 시일내에 타결하기로 합의한데 이어 전화통지문을 통해 일정을 협의, 제4차 해운협력실무접촉을 2004년 2월 25일부터 26일까지 개성에서 진행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정상호(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차선모(육해운성 국장)
대 표	배광복(통일부 과장) 김병호(국무총리실 과장)	최정남(육해운성 책임부원)

북한측은 남북해운합의서의 조속한 발효를 주장하면서 부속합의서의 협의에 앞서 해운합의서를 서명·교환할 것을 제기하였다.

이에 우리측은 남북간 선박운항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된 부속합의서가 채택되어야 해운합의서가 실제 이행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속히 부속합의서를 채택하여 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의 발효절차를 동시에 진행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북한측이 우리측 입장에 동의함에 따라 부속합의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해상항로대 설정, 통신보장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었다.

북한측은 해상항로대 설정과 관련 우리측이 제시한 항로대(안)보다 영해쪽으로 근접한 항로대를 제시하면서 북측 항구에서 정박중 직접통신은 ‘빠른 시일내’에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우리측은 경제성과 안전성 및 남북관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해상항로대(안)를 마련했음을 설명하고, 통신문제는 안정적인 선박운항의 본질적인 요소인 만큼 부속합의서가 발효되기 전에 보장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북한측이 우리측이 제시한 해상항로대(안)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북한측 항구에서 정박중 통신이 빠른 시일내에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 쟁점사항을 타결하였다.

쌍방은 기본적으로 의견일치를 본 부속합의서를 문서교환방식을 통해 최종 확정·채택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공동보도문 요지)

- 쌍방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남북해운합의서’를 조속히 발효시켜야 한다는 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고, 부속합의서의 세부 내용에 대하여 진지하게 협의하여 의견일치를 보았음.
- 쌍방은 빠른 시일내에 문서교환방식으로 부속합의서를 최종 확정, 채택하기로 하였음.
- 제5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 날짜와 장소는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였음.

이후 남과 북은 문서교환방식을 통해 「부속합의서」의 문안조정을 완료하고 5월 28일 최종 합의된 「부속합의서」에 가서명하였다.

이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중 남북장관급회담 수석대표가 서명한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의 정식 서명절차를 완료하였다.

제5절 사회문화분야 회담

2004년도에 남과 북은 용천재난구호회담을 비롯하여 3차례의 사회문화분야 회담을 개최하였다. 2004년 4월 22일 용천지역에 대규모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마자 정부는 즉각적인 사실 확인과 함께 대북 긴급구호체계 가동을 위한 실무준비에 들어갔다. 우리측은 4월 24일 용천지역의 재난피해에 대해 북한측에 위로의 뜻과 함께 지원의사를 전달하였으며, 북한측은 개성에서 4월 27일 긴급구호물자 전달 및 피해복구를 위한 실무접촉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로써 남과 북은 지난 1984년 서울과 경기일원에 내린 폭우피해를 계기로 개최된 남북적십자간의 수해물자 인도·인수를 위한 실무접촉 이후 20년만에 구호회담을 개최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남과 북은 2004년 아테네올림픽을 계기로 개·폐회식 공동 입장을 위한 실무회담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하였으며,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제4차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금강산에서 개최하였다.

1. 용천재난구호회담

용천재난구호회담은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4월 27일 하루동안 개최되었다. 회담에는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 과장급이 대표로 참여하였으며, 대한적십자사도 지원단으로 함께 참여하였다.

용천재난 구호회담에 참가한 남북대표단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홍재형(통일부 사회문화교류국장)	최성익(내각참사)
대 표	김한주(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장) 한창섭(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담당관)	김정삼(국가계획위원회 책임참사) 황 철(내각과장)

회담에서 우리측은 긴급구호품과 의료품 전달계획을 북한측에 설명하였으며, 응급 의료진의 피해지역 파견 및 시설복구 지원의사를 표명하였다. 북한측은 우리측 지원의사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면서 용천지역의 피해상황을 설명하고 북한측이 필요로 하는 자재·장비 명세(시멘트, 샤프, 불도저, 포크레인 등 자재장비와 유류·식량)를 우리측에 전달하였다.

우리측은 회담을 통해 북한측이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파악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협의에 임한만큼 별도의 합의서를 채택하지 않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우리측은 회담종료후 5월 7일부터 8월 4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 긴급구호물자와 시설복구를 위한 자재장비 등 총 419억원 상당을 지원하였다.

2. 제4차 남북적십자실무접촉

우리측은 2004년 5월 14일 대북 전화통지문을 통해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협의된 바에 따라 제10차 이산가족 상봉을 6월 19일부터 6월 24일까지 금강산에서 실시할 것을 북한측에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5월 17일 대남 전화통지문을 통해 제10차 이산가족 상봉문제와 한적 총재 평양 방문시(4.20~24) 협의하였던 인도적 지원사업들을 논의하기 위한 적십자실무접촉을 5월 21일부터 금강산에서 가질 것을 제의하였다.

한적 총재 평양 방문시 북한 적십자회는 평양적십자병원의 현대화 지원과 의약품 지원, 식량 지원 등을 요청한 바 있었다.

우리측은 북한측의 실무접촉 제의에 대해 접촉 일자를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하자고 수정 제의하였고, 이에 대해 북한측이 동의해옴에 따라 제4차 적십자실무 접촉이 금강산에서 열리게 되었다.

우리측은 이병웅(대한적십자사 총재 특별보좌역)을 수석대표로 하고, 북한측은 최성익(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상무위원)을 단장으로 하여 각기 3명씩의 대표단을 구성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이병웅(대한적십자사 총재특별보)	최성익(조선적십자회중앙위원회 상무위원)
대 표	유종렬(대한적십자사 남북교류협력위원) 유광수(대한적십자사 남북교류협력위원)	김경애(북한의학협회 부부장) 황 철(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

우리측은 적십자 접촉은 이산가족 문제를 협의하는 자리임을 강조하면서 제10차 이산가족 상봉 일자를 제시하고, 생사주소확인, 서신교환, 전쟁시기 행방불명자 생사주소 확인을 확대해 나가자고 강조하였다.

제10차 이산가족 상봉 일자는 우리측이 전화통지문에서 제의한 대로 6월 19일부터 24일까지로 하고, 설·6.15·추석 등을 계기로 쌍방이 각기 300명씩의 명단을 교환해 생사·주소확인 사업을 실시할 것을 제의하였다. 또한, 6.15를 계기로 우리측 전쟁시기 행방불명자 100명의 명단도 함께 전달할 계획임을 통보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제10차 이산가족 상봉과 평양적십자병원 현대화 지원문제, 한적 총재 방북시 협의하였던 식량 지원문제 등에 대해 일괄타결하자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제10차 이산가족상봉을 6월 27일부터 7월 2일까지 금강산에서 실시하고, 평양적십자병원 현대화 지원문제는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우선 내시경 및 초음파 장비 등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우리측은 인도적 지원문제는 내부 검토를 거쳐 능력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전달하면서 북한측이 인도적 지원문제를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하였다.

남과 북은 2004년 5월 25일 수석대표 접촉과 전체회의를 각각 한차례씩 더 가

지고 쌍방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였다. 그러나 우리측이 제4차 적십자실무접촉을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이라고 인식하면서 구체적 실시방안을 제시한 반면, 북한측은 평양적십자병원 현대화 지원 등 인도적 지원문제에 논의를 집중시킴으로써 2가지 사안을 포괄하는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결국 쌍방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제10차 이산가족상봉 일자 등 절차문제는 추후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3. 제28회 아테네올림픽 개·폐회식 남북공동입장을 위한 실무접촉

대한올림픽위원회는 2004년 1월 30일 북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아테네올림픽 개·폐회식 공동입장과 체육교류 협의 등을 제안하는 위원장 명의 서한문을 발송하였다.

제13차 장관급회담(2004.2.3~2.6, 서울)에서 남북은 제28회 아테네올림픽 개·폐회식 공동입장 원칙에 구두 합의하였으며, 그리스에서 개최된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총회에서는 남북 올림픽위원회 대표단이 만나, 제28회 아테네올림픽 개·폐회식 공동입장 원칙을 재확인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위한 실무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다.(2.25, 아테네)

실무회담은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박양천 대한올림픽위원회 명예총무를 수석대표로 하는 9명의 대표단을 베이징 실무회담에 파견하였고, 북한측은 조상남 북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겸 서기장을 단장으로 하는 6명의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박양천(대한올림픽위원회 명예총무)	조상남(조선올림픽위원회부위원장)
대 표	김승곤(대한올림픽위원회 사무차장) 정기영(대한올림픽위원회 국제부장)	윤용복(조선올림픽위원회 상무위원) 박일남(조선올림픽위원회 서기)

우리측은 2000년 시드니올림픽 전례에 따라 공동입장안을 먼저 북한측에 제시하였다. 선수단 호칭은 KOREA(코리아)로 하며 깃발은 한반도기, 선수단가는 아리랑으로 할 것을 제의하였다. 선수단 복장으로는 남자 상의는 청색, 하의는 베이지색, 여자 상의는 적색, 하의는 베이지색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번 아테네올림픽 공동입장과는 별도로 2008년에 있을 베이징올림픽 단일팀 구성문제 협의를 위해 9월 중에 남북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체육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한측에 제의하였다.

북한측은 공동입장 문제가 이미 전례가 많이 쌓여있는 문제인 만큼 우리측의 제안에 큰 이견이 없이 동의해 왔다. 단, 베이징올림픽 단일팀 구성 논의를 위한 체육회담 개최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적이 없으며, 대신 아테네올림픽 기간 중 남북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만나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남과 북은 공동입장 실무문제에 관한 5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합의서 요지)

1. 선수단 호칭 : 우리말로 '코리아', 영어로 'KOREA'
2. 선수단 단기 : 흰색 바탕에 하늘색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 넣은 한반도기
3. 공동입장시 음악 : 시드니올림픽때 사용한 아리랑
4. 공동입장 순서 : ①선수단 표지판 ②단기 ③남북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④남북 선수단
장 ⑤남북 임원 ⑥남북 선수의 순서
5. 선수단 복장 : 남자 상의는 청색, 하의는 베이지색, 여자상의는 적색, 하의는 베이지색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확대



제1절 남북한 인적교류

제2절 남북교역

제3절 남북간 통행 · 통신 · 통항

제4절 남북경제협력사업

제5절 개성공단 개발

제6절 남북사회문화 교류협력

제7절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확대

남북간의 교류협력은 민족공동체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북한 핵문제 해결과 군사적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 여건조성에 기여하는 등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이끌어오고 있다.

남북경협은 사회문화교류 확대 및 우리 국민들의 대북 인식 제고에 기여하는 등 남북관계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으며, 북한을 동북아 협력 네트워크로 유도하여 경제공동체 건설로 나아가게 하는 추진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다.

2004년 하반기 이후 남북 당국간 대화가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분야 교류협력은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

경의선·동해선 도로연결공사는 2004년 11월말 모두 완료되었고 개성공단 15개 시범단지 입주기업 중 리빙아트가 첫제품을 생산함으로써 남북경협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2003년 9월 이후 육로관광이 정례화된데 이어 2004년도에는 관광객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 안정적 추진기반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종합해 볼 때 2004년은 남북 당국간 대화가 일시 중단되었지만 남북간 교류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한 한 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제1절 남북한 인적교류

1. 남북한 왕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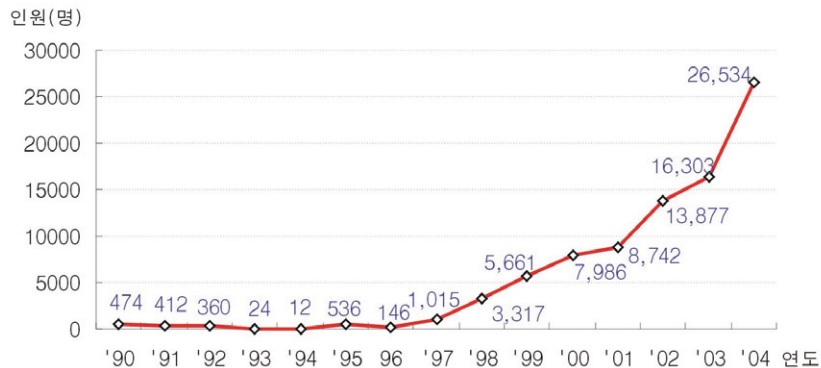
2004년 금강산 관광객을 제외한 북한 방문자 수는 26,213명으로 1989년 방북이 허용된 이래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다녀왔고 전년도 방북인원 15,280명에 비해 71.5% 증가하였다.

2004년 하반기 이후 남북간 대화가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건설 등 경제분야 관련 방북인원이 급격히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자 수는 321명으로 전년도의 1,023명에 비해 218% 감소하였다.

2004년 남북 왕래인원은 총 26,534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연도별 남북왕래인원 변화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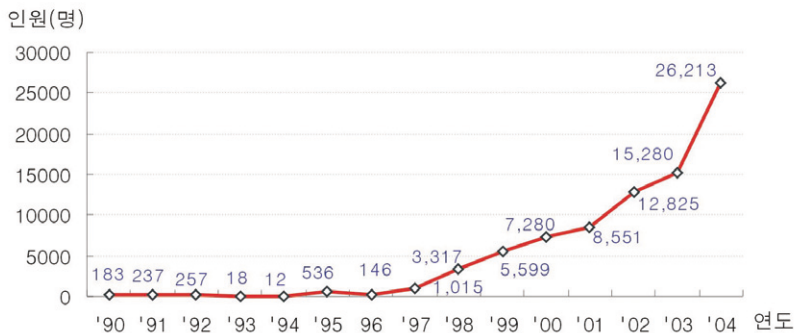
가. 남한주민의 북한방문

1989년 이후 2004년까지 금강산 관광객을 제외한 남한주민의 북한 방문자 수

는 총 81,470명이고, 2004년도 방북인원은 26,213명으로 전년도의 15,280명에 비해 71.5% 증가하였다.

1989년 이후 2004년까지 경제분야와 관련한 남한주민의 북한방문자 수는 17,411명이고, 2004년 경제분야 방북인원은 13,075명으로 2003년 방북인원 2,905명에 비하여 350% 증가한 것이다.

【 연도별 북한방문 변화추이 】



남북 당국간 회담이 중단된 상태에서도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 부지조성 공사와 시범단지 2만 8천평 조성공사가 순조롭게 진척되어 경제분야 관련 방북은 예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였다.

개성공단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입주기업 공장건설 착공식, 관리위원회 개소식, 토지공사개발사무소 준공식 등 개성 현지에서 열린 각종 기념 행사 참석을 위하여 남측인원이 방문하였으며, 특히 2004년 12월 15일에 있었던 개성공단 첫째품생산 기념식 행사에는 국회의원 79명을 비롯한 385명의 남측인원이 참석하였다.



경의선 출입사무소 검색대 통과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관련한 자재 장비 지원, 일반 경협사업으로 녹십자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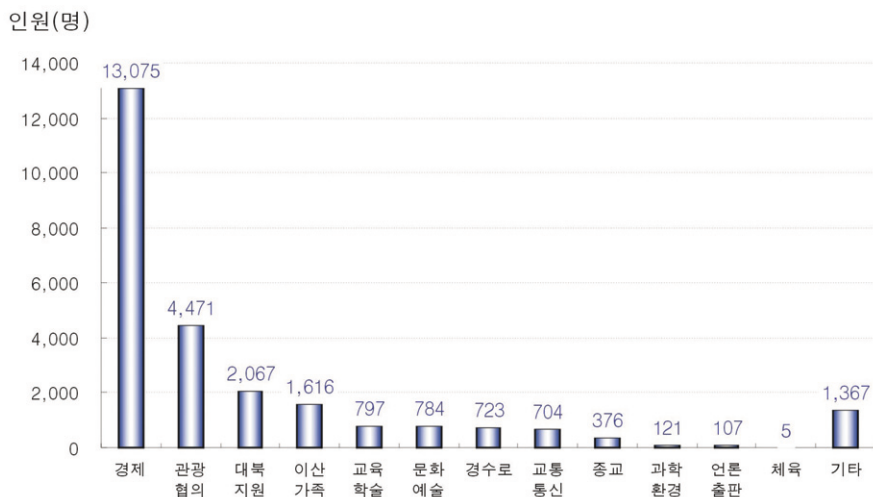
키나제 반제품 반입사업, 태창의 금강산샘물 개발사업, 평화자동차의 자동차 조립 생산사업, 안동대마방직의 삼베제품 사업 등 남북경협과 관련한 방북이 이루어졌다

1989년 이후 2004년까지 사회문화분야 관련 북한방문은 6,695명(558건), 2004년에는 2,190명(93건)이 성사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2,472명(100건)에 비하여 12.8% 감소한 것이다.

2004년도 하반기에는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의 대규모 입국과 소위 조문파동으로 인해 남북간 왕래가 제한되기도 하였다.

2004년도 학술·체육분야 주요 방북사례는 일제 약탈 문화재 반환을 위한 남북 공동학술토론회 및 자료 전시회, 고구려 고분군 세계문화 유산등재기념 남북공동 전시회 및 학술 토론회 등이며, 832명이 방북하였다.

【 2004년도 분야별 방북현황 】



2004년도 언론·출판분야 주요 방북사례로는 민족문학작가회의의 민족작가대회 개최추진, 통일맞이의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KBS의 다큐멘터리 ‘고구려의 부활’ 제작, MBC의 다큐멘터리 ‘북녘의 음식’ 제작, 조선일보의 고이즈미 일본총리 방북 취재, 방송위원회의 아테네 올림픽 방송중계 협의 등이 있다.

종교분야에서는 7월 조문사태에도 불구하고 예년 수준의 인적교류가 이루어졌

다. 2004년도 주요 방북사례는 대한불교 조계종의 금강산 신계사 복원사업, 천태종의 개성 영통사복원 협력사업, 한국기독교장로회의 남북공동기도회 개최, 대한감리회 서부연회의 평양신학원 운영사업 추진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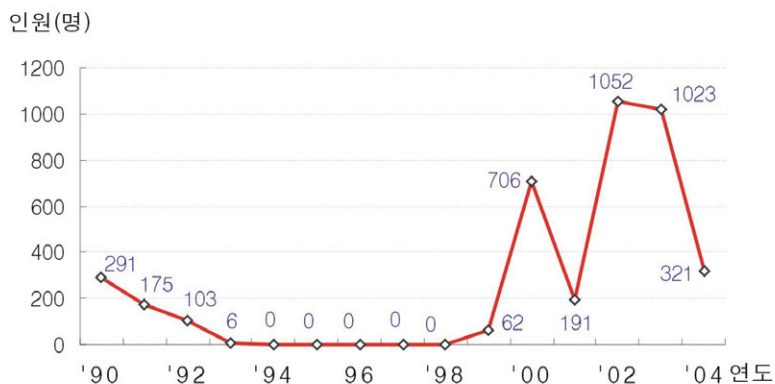
문화 예술 분야의 2004년도 주요 방북사례로는 지우다우에서 추진한 「금강산 통일새내기 배움터」 남북 대학생 교류행사와 민화협 등의 고구려 유적관련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민간단체 등 기타분야의 2004년 주요 방북사례로는 8.15 남북공동행사 등 남북 공동행사 참가, 남북청년학생대회 참가협의, 강원도, 제천시 등 자치단체 차원의 교류협력사업 협의, 제2차 남북농민 통일대회, 남북노동자 5·1절 남북공동행사 등이 있다.

나. 북한주민의 남한방문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은 1989년 이후 2004년 12월말까지 3,930명(65건), 2004년 한 해 동안 321명(13건)이 성사되었다.

【 연도별 남북왕래인원 변화추이 】



【 주요 남한방문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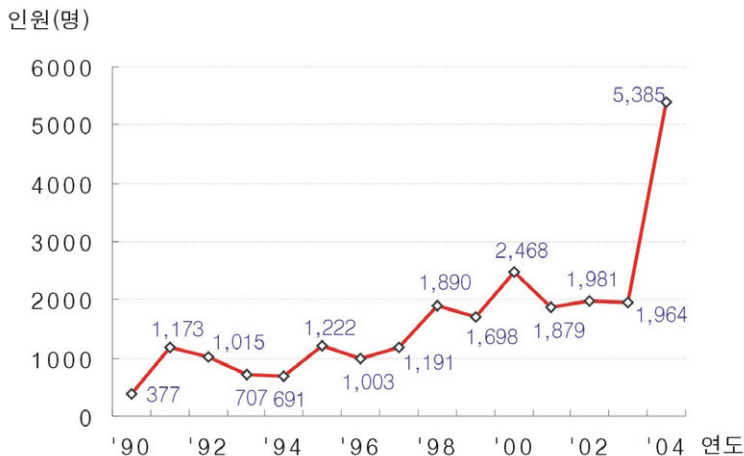
방문목적	방문자	방문기간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김령성 등 28명	2004.2.3~2.6
제8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최영건 등 27명	2004.3.2~3.5
제3차 남북청산결제 실무협의	윤선호 등 20명	2004.4.20~4.22
동아시아전력연합을 위한 국제심포지움 참석	최영건 등 7명	2004.5.17~5.22
제2차 남북장성급회담	안익산 등 33명	2004.6.3
ASEM 철의 실크로드 심포지움	박정성 등 6명	2004.6.16~6.19
남북장성급회담 실무대표 접촉	유영철 등 23명	2004.6.29~6.30
문익환목사 10주기 추모행사 참가	주진구 등 7명	2004.1.16~1.19
일제약탈문화재 반환 관련 학술행사 작가단 수송	지동훈 등 16명	2004.2.24~2.28
제2회 국제연대 협의회 서울대회 참가	홍선옥(일본의 과거 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 협의회 조선위원회 공동위원장)	2004.5.20~5.24
남북공동행사	최상순(조선사회과학자)	2004.6.2~6.5
6.15 4돌 우리민족대회 참가	김정호 등 126명	2004.6.14~6.17

2. 북한주민 접촉

북한주민 접촉은 주로 이산가족들의 재북 가족과의 서신교환, 기업인들의 교역 투자상담, 학자 종교인들의 제3국 개최 공동행사 참석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4년도 북한주민접촉은 5,385명으로 전년도 1,964명에 비해 174.1% 증가하였다.

【 연도별 북한주민접촉 변화추이 】



2004년도 분야별 북한주민 접촉은 경제분야 852건(973명), 사회문화분야 174건(2,145명), 대북지원 66건(224명), 이산가족 205건(230명), 기타 48건(1,793명)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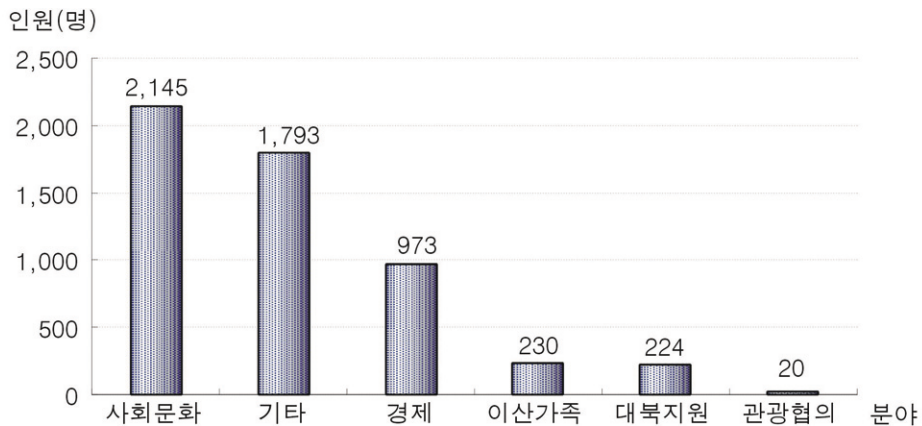
경제분야의 2004년 북한주민접촉은 582건(973명)으로 전년도 411건(534명)에 비해 82.2% 증가하였다.

사회문화분야의 북한주민 접촉은 학술, 문화·예술, 체육, 종교, 언론 출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계속되어 왔다.

2004년도 학술분야의 북한주민 접촉 성사인원은 1,620명으로 전년도의 263명에 비해 대폭 상승하였다. 체육분야는 151명으로 지난해의 31명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문화·예술분야의 북한주민 접촉은 157명으로 전년도의 33명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다. 2004년도 문화·예술분야 주요 접촉사례로는 전주국제영화제에 북한영화 상영 추진, 국립오페라단 평양공연 추진, 윤도현밴드 조총련 공연 추진, 남북공동사진전 개최 추진, 남북합동 수석전시회 개최 등이 있다.

【 2004년 분야별 북한주민 접촉현황 】



종교분야의 북한주민 접촉은 15건(71명)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04년도 종교분야 주요 접촉사례로는 남북간 기독교교류 및 선교 협력방안 협의, 조총련계 조선학생 초청사업 추진, 제3회 통일염원 순례행사 참가 등을 들 수 있다.

언론·출판분야 북한주민접촉은 44건(111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다. 2004년 주요 접촉사례로는 남북공동 방송물 제작 등 남북방송교류 추진, 북한저작물 국내 출간 추진, 금강산·개성지역 현장 취재 등 방북취재와 언론출판교류 협의, 조총련대상 도서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과학·환경분야는 2004년도 6건(35명)이 성사되어 전년도 61명에 비해 74.2% 감소하였다.

2004년도 주요 접촉사례로는 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협력사업 진행과정에서 UN 후원 동남아 개도국 대상 공공정보 워크샵(2004.11) 등을 들 수 있다. 환경분야 관련 주요접촉사례로는 북한 산림복구 지원을 위한 「평화의 숲」의 양묘장 건설

사업, 「남북강원도협력협회」의 산림 병충해(솔잎혹파리, 잣나무넓적잎벌레)방제 사업 등과 관련된 접촉이 이루어졌다.

제2절 남북교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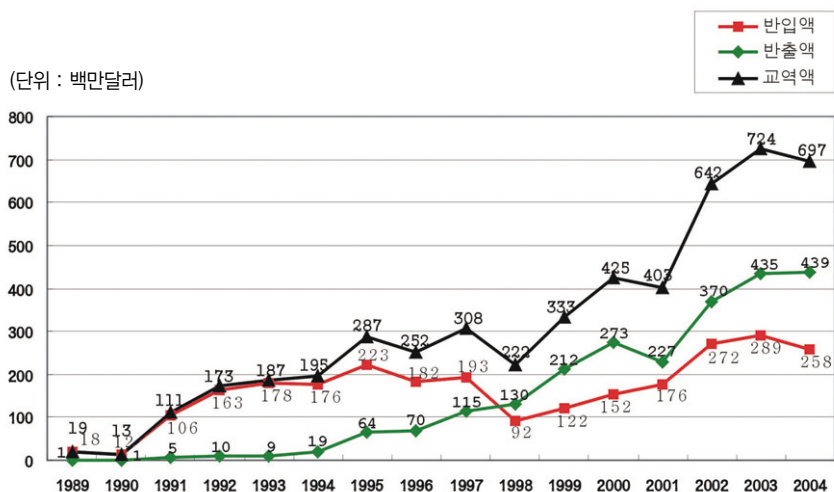
1. 남북간 물자교역

가. 교역규모

2004년 남북교역은 개성공단의 본격적인 개발과 금강산 관광사업의 활성화, 용천재해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 확대에 따라 비거래성 교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거래성 교역의 부진으로 전년 대비 3.8% 감소한 6억 9,704만달러에 머물렀다.

반입은 2억 5,804만달러로 전년보다 10.8% 감소하였으나 반출은 4억 3,900만달러로 전년보다 0.9% 증가하였다. 반입 감소는 주로 국내 생산자 보호를 위해 일부 농수산물의 한도물량 설정 및 국내 내수부진 등에 따른 위탁가공무역의 축소 등에 따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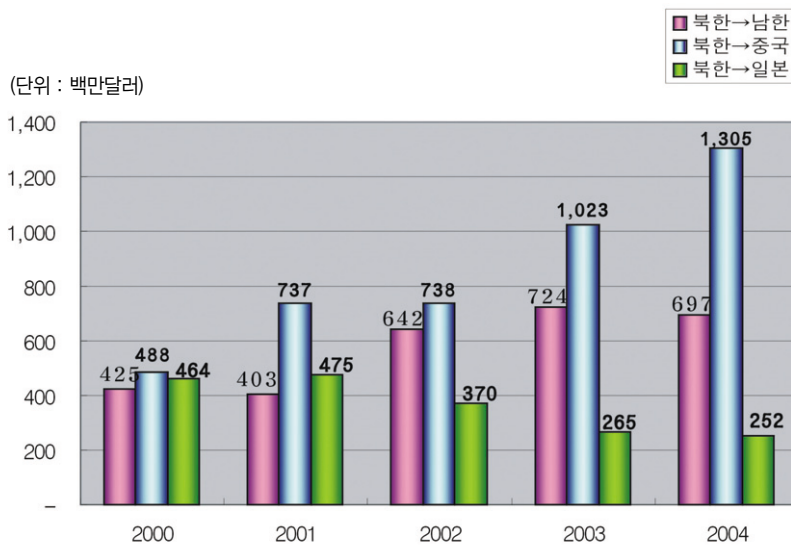
【 연도별 남북교역액 변동 추이 】



2004년 북한의 주요국가와의 교역현황을 보면 중국과의 교역이 35.4% 증가된

13억 8,521만달러를 기록했으며, 일본과의 교역은 2억 5,187만달러로 전년 대비 4.8% 감소되었다.

【 북한 3대 교역국 교역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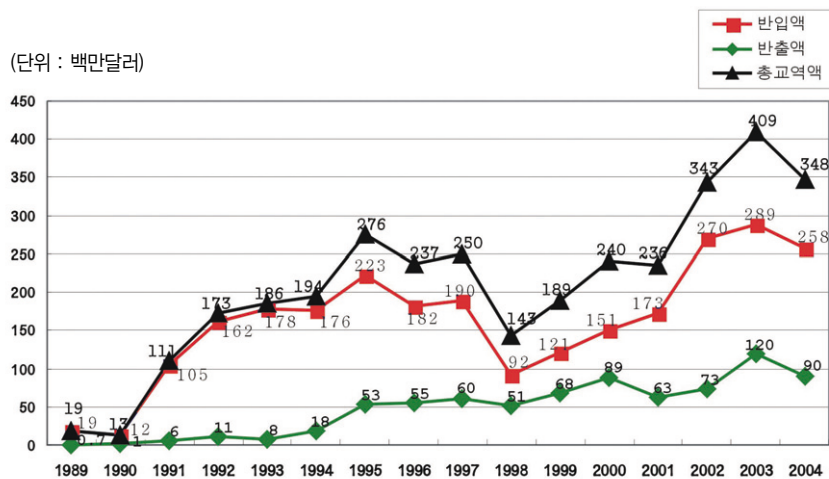
남포항에서 하역작업중인 TRADE FORTUNE호

나. 유형별 남북교역

2004년도 거래성 교역(상업적 매매거래, 위탁가공)은 3억 4,779만달러로 전년대비 14.9% 감소하였고, 전체 교역액의 49.9%를 차지하였다. 이중 반입은 2억 5,790만달러로 전년대비 10.8%, 반출도 8,989만달러로 24.8% 각각 감소하였다.

거래성 교역중 상업적 매매거래는 1억 7,179만달러로 전년대비 23.2% 감소하여 전체 교역액의 24.6%, 거래성 교역의 49.4%를 차지하였고, 위탁가공 교역은 1억 7,600만달러로 전년대비 4.9% 감소하여 전체 교역액의 25.3%, 거래성 교역액의 50.6%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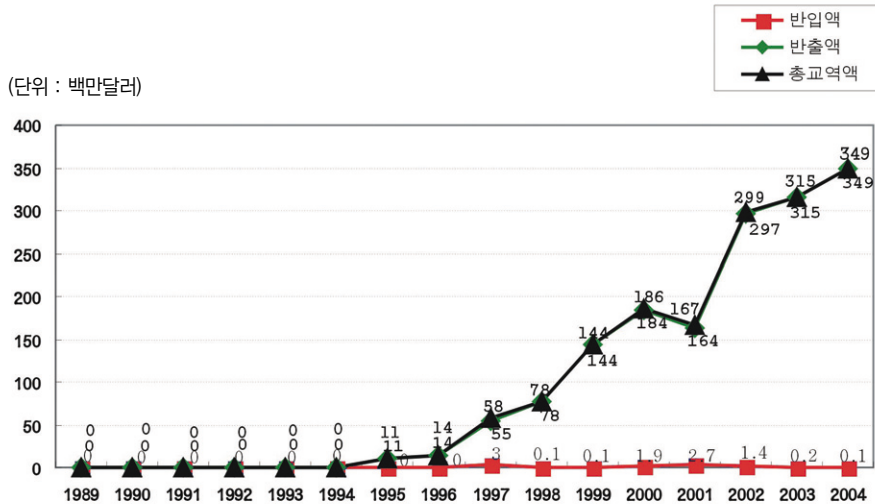
【 거래성 교역 변동 추이 】



한편 비거래성 교역은 3억 4,924만달러로 전년대비 10.7% 증가하고, 전체 교역액의 50.1%를 차지하였다.

주요 유형별로는 인도적 대북지원이 2억 5,847만달러로 비거래성 교역액의 74.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성공단 건설 등 일반 협력사업 4,855만달러, 금강산 관광사업 4,177만달러, 경수로 사업 46만달러로 각각 비거래성 교역액의 13.9%, 12.0%, 0.1%를 차지하고 있다.

【 비거래성 거래 교역 변동 추이 】



다. 남북간 교역수지

2004년도 교역 수지는 명목상으로는 남한이 1억 8,096만달러 흑자이나 비거래성 반출입을 제외한 실질교역 수지는 1억 6,801만달러 적자이다. 1989년부터 2004년까지 누적 명목 수지는 남한이 2억 3,500만달러 적자이나 비거래성 교역을 제외한 누적 실질 수지는 이보다 훨씬 적자 폭이 큰 18억 4,467만달러이다.

명목상으로는 남한이 흑자이나 실질 교역수지는 적자를 보이는 교역수지 구조는 개성공단 개발의 본격화 및 금강산 관광사업의 활성화에 따른 물자반출의 증가, 대북 지원 물품 증가 등으로 비거래성 교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추세에 따른 것이다.

실질 교역수지의 불균형은 주로 북한의 구매력 부족 때문으로 북한의 외환사정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남북간에 합의된 청산결제제도가 시행될 경우 조금씩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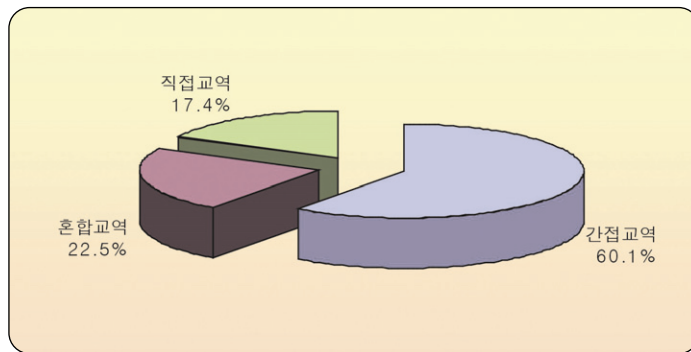
라. 남북한 교역구조

남북교역 초기에 해외중개상을 통해 간접교역 형태로 진행되어 오다 1990년대 중반부터 한약재, 농산물, 위탁가공교역의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남북교역 당사자 간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는 직접교역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통행, 통신 제약에 따른 거래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개교역을 하는 경우가 많다.

통일부가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2003년 9월 300여개의 남북교역업체를 대상으로 교역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북교역 당사자간 직접 계약에 의한 직접교역 업체수의 비율은 17.4%인 반면, 제3국 중개인을 통한 간접교역은 60.1%, 직접교역과 간접교역 방식을 병행하는 혼합교역은 22.5%인 것으로 조사됐다.

남북 직교역 확대 등을 위한 경험협회사무소 개설, 기 합의된 청산결제 제도의 시행 등과 같은 직교역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 여건이 조성될 경우 남북간 직교역의 비중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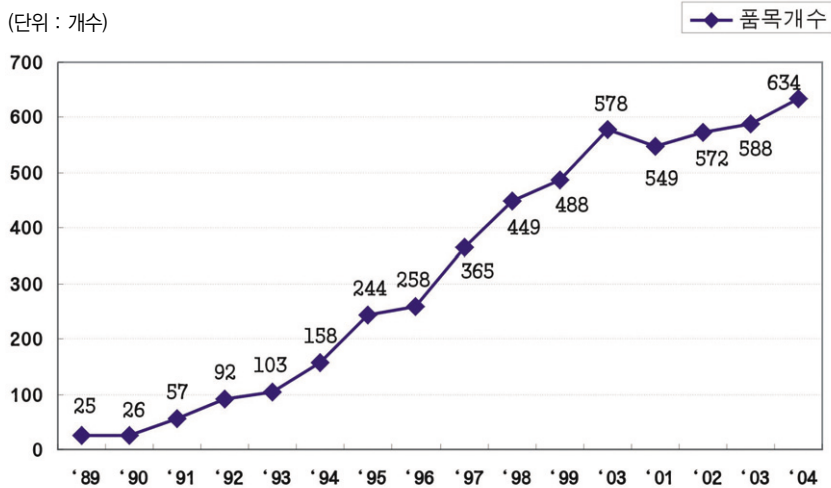
【 대북교역 형태 】



▶ 업체수 기준

남북간 교역품목의 수는 1989년에는 25개에 불과하였으나, 2002년 572개, 2003년 588개, 2004년 634개로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2004년의 경우 반입 품목수는 202개로 전년에 비해 17개 증가한 반면, 반출 품목수는 575개로 45개 증가하였다.

【 연도별 교역품목 현황 】



반입품목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은 농림수산물, 섬유제품, 철강·금속제품 등 순이다. 2004년 농림수산물 반입은 전년보다 감소된 3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개류·건조수산물·수산가공품 등 수산물이 주종을 이룬다

섬유제품은 1992년부터 시작된 위탁가공교역이 점차 확대되면서 그 비중이 높아져 반입품목중 두번째로 큰 비중(37.2%)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4년에는 섬유류 위탁가공교역의 위축으로 반입규모가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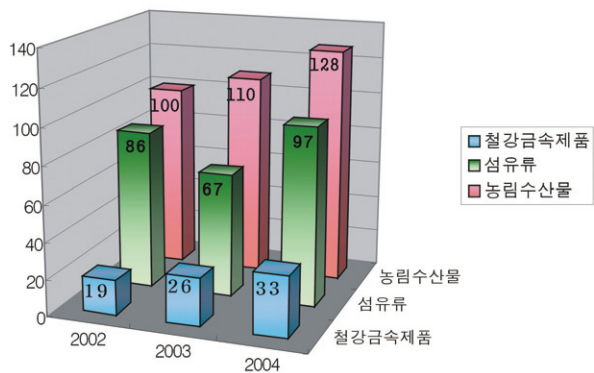
철강·금속제품은 2004년 반입 비중이 20.1%로 세번째이며, 교역 초기에 금괴 등 광산물과 선철 등이 아연괴와 함께 반입되었으나 최근에는 아연이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은 초기에는 농업용 비닐자재 등 화학제품이 많았으나, 위탁가공교역의 시작과 함께 섬유류의 반출 비중이 늘어 왔으며 최근에는 식량·비료, 의약품 지원 등으로 인해 화학공업제품과 농림수산물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4년 주요 반출품목의 비중은 화학공업제품(31.0%), 섬유류(20.4%), 광산물(6.6%), 농림수산물(15.2%), 기계류 9.8%, 철강금속제품(4.9%) 등의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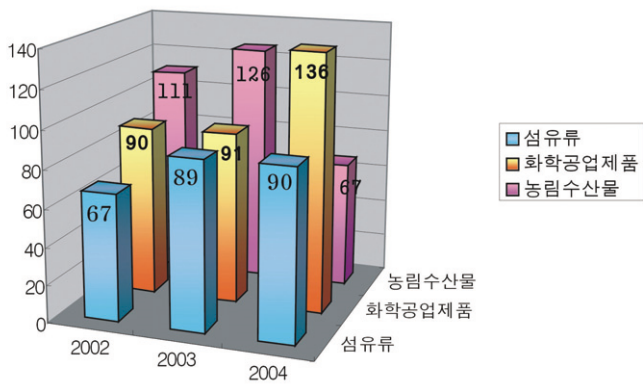
【 최근 3년간 주요 반입품목 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최근 3년간 주요 반출품목 현황 】

(단위 : 백만달러)



2. 위탁가공교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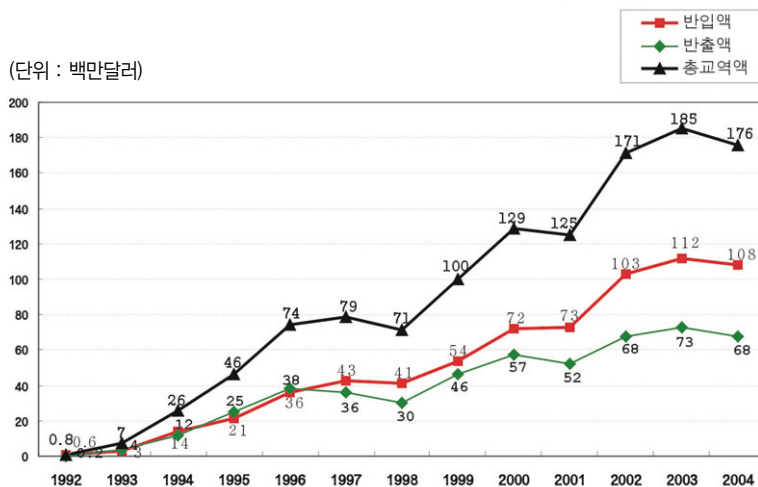
위탁가공 교역은 남한에서 원·부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북한으로 반출하여 가공한 후 국내에 가공제품을 재반입하고 북한 거래 상대방에게 일정액의 가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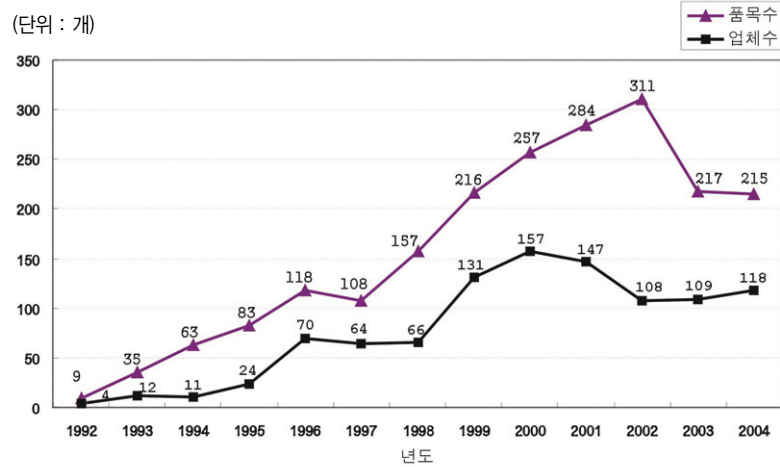
(주)아이에스월드의 북한 위탁가공공장인 모란봉 피복공장

을 지급하는 교역 형태이다. 2004년도 위탁가공 교역액은 1억 7,600만달러로 전년대비 4.9% 감소하였다. 위탁가공 교역액은 전체 교역액의 25.3%, 거래성 교역액의 50.6%를 차지하고 있다. 섬유류 위탁가공이 80% 이상을 차지하여, TV 등 전기·전자 제품과 일부 생활용품등도 위탁가공으로 생산되어 반입되고 있다.

【 연도별 위탁가공교역 추이 】



【 연도별 위탁가공 참여업체 및 품목 현황 】



2004년의 위탁가공 교역 참여업체수는 118개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 점차 안정 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2000년 157개 업체에서 2002년 108개 업체로 급격한 감소경향을 나타낸바 있는데, 이 시기는 2000년 본격적인 남북교역 관심제고로 많은 업체들이 위탁교역에 참여하였지만 반출입교역액 5만달러 이하의 영세업체들은 사업성 조율에 실패하였고 규모있는 업체가 교역을 주도하여 품목수와 교역액이 대폭 증가하는 등 위탁가공 교역의 재편기라고 볼 수 있다.

제3절 남북간 통행 · 통신 · 통항

1. 통행

가. 남북 육로출입의 제도화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2000.7.29~31),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2000.8.29~9.1) 및 특사방북(2002.4.3~4.5)을 통해서 남과 북은 남북철도 · 도로 연결에 합의하였다. 뒤이어 개최된 남북철도 · 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1차회의(2002.9.13~17, 금강산)에서 철도 · 도로 연결에 필요한 자재 · 장비를 우리측에서 제공키로 함으로써 반세기 동안 끊어져 있던 남북철도 · 도로 연결을 위한 커다란 전기가 마련되었다.

남북철도 · 도로 연결에 필요한 자재 · 장비의 운반이 빈번해지고 금강산육로관광이 본격화됨으로써 남북출입업무를 관할하는 상시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3년 2월부터 임시 출입사무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2003년 11월 20일자로 통일부 소속기관으로 남북출입사무소 직제를 신설하여 남북출입업무를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였다.

남북출입사무소는 남북 철도 · 도로의 운영, 남북 차량 운행과 관련된 북한과의 협의 및 연락, 남북 출입에 따른 긴급상황의 처리, 남북 수송장비의 운행 승인 및 물자의 반출 · 반입 승인 신청서 접수 및 사실관계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남북출입사무소에서는 경의선 · 동해선 철도 · 도로를 통한 남북사이의 인원 왕래, 물자의 반출입 및 수송장비 운행시 세관검사(Customs Inspection), 출입심사(Immigration), 검역(Quarantine) 등 남북 출입절차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남북출입사무소는 남북관계의 특수성, 남북간 합의에 의한 상호주의 적용문제 해결과 남북출입계획 작성 · 조정 등 남북 출입업무를 총괄 · 조정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의 남북 통행량 증가에 대비한 물적 기반 및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대북 협상업무 등도 수행한다.



남북 출입사무소 내부

한편 남북출입과 관련 신속·정확한 통계유지와 출입심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보완·연동하여 통행 인원, 차량 및 물자에 대한 출입현황 DB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앞으로 관세청 및 법무부 전산시스템과 연계하고 북한 방문 중에 바코드를 장착함으로써 출

입인원 및 차량에 대한 실시간 통계처리가 가능하도록 출입경 자동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나. 남북 육로출입 현황

남과 북은 2003년 1월 27일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를 서명·발효시켰다. 이에 따라 육로를 이용한 금강산관광, 철도·도로연결을 위한 자재·장비 수송이 이루어졌으며, 각종 남북회담, 경제협력사업, 사회문화 교류협력, 인도적 사업 등을 위한 인원과 차량이 경의선·동해선 도로를 통해 출입하고 있다.

특히 2004년도에는 개성공단 개발사업,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 사천강 모래 반입 등과 관련 자재·장비 수송과 물자의 반출·입이 육로를 통해 이루어졌다. 2004년 12월 15일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서 처음으로 생산된 제품이 남북출입사무소의 통관절차를 거쳐 남한으로 반입되었다.

남북 육로출입 현황은 2003년도에는 금강산 관광객 36,028명을 포함하여 43,038명(경의선 3,643명, 동해선 39,395명)의 인원과 4,392대의 차량이 육로를 이용하여 남북을 왕래하였다.

2004년도에는 통행인원이 금강산 관광객 268,420명을 포함하여 321,088명(경의선 24,164명, 동해선 296,924명)에 달해 대략 월 26,700여명, 매일 890여명이 남북

을 왕래하였으며, 차량은 30,899대로 월 2,500여대, 매일 80여대가 왕래하였다.

이러한 통행 숫자는 남측 인원·차량이 경의선·동해선을 통해서 왕래한 편도 기준 현황이다. 북측 인사·차량이 남측으로 내려온 경우는 인원 80명, 차량 12대로 3차례에 걸친 속초·문산에서의 남북회담 참석을 위해서였다.

【 육로이용 출입 현황 】

구 분	통행인원(명)			통행차량(대)		
	경의선	동해선	계	경의선	동해선	계
2003년	3,643	39,395	43,038	1,249	3,143	4,392
2004년	24,164	296,924	321,088	15,314	15,585	30,899
남북회담	279	85	364	22	11	33
경제협력	23,571	293,462	317,033	15,168	15,174	30,342
사회문화교류협력	262	1,476	1,738	117	134	251
대북인도사업	52	1,901	1,953	7	266	273
합 계	27,807	336,319	364,126	16,563	18,728	35,291

다. 남북출입시설 신축 공사 추진

본격적인 남북교류협력 시대에 대비하여 남북출입사무소가 출범하고 육로를 통한 인원 및 물자의 남북 통행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의선·동해선 남북출입시설 신축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남북출입시설 건설은 남북 교류협력의 거점으로서 물류 확대 및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한반도가 동북아 교통·물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경제적인 효과와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남북출입시설 신축사업은 남북협력기금 지원사업으로 추진하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총사업비 2,781억원(경의선 1,652억원, 동해선 1,129억원)의 남북협력기금 지원이 심의·의결되었다.



경의선 철도·도로출입시설 착공식

남북출입시설은 시설 이용의 효율성과 고객편의 중심의 공간배치 및 부대시설 확보, 환경오염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며, 2004년 9월23일 경의선지역 본출입시설 건물 착공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라산 지역에 약 13만평, 동해

선 저진역 부근에 약 12만평 정도의 대규모 철도·도로 출입시설 단지가 형성된다. 본출입시설은 2005년 12월, 기타 부대시설 및 공용 야드는 2006년 12월 완공할 예정이다.

【 남북출입시설 신축규모 및 공사기간 】

구 분		연 면 적	부 지 면 적	공 사 기 간
경의선	철도출입시설	6,500m ² (1,966평)	440,910m ² (133,375평)	'04.9 ~ '05.12
	도로출입시설	17,438m ² (5,275평)		'04.9 ~ '05.12
	공용Yard	395,700m ² (119,698평)		'05 ~ '06.12
동해선	철도출입시설	6,706m ² (2,029평)	411,170m ² (124,378평)	'04.9 ~ '05.12
	도로출입시설	8,354m ² (2,527평)		'04.9 ~ '05.12
	공용Yard	306,950m ² (92,852평)		'05 ~ '06.12

2. 통신

남북간 통신망은 2004년에 개성공단 추진을 위한 개성공단관리위원회용 2회선이 위성을 통해 간접 연결되었다. 이에 따라 남북간에는 2004년 말 현재 직접 33회선, 간접 33회선 등 총 66회선이 연결되어 있다.

2004년에 개성공단과의 직통 광통신이 합의됨에 따라 직통 광통신 시대를 맞이

하게 되어 향상된 통화 품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금강산 관광객을 위하여 50회선을 추가 구축하여 관광객의 통신서비스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북한의 신포 경수로 부지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들은 중국을 경유하는 국제우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 남북간 직접연결 전화 현황 】

(2004.12.31 현재)

용 도	구 간	회 선 수	연 결 시 기
남북직접시간직통전화	서울~평양	2	1971.9.22
남북조절위원회	남북조절위원장간	1	1972.7.4
남북회담지원용	서울~평양	18	1972.8.26
남북경제회담용	서울~평양	1	1984.12.21
판문점공동경비구역내 남북직통전화	남북직접사회담연락사무소간	2	1971.9.22
	남북연락사무소간	2	1992.5.18
남북한 관제통신망	대구-평양관제소(판문점경유)	2	1997.11.19
	대구-평양관제소(위성통신)	1	1998.2.17
남북군당국간 직통전화 (철도·도로 연결공사용)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공사 상황실간	2	2002.9.24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 상황실간	2	2003.12.5
합 계		33	

3. 통항

2004년 남북간 선박운항은 편도기준 총 2,124회로 전년대비 5.0% 증가하였다. 이중 남한에서 북한으로의 운항은 946회로 전년대비 7.8% 증가하였고, 북한에서 남한으로의 운항은 1,178회로 전년대비 2.9% 증가하였다. 또한, 남북간에는 물자 및 인원 수송을 위해 인천~남포, 부산~나진, 속초~양화간에 정기선이 운항중이다.

남북간 안정적 해상운송체계를 마련하고 해운분야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4년 5월에는 4차례의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을 통하여 합의된 「남북해운합의서」와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남북간 항공기 운항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시 최초로 남북 직항로를 운항한 이후 2000년 43회, 2001년 19회, 2002년 67회, 2003년 111회 운항하였다. 그러나 2004년에는 하반기부터 당국간 회담 중단 등 남북관계가 소강국면을 보이면서 운항횟수가 대폭 줄어 대북 구호물자 수송 등을 위해 28회 운항되었다.

【 남북간 간접연결 전화 현황 】

(2004.12.31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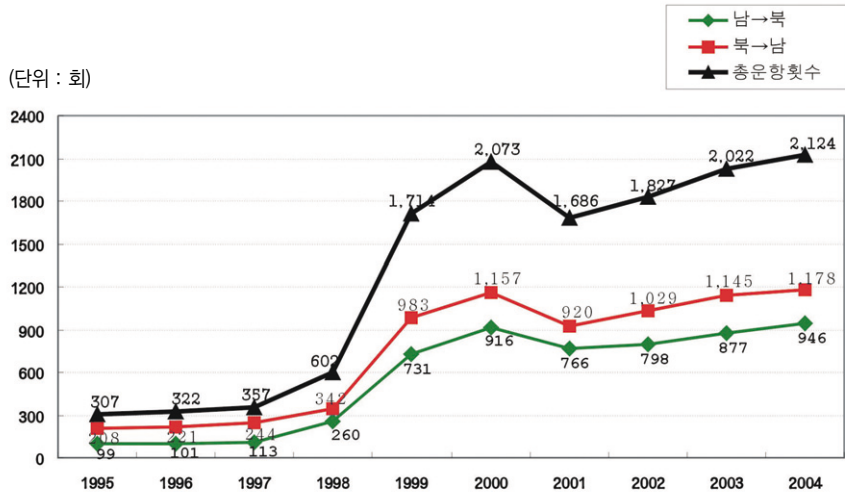
용 도	구 간	회선수	연결시기
KEDO 경수로사업용	한국~일본KDDI~인텔셋~평양~신포	8	1997.8.4
		2	2000.7.26
		6	2001.5.23
금강산 관광지원용	한국~일본IDC~인텔셋~평양~원산 ~온정~장전	6	1998.11.17
		2	1999.5.18
		2	2003.9.19
평양실내종합체육관 시설관리용	한국~일본IDC~인텔셋~평양	3	2000.11.21
개성 현대중기관리사무소용	한국~일본IDC~인텔셋~평양~개성	2	2003.12.15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용	한국~일본IDC~인텔셋~평양~개성	2	2004.12.24
합 계		33	

【 남북간 항공기 운항 현황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남 ➡ 북	20	8	33	55	14	130
북 ➡ 남	23	11	34	56	14	138
총운항횟수	43	19	67	111	28	268

【 남북간 선박운항 현황 】

(단위 :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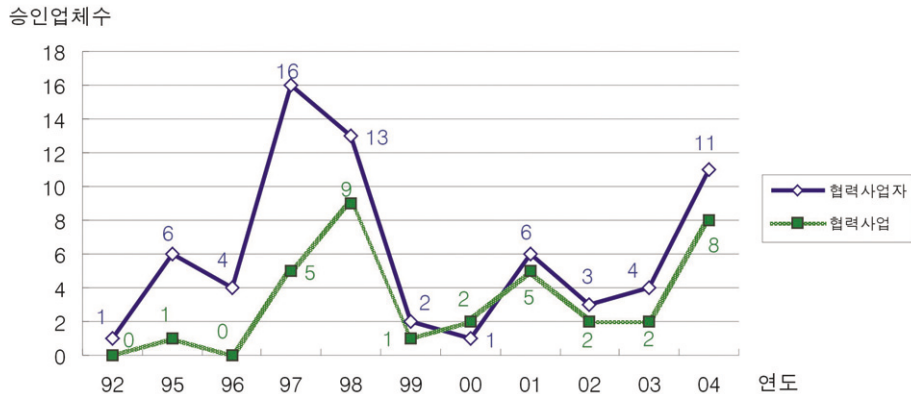
제4절 남북경제협력사업

1. 경제협력사업 추진현황

2004년에는 개성공단개발사업의 본격적 추진과 더불어 개성 이외 지역에서의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해 동안 11건의 경제협력사업자 승인과 8건의 경제협력사업 승인(개성공단개발 관련 사업 제외)이 이루어짐으로써 2003년에 비해 승인 실적이 크게 늘어났다.

1992년 이후 2004년까지 경제협력사업자 승인은 67개 업체, 경제협력사업 승인은 35개이다

【 연도별 경제협력사업(자) 승인현황 】



그러나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키려는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4년 7월 이후 북한이 남측 인사들의 평양방문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그동안 추진되어 오던 남북협력사업들이 탄력을 잃게 되었고 새로 승인받은 대부분의 사업들은 시작도 하지 못하는 등 남북경협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2000년부터 시작된 제조업분야의 일부 제품생산은 중단없이 이루어졌다.

녹십자는 2001년 7월 최초로 유로키나제 반제품을 반입한 이래 2004년까지 42만 달러 상당의 반제품을 반입하는 등 꾸준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평화자동차는 2002년 4월 남포에 자동차 조립공장을 준공한 이후 2004년 말까지 「휘파람」, 「빠꾸기」등 4개 모델의 자동차 571대를 생산하여 410대를 판매하였다.

그동안 상업용 물자의 육로 수송 제한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부진하였던 태창의 금강산샘물개발사업도 동해선 육로를 통해 샘물을 반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으며, 2004년 9월에 협력사업승인을 받은 안동대마방직은 북한에서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삼베제품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종 생산설비를 갖추어 종합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주)G-한신은 평양에 유리제품 생산 시설 건립·운영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투자규모를 290만불에서 560만불로 증액하고 공장 신축에 필요한 자재 반출 승인을 받았으나 평양방문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 등을 문제삼아 자재 반출을 보류한 바 있다.

2000년 3월에 경제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삼성전자는 2004년에도 소프트웨어 공동개발 사업 5개 신규 과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하나비즈닷컴은 2001년 북한과 합영으로 중국 단동에 「하나프로그램센터」를 설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 공동개발사업을 남측 인사의 방북 불허 조치와 무관하게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2004년도에 협력사업(자)승인을 받은 KT측은 북한측과 음성인식 무선자동교환시스템 보강 관련 음성데이터 구축 공동사업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 2004년중 협력사업(자) 승인 현황 】

사업자	사업상대자	사업내용	지 역	금 액 (승인기준)	사업자승인일 (사업승인일)
▲ (주)G—한신, (주)경평인터내셔널 (합영)	광명성총회사	식품가공업(김치, 된장, 상황버섯음료 등)	평양	240만불	'03.10.31 ('04.3.20)
▲ (주)안동대마방직 (합영)	새별총회사, 화성합작회사	삼베섬유제조	평양, 황해도	250만불	'04.2.18 ('04.9.17)
▲ (주)서진인터크루 (합작)	광명성총회사	핸드백 등 피혁제품 제조	평양	800만불	'04.6.8 ('04.7.7)
한국환경자원공사	광명성총회사	폐비닐 재생처리 공장 건립 · 운영	남포, 원산	110억원	'04.7.9
▲ (주)KT (공동연구)	조선컴퓨터센터	정보통신분야 공동연구 '음성인식 무인자동화 교환시스템' 보강 추진	서울, 평양	12.3만불	'04.7.23 ('04.7.23)
▲ 제일유통 (계약)	개선무역총회사	표고버섯 재배 및 가공	평양 순안구역 산림지대	54.6만불	'04.8.21 ('04.8.21)
▲ 상하씨엠 (계약)	개선무역총회사	농수산물 및 토산품 가공공장 설립 · 운영	남포	5만불	'04.9.17 ('04.9.17)
에스피메디텍	조선컴퓨터센터 (KCC)	복한 특허기술 이용 의료기기 생산	서울	-	'04.9.17
이원유통상사	수정금강산샘물회사	먹는샘물 제조 및 판매	황북, 신평, 평양	582만불	'04.9.17
▲ 브이케이(주)	삼천리기술회사	휴대폰분야 소프트웨어개발	중국 상해	43.3만불	'04.9.23 ('04.9.23)
▲ (주)제이유네트웍	광명성총회사	김치제조 공장설립 및 유통 · 판매	평양	160만불	'04.12.30 ('04.12.30)
(주)에너지극동개발	광명성총회사	사료 제조 · 판매	평양	-	'04.12.30

주)▲는「협력사업」승인까지 받은 기업임.

2.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00년 7월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과 8월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경의선 철도(서울~신의주) 및 도로(문산~개성)를 연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측은 2000년 9월 18일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공사에 착수하여 철도는 2002년 12월말에, 도로는 2003년 10월말에 완료하였다.

2002년 8월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경의선 동해선 철도 도로의 착공 등에 합의함에 따라 2002년 9월 18일 경의선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 착공식을 남북이 동시에 개최하였다.

착공식 이후 남북은 공사를 착실히 추진, 2003년 2월 11일 동해선 임시도로 개통식을 갖고 금강산 육로시범관광을 실시하였다.

2004년 3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남북은 철도 개통에 필요한 북측 역사 자재 제공에 합의하였으며, 2004년 6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공사 진행상황을 고려, 경의선·동해선 도로는 10월에 개통하고, 철도는 가능한 구간에서 시험운행을 거쳐 2005년말에 개통하기로 합의하였다.

【 남북 철도·도로 연결공사 개요 】

(2004.12.31 현재)

노선	종류	규모	거리(Km)	구간		공사현황
경의선	철도	단선	27.3	우리측(12km)	문산~MDL	'02.12.31 완료
				북측(15.3km)	MDL~개성	궤도부설 완료
	도로	4차선	12.1	우리측(5.1km)	통일대교~MDL	'03.10.31 완료
				북측(7km)	MDL~개성	공사 완료
동해선	철도	단선	27.5	우리측(9km)	저진~MDL	공사 진행중
				북측(18.5km)	MDL~온정리	궤도부설 완료
	도로	2차선	24.2	우리측(4.2km)	송현리~MDL	'04.11.30 완료
				북측(20km)	MDL~고성	공사 완료

남북은 경의선·동해선 도로연결 및 가능한 구간의 철도 시험운행에 필요한 공사를 합의된 일정대로 완료하였으나, 7월 이후 남북 당국간 회담이 중단되어 행사에 대한 공식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북측은 남북 당국간 회담이 재개되면 도로개통 및 철도 시험운행 행사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최종 입장을 통보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동해선 도로를 임시 개통하고 남북간 공식 개통 이전이라도 완공된 도로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그동안 사용을 제한해 왔던 이용대상을 인도적·상업적 목적의 인원과 물자 등으로 전면 확대하였다.



경의선 철도·도로



동해선 철도·도로

위와 같은 철도 도로 연결공사의 지속적 추진과 더불어 철도 도로 연결공사가 완료된 후 안전하고 정상적인 열차 차량 운행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였다.

2004년 4월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에서 「남북사이의 열차 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에 가서명함으로써 차량운행합의서와 더불어 철도·도로 연결에 따른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앞으로 남북간 철도·도로의 본격적인 이용이 이루어지면 남북간 교역에 있어서 장애요인이었던 물류비 절감, 수송시간 단축 등이 가능하게 되어 실질적인 경제협력이 활성화 될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

용과 함께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논의하기 위한 여건 조성으로 평화 통일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한반도 동서 양쪽에서 경의선은 개성공단 개발의 촉진과 인천공항의 허브기능을 강화할 것이고, 동해선은 금강산 육로관광의 활성화 및 설악산 연계 관광을 촉진하여 동해권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남북철도 연결 후 TKR-TSR의 연계를 구상, 2003년 10월 APEC에서 한·러 정상간에 합의한 남·북·러 3자 철도전문가 회의를 2004년 4월 모스크바에서 처음 개최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TKR-TSR 연결을 위한 기술적·실무적 사항들을 논의하였으며, 동 회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데에 입장을 같이 하였다.



2004년 6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주관하는 「ASEM 철의 실크로드 국제심포지엄」에 박정성 북한 철도성 대외협조국장을 비롯한 아시아·유럽의 25개국 민간·정부 관계자들이 참석, 향후 남북철도연결 사업의 진척에 따른 국제적 협력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남북철도와 대륙철도가 연결되면 러시아, 중국, 몽골, 북한 등의 값싸고 풍부한 천연자원 및 노동력과 한국, 일본 등의 기술력 및 자본이 결합되어 유럽연합(EU)과 같은 거대한 경제권 구축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3. 금강산관광사업

금강산 관광은 ‘보다 많은 접촉과 협력이 평화를 만든다’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바탕으로 시작되었다. 1998년 4월 30일 정부의 「남북경협활성화조치」가 발표되고, 그해 6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일행이 북한을 방문하여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금강산관광 및 개발사업에 합의하였다.

이어서 11월 18일에 관광선 금강호가 이산가족 등 826명을 태우고 동해항을 출항함으로써 역사적인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금강산관광은 2002년 들어 사업자의 자금난과 육로관광의 지연 등으로 인해 관광객이 급격히 감소하여 중단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금강산관광사업이 반드시 지속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2001년에 공동사업자인 한국관광공사에 900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대출하기로 결정하고, 2002년 4월부터는 학생, 교사, 이산가족 등에 대해 관광경비 일부를 지원하였다.

그러나 국회가 금강산 관광경비 지원예산을 삭감함으로써 2003년부터 경비지원이 중단되고, 사스



금강산육로관광

(SARS, 급성호흡기증후군)전염방지를 위한 북한의 검역강화로 인해 금강산 관광이 두달간 중단되는 등 또 다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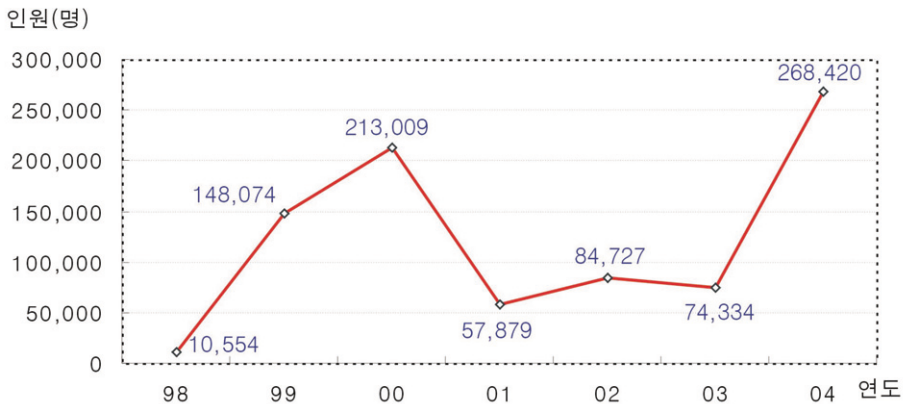
이러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육로관광을 조속히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02년 12월 11일 동해선 임시도로 연결공사를 완료하고 곧이어 2003년 1월 27일에는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를 타결하는 등 금강산 육로관광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주력하였다.

이어서 사전답사(2003.2.5~2.6)와 시범관광(2003.2.14~2.16) 및 일반인 대상의 육로관광 실시 등 본격적인 시행준비를 해나갔다.

그러나, 2003년 3월 2일부터 북측이 동해선 철도·도로 공사를 위해 임시도로의 사용을 중단하게 됨으로써 육로관광은 미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 이에 우리 정부 및 사업자는 북측에 육로관광을 조속히 재개하도록 촉구하였고, 남북한 당국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육로관광 재개에 합의하여 9월부터 육로관광이 실시되었다.

육로관광이 정례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당일관광, 1박2일관광 등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설악-금강권 연계관광도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2004년도에는 관광객이 월평균 2만명을 넘어 연간 총26만명에 이르는 등 금강산관광이 정상화의 추세에 들어서게 되었다.

【 연도별 금강산관광객 변화추이 】



육로관광이 정례화되고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자는 부족한 숙박시설과 위락·편의 시설을 확충하는 등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금강산 호텔을 개관(2004.7.2)하고 가족호텔 건립도 추진하였다. 또한 국제적 수준의 골프장(18홀)을 건설하기 위해 국내 투자를 유치하고 금강산 6주년 기념행사에 맞춰 착공식을 개최(2004.11.19)하였다.

한편 정부도 관광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여 온정각~

구룡연 구간 등의 도로를 포장(13.4km)하고 온정각-금강산호텔에 이르는 노후된 구간들의 도로를 보수(7.5km)하였다.

아울러 우리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북한의 변화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겨울방학 기간(2004.12~2005.2) 동안에 금강산 체험학습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중·고등학생 총 2만여명(인솔교사 포함)을 선발하여 금강산 체험학습을 시작하였다.

우리 학생들은 비무장지대를 지나 북한지역을 통과(약 11km)하면서 남북간 연결된 철도·도로 등을 눈으로 확인하는 등 생생한 남북관계 발전상황을 직접 보고, 금강산 현지에서 북한 관광안내원들과의 만남을 통해 북한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2004년 금강산 관광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금강산 관광을 통해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통일문제에 대한 무관심이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자가 약78%에 이르는 등 금강산 관광이 통일교육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4년 7월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 하에서도 금강산 관광은 중단없이 진행되고 있어 금강산 관광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평화산업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특구개발을 위한 제도적 환경도 착실히 마련되어가고 있다. 북한은 2002년 11월 「금강산관광지구법」을 발표한데 이어, 2003년 10월에는 금강산관광지구 경계를 확정하였다. 2004년 들어서도 「출입·체류·거주규정」과 「지구관리기관설립·운영규정」 등을 연이어 발표하는 등 특구개발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나타내었다.

특히 2004년 10월에는 「부동산 규정」을 발표하여 남한, 해외동포, 외국 기업 및 개인이 북한의 토지이용권을 취득하고 건물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금강산 지역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현대아산도 WTO(세계관광기구) 등과 협조하여 금강산관광지구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계획이 확정되면 현대아산은 이 계획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여 호텔, 골프장, 스키장 건설 등 본격적인 특구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금강산관광지구 종합개발계획이 금강산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경제

적 타당성을 갖춘 합리적인 방향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4. 대북식량차관 제공

정부는 2003년에 이어 2004년에도 북한주민의 식량난 완화를 위해 인도적인 차원에서 쌀 40만톤을 북한에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2004.6.2~5)에서 쌀 40만톤을 차관방식으로 제공하기로 하고, 7월 16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1억2천4백 만달러 범위 이내의 남북협력기금 사용을 의결하였다.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 주요 합의내용(2004.7.13)]

- 제공 규모 : 쌀 40만톤(국내산 10만톤, 외국산 30만톤)
- 차관단가 및 금액
 - － 단가 : 톤당 300달러
 - － 차관금액 : 1억 2,400만달러 범위내
- 차관조건 : 10년거치 20년 상환, 이자율 연 1%
- 차관계약자 : (남) 한국수출입은행 (북) 조선무역은행
- 수송일정 및 조건
 - － 식량차관 합의서 서명 이후 육로수송은 2주이내, 해로수송은 8주이내 첫 출발
 - － 하역항 : 남포항, 해주항, 흥남항, 원산항, 청진항, 송림항 등 6개항
 - － 하역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역·항만비용, 체선료 등은 북측 부담
- 분배투명성 보장
 - － 제공자 표기 : 쌀, 40kg, 대한민국
 - － 분배내역 통보 : 10만톤 단위로 인수일 30일 이내에 문건으로 통보
 - － 분배현장 확인 : 매 10만톤 전달완료 시점에서 동·서해 및 내륙지역에 각 1회이상 현장확인

식량차관 제공과 관련하여 2004년 7월 16일 한국수출입은행과 북한의 조선무역은행간 차관계약을 체결하였고, 우리측은 식량인도회사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북한은 식량인수회사로 수매양정성 산하 청길무역회사를 선정하여 인도 인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다.

수송은 쌀 40만톤 중 국내산 10만톤은 7월 20일부터 동·서해 육로를 통해 개성과 고성지역으로 각각 7만 5천톤과 2만 5천톤씩 수송하였고, 외국산 30만톤은 2004년 9월 3일 1항차 출항(태국 방콕항)을 시작으로 2005년 2월 6일 마지막 34항차까지 6개월에 걸쳐 남포, 송림, 원산, 홍남, 청진 등 총 5개 항구로 전달할 예정이다.

2004년 식량차관 제공은 1995년 대북 쌀 지원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육로수송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4년여에 걸쳐 완공한 경의선·동해선 도로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식량수송 경로를 내륙지역으로까지 확대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앞으로 인도지원물자, 교역물자 등의 육로수송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많은 북한주민이 식량수송 차량행렬을 목격함으로써 남한에서 쌀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게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약 3개월에 걸친 육로수송 기간동안 매주 360여명의 인원과 340여대의 트럭이 동·서지역 비무장지대를 넘나들며 군사적 긴장완화에도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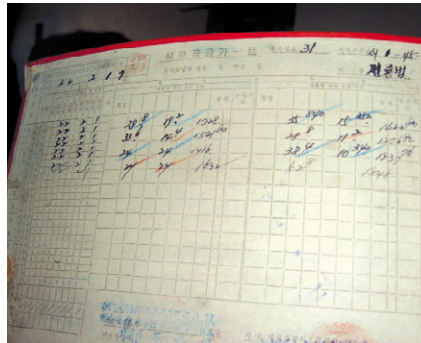
대북식량차관 첫 육로수송

한편, 정부는 식량의 분배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으로부터 지원된 쌀의 구체적인 분배내역을 통보받고, 우리측 인원이 분배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분배과정을 확인하도록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매 10만톤 단위로 10개 시·도, 194개 시·군 구역에 대한 분배 결과를 통보해 왔다. 2004년 10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분배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분배과정을 참관하는 등 분배현장을 확인하였으며, 나머지 3·4차 분배현장 확인은 2005년 1월과 2월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 분배현장확인 결과,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북한은 주민들에게 우리 쌀은 kg당 46원, 외국쌀은 kg당 36원씩, 1인당 하루 300~380g, 월 2회 공급하고 있었다.



식량분배 현장



식량분배 내역서

【 분배현장 확인 개요 】

구분	지역	일시	식량공급소	구분	지역	일시	식량공급소
1차	고성	10.14	조양 식량공급소	2차	남포	12.5	은덕 식량공급소
			온정 식량공급소				
	개성	10.15	제1 식량공급소		함흥	12.11	희상3호 식량공급소
			제4 식량공급소				

한편 북한 주민들은 남한 동포에게 감사를 표시하면서 쌀의 품질과 맛에 대해 만족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차관형식의 식량제공은 남북간 경제적 거래관계를 정착시키는 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남북화해협력을 증진시키고 민족공동체 형성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제5절 개성공단 개발

1. 개 관

가. 개발 개요 및 의의

(1) 개발 개요

개성공단 개발사업은 우리기업이 주로 입주하게 되는 북한내 공업단지 조성을 위한 대규모 경제협력사업으로, 북한 개성시 일대 약 2,000만평(공단 800만평, 배후도시 1,200만평)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3단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현재 1단계로 한국토지공사와 현대아산(주)이 공동으로 100만평 규모의 공단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공단 본격 가동에 대비한 사전 pilot project 차원에서 2만8천평을 시범단지로 조성하고 있다. 시범단지에는 15개 기업이 입주하게 된다.

2,3단계를 포함하는 나머지 1,900만평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자와 북측간 협의를 계속 진행중에 있으며, 단계별 개발계획의 기본 구도에 따라 1단계는 100만평 규모의 노동 집약적 중소기업 공단을, 2단계는 세계적 수출기지 구축을, 3단계는 중화학공업과 산업설비 분야의 복합 공업단지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계별 개발계획)

총계획

- 면적 : 총 2,000만평(65.7km²)
 - － 공단 800만평, 배후도시 1,200만평
- 단계별 개발계획 : 3차에 걸쳐 개발
 - － 1단계 : 100만평 규모의 노동집약적 중소기업 공단
 - － 2단계 : 세계적 수출기지 구축
 - － 3단계 : 중화학공업과 산업설비분야의 복합 공업단지
- * 배후신도시는 추후 협의를 통해 건설

1단계(100만평) 개발 개요

- 위 치 : 개성시 봉동리 일원
- 사업기간 : 2002년~2007년(준비기간 포함)
- 사 업 비 : 2,205억원
- 시 행 자 : 현대아산·토지공사
- 수행방식 : 북측으로부터 토지를 50년간 임차, 공업단지로 개발후 국내외 기업에 분양 및 관리
- * 28,000평을 시범단지로 조성, 15개 기업 입주



(2) 개발 의의

개성공단은 우리측 사업자가 공업지구의 토지를 북측으로부터 장기간 임대받아, 공단개발·분양 및 내외부 기반시설 건설을 주도하고, 북한 법인인 관리기관을 설립·운영하면서, 우리 기업이 공장설비·기술, 원부자재를 직접 투입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특수한 형태의 북한 경제특구이다. 개성공단 개발은 기존의 남북협력 형태와는 차원이 다른 전례가 없는 협력사업으로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고 있다.

먼저 개성공단은 우리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토지·인력이 결합됨으로써 남북이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고비용 구조에 따른 우리 기업의 어려움은 물론 북한의 경제난 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성공단은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긴장완화 촉진에 기여한다. 즉 개성공단은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으로서 남북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통일의 실험장이라 할 수 있으며, 개성공단 개발을 통한 남북경제협력 증진은 군사적 긴장완화로 연결, 한반도 안정과 평화는 물론 북핵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개성공단은 북한이 변화와 발전을 안정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개성공단 개발 성공시 북한의 실용주의적 정책이 더욱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개성공단은 중장기적으로 평화변영정책의 목표인 동북아시대 구상을 향한 교두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서울의 금융과 인천의 물류기능과 연계하고, 북한 중심지역인 평양과 남포를 연결하는 지역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간다면 개성공단은 동북아 경제협력의 거점으로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개성공단은 그 의미를 확대하면 남북경제공동체로 가는 징검다리로서 한반도 안정과 번영은 물론 동북아 지역내 안정과 협력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개성공단은 참여정부 평화변영정책의 대표적 사업으로서,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상생의 변영사업인 동시에 경제를 통해 냉전을 뛰어넘는 평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나. 추진 경과

개성공단 사업은 2000년 8월 22일 현대와 아태·민경련이 개성공단 개발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시작되었다.

2003년 6월 30일 개성공업지구 착공식을 거행한 이후 2004년 4월 13일에는 1단계 100만평 토지 임차료, 지장물 보상비 등 관련 계약(1,600만불)을 북측과 체결하였다.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공사기간과 중소기업들의 조기분양 요구를 반영하여 100만평 공단내에 우선 입주가 가능한 2만8천평 규모의 시범단지를 개발하기로 하고, 2004년 4월 23일 1단계 100만평 조성사업에 대한 통일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은 개발사업자는 1단계 부지조성 공사 및 시범단지 개발에 착수하였다.

이후 시범단지 분양에 따라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15개 기업이 6월 14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4차에 걸쳐 정부로부터 협력사업 승인을 받았다. 9월 10일 (주)리빙아트의 공장 건설공사를 시작으로 2005년 1월말까지 11개 기업이 공장건설에 착수 또는 완료하였으며, 이 중 리빙아트 개성공장이 2004년 12월 15일 처음으로

역사적인 개성공단 첫제품 생산 기념식과 축하식을 가졌다.

또한 10월 20일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이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라는 명칭으로 개소식을 갖고 현지 공단 관리 업무를 시작하였다.

북측도 공단개발이 경제회생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제도 정비 과정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2002년 11월 27일 「개성공업지구법」을 공포한데 이어, 2003년에 「개성공업지구개발규정」 등 7개의 법규를 제정하였고, 2004년에 「외화관리규정」 등 4개 규정을 제정하는 등 그간 총 11개의 하위 규정을 마련하였다. 북측은 나머지 회계규정도 조만간 제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남북은 2002년 12월 8일 개성공단 통관·통신·검역 합의를 채택(개성공단건설실무접촉, 2002.12.6~8, 금강산)한데 이어 2003년 8월 20일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해결절차, 청산결제 등 4개 경험합의서를 발효하고, 2004년 1월 29일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제1차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접촉, 2004.1.27~29, 개성)하여 안정적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왔다.

이와같이 2004년 한해 동안 여러 분야에서 많은 진전을 이룩한 개성공단 개발사업은 정부와 민간의 사업추진 체계와 법·제도가 마련되고, 1단계 부지 조성공사와 함께 시범단지내 공장 건설에 착수한 기업중 2개 기업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여 공동생산을 개시함으로써 2000년 현대아산과 북한이 개성공단개발에 합의한지 4년반 만에 결실을 맺기 시작하였다.

【 개성공단 개발 주요 일지 】

구 분	추진 내용	일자
사업자간 조치	○ 현대-北아태간 총 2,000만평 개발합의서 체결	'00.8.22
	○ 현대·토공, 사업 변경협약서 체결(1단계 토공 주도)	'02.12.26
	○ 토지임차료, 지장물 보상비 등 관련 계약 체결	'04.4.13
	○ 전력공급 관련 합의서 체결	'04.12.3
	○ 통신공급 관련 합의서 체결	'04.12.30
북측 조치	○ 「개성공업지구법」 발표	'02.11.27
	○ 「개성공업지구법」 1차 개정	'03.4.14
	○ 「개발」 및 「기업창설」 하위규정 제정·공포	'03.6.29
	○ 「노동」 및 「세금」 하위규정 제정·공포	'03.10.1
	○ 「관리기관」, 「출입·체류·거주」, 「세관」규정 제정·공포	'03.12.17
	○ 「외화관리」, 「광고」 하위규정 제정·공포	'04.2.27
	○ 「부동산규정」 제정·공포	'04.8.25
남북당국간 합의	○ 「보험규정」 제정·공포	'04.10.11
	○ 통관·통신·검역합의서 채택	'02.12.8
	○ 투자보장 등 4개 경험합의서 발효	'03.8.20
대내 조치 및 주요 동향	○ 개성공단·금강산 통행합의서 체결	'04.1.29
	○ 통일부, 현대·토공 협력사업자 승인	'02.12.27
	○ 개성공단 1단계 건설 착공식 개최	'03.6.30
	○ 통일부, 1단계 100만평 협력사업 승인	'04.4.23
	○ 시범단지 입주계약 체결(15개 기업)	'04.6.14
	○ 시범단지 부지조성공사 준공식 개최	'04.6.30
	○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창설준비팀 구성	'04.8.16
	○ 시범단지 1차(7개) 협력사업 승인	'04.9.8
	○ 시범단지 2차(4개) 협력사업 승인	'04.9.17
	○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출범	'04.10.5
	○ 시범단지 3차(2개) 협력사업 승인	'04.10.19
	○ 개성공업지구관리위 개소식 및 입주기업 공장 착공식	'04.10.20
	○ 개성공단 우리은행 개점식 개최	'04.12.7
	○ 리빙아트 개성공장 준공식 및 제품생산 기념식	'04.12.15
	○ SJ테크 개성공장 준공식	'04.12.28
	○ 시범단지 4차(2개) 협력사업 승인	'05.1.26

2. I단계 100만평 개발

가. 시범단지 조성

(1) 공장용지 분양

시범단지 분양을 위해 2004년 4월 8일 한국토지공사는 통일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수출입은행, 현대아산(주) 등 관계자를 중심으로 「분양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업체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사기준과 방법 등을 결정하였다.

2004년 5월 18일 일간지에 분양공고를 하고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분양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136개 업체가 신청을 하였다. 이중 15개 업체가 선정되어 6월 14일 한국토지공사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분양가는 조성원가 수준인 평당 149,000원으로 책정되었다.

(2) 공장 건설 및 운영

시범단지 분양을 받은 입주기업들은 이후 4차례에 걸쳐 정부로부터 협력사업 승인을 받고, 2005년 1월말까지 11개 기업이 공장건설에 착수 또는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개 기업들도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을 준비중이다. 특히 공장건설에 착공한 기업 중 9월 10일 제일 먼저 공장건축에 착수한 (주) 리빙아트는 12월 15일 공장 준공식 및 개성공단 첫제품 생산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출하된 냄비 1,000세트는 롯데백화점에서 인기리에 시판되었다. 이어서 (주) SJ테크도 12월 28일 공장 준공식을 갖고 생산에 착수하였다.

【 시범단지 입주기업 현황 】

(단위 : 평, 억원)

구 분	업체명	분양면적 (건축면적)	투 자 금 액	업 종	비 고
1차승인 ('04.9.8)	부천공업(주)	2,439(850)	45	전기공급, 제어장치	
	(주)매직마이크로	1,222(590)	30	전자부품, 영상장비	
	(주)대화연료펌프	1,221(611)	50.8	자동차부품	
	삼덕통상(주)	2,439(2,900)	49.6	신발제조	
	(주)태성산업	2,439(1,273)	60	플라스틱 제품제조	
	문창기업(주)	1,627(761)	38	봉제의복	
	용인전자(주)	2,439(1,134)	40	전자부품	
2차승인 ('04.9.17)	(주)리빙아트	999(590)	45	기타 금속제품	12.15 준공
	(주)SJ테크	1,626(783)	40	플라스틱제품	12.28 준공
	(주)신원	2,439(693)	37.9	봉제의복	
	(주)호산에이스	999(583)	26	일반기계제조	
3차승인 ('04.10.19)	(주)로만손	2,621(1,417)	155.8	시계 및 부품제조	
	(주)TS정밀	1,627(654)	28	반도체, 전자부품제조	
4차승인 ('05.1.26)	(주)제씨콤	1,778(606)	43	통신, 방송장비 제조	
	재영솔루텍(주)	2,439(821)	50	기타 기계제조	

한편, 공업지구에서 공장 건설허가와 준공검사, 건물 등록, 설립기업에 대한 창설승인 및 등록, 영업허가 등에 대한 권한은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있는 바, 이에 따라 입주기업들은 필요한 인허가를 관리기관으로부터 받게 된다.

또한 개성공업지구에 근무하게 되는 북측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50달러(임금

인상을 연 5% 이내, 임금의 15%를 사회보험료로 별도 납부)이며, 기업소득세로는 결산이윤의 14%(하부구조건설 분야, 경공업 분야, 첨단과학기술 분야는 10%로 우대)를 내게 된다.

개성공단에서의 북측 근로자 채용에 대해서는 입주기업이 북측 인력알선기업에 필요한 노력을 신청하고, 인력알선기업이 인력을 추천하면 기업과 추천된 개별 근로자 간에 채용계약을 맺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2005년 1월말 현재 북측 인력알선기업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입주업체는 공업지구관리기관과 현대아산을 통해 북측으로부터 필요한 인력을 공급받고 있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공업지구내 기업의 인력채용과 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권을 갖고 있다. 2005년 1월말 기준 개성공단에 고용된 북측 인력은 개발사업자인 현대아산(주)(하청업체 포함)이 부지정리와 건설 등에 1,073명을 고용하고, 한국토지공사(주)가 14명을 고용하였으며 (주)리빙아트 및 (주)SJ테크가 각각 269명, 48명을, 2005년 2월 입주를 목표로 핵심기술자를 교육중인 (주)신원 및 삼덕통상(주)이 각각 266명, 12명을, 관리위원회 및 편의시설에서 28명을 고용하여 전체 1,710명이 고용되어 있다.

개성공단사업이 성공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들 북측 근로자들에게 남측의 기계·설비에 맞는 기술을 습득시키고, 근면 성실과 고객중심의 서비스 정신을 이 해시키고 체득하게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공업지구관리기관과 입주기업 주관하에 기초적인 직무안내와 각 기업별로 요구되는 기술연수를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이들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근무, 임금, 퇴직 등 노무관리는 「개성공업지구노동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나, 동 노동규정의 내용은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추후 세부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편의시설 설치

「개성공단 관리기관 창설준비위원회」는 2004년 9월 8일 은행입점 제안서를 제출한 6개 은행에 대해 심사를 거쳐 「우리은행」을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개설할 은행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11월 2일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우리은행이 12월 7일 시범단지에서 개점식을 갖고 은행업무를 시작함으로써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남측 인원에 대하여 송금, 환전, 계좌관리 등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개성공단내 점포 설립은 경수로 사업을 위한 금호부지 점포 설립 승인('97.11 외환은행)에 이어 두번째 북한내 은행 지점 개설이다.

또한 정부는 11월 9일 편의점인 훼미리마트 지점 설립 승인에 이어 11월 19일 사단법인 YMCA 그린닥터스 및 아라코(주)에 대해 각각 개성공단내 응급의료시설 및 식당 설치·운영을 위한 협력사업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아라코(주)는 12월 10일 급식사업을 개시, 훼미리마트는 12월 16일 편의점을 개점, YMCA 그린닥터스의 의료시설은 2005년 1월 8일 진료를 시작하였다.

나. 본단지 개발 추진

(1) 부지조성 공사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 공단개발사업은 2004년 4월 13일 개발업자가 북한과 토지임차료·지장물 철거비 등 비용으로 총 미화 1,600만달러를 지불하는 내용의 토지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4월 23일 정부의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후 부지조성 공사를 착수한 이래 2005년 1월말까지 약 47%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2) 내부 기반시설 공사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의 주요 기반시설은 용수시설, 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단지내 시설(도로, 상·하수도, 녹지, 특수시설물), 그리고 외부기반시설인 전력, 통신시설 등으로 정부는 개성공단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공단 수준에 맞춰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개성공단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2006년도 말까지는 모든 기반시설이 준공될 수 있도록 용수시설, 폐수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등 내부 기반시설의 건설비용

1,095억원은 남북협력기금에서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2004년 9월 남북교류협력 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으며, 아울러 외부 기반시설인 전력·통신사업비 496억원에 대해서는 장기저리 대출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용수시설은 공단 북쪽 약 24km에 위치한 월고저수지에서 하루 4.5만톤을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북측에서 자체 시행기로 한 댐 축조 및 터널 공사 부분의 자재·장비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구하여 현재 북측과 협의 중이다. 또한, 북측의 설계도면 수준이 낙후되어 정·배수장, 도수관로, 송수관로 등에 대한 설계 보완이 필요하며, 설계보완이 끝나는 2005년 상반기에 공사에 착수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다.

폐수처리장은 1단계 지역 내에 7천평 규모의 부지에 하루 3만1천톤 처리시설 규모로 설치하기 위하여 2005년 3월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2003년에 북측에서 공단 폐기물은 책임지고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1단계 토지이용계획에 시설 부지를 반영하지 않았으나 2004년 5월 북측이 폐기물처리가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해옴에 따라 2만평(매립시설 17천평, 소각시설 3천평) 규모 이상의 부지확보를 위한 위치선정 문제가 대두되었다. 2005년도 상반기 중 부지문제를 해결하고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하반기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중에 있다.

단지내 시설인 도로, 상·하수도는 2004년 6월 설계를 완료하고, 2004년 8월 착공하여 2005년 1월말 현재 약 8%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특수시설물(교량 등)과 녹지시설은 설계용역 중으로 특수시설물은 2005년 3월 착공, 녹지시설은 200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시범단지에서는 본단지 기반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용수와 하수처리는 우선 입주업체에서 자체 해결하는 방식으로 계획하되, 기반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입주하는 기업의 불편 해소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동시설을 설치하였다. 즉 지하수(관정 5개소, 600톤/일)를 사업자가 개발하여 공급하고, 하수는 500톤 처리규모의 임시 처리장을 건설하여 처리하는 등 진입도로, 우수, 오수, 상수관 등의 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입주 및 공장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3) 전력 및 통신공급 협상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2002.8.27~30) 및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2002.10.30~11.2)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외부기반시설 건설은 상업적 차원에서 건설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개발사업자 및 기반시설 공급자와 북측 관계 실무자간 접촉을 통해 구체적인 문제들을 협의해 왔다.

개성공단의 전력공급과 관련해서 당국간 협상 및 사업자간 협상을 수차례 진행해 왔으며, 2004년 12월 3일 「한전」과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간 제7차 전력협상에서 양측은 「개성공업지구 전력공급에 관한 합의서」에 합의·서명하였다.

이에 따라 「한전」은 2004년 9월 30일 남측구간(약15km)에 대한 배전선로 공사를 기 완료한 가운데, 북측 구간 공사도 지난 2005년 1월 24일 착수하였다. 개성공단에 공급하게 될 전력은 시범단지는 2만2천9백V 배전선로로 1만5천kW를 공급하고, 1단계 100만평이 개발되는 2007년경에는 15만4천V 송전선로로 10만kW를 공급하게 된다.

개성공단 전력공급사업은 입주 기업들에 대한 전력공급 차원을 넘어 분단이후 처음으로 남측의 전력이 휴전선을 넘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통신공급 문제는 제1차 개성공단건설실무접촉(2002.12.6~8, 금강산)에서 남북간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면서 공단 내부 및 공단과 남측지역 사이의 우편 및 전기통신에 대한 기본원칙이 마련되었다. 이후 우리측 사업자인 KT와 북측간 통신공급을 위한 수차례 협의를 계속하여 2004년 12월 30일 제9차 통신실무회의에서 양측은 「개성공업지구 통신공급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통신망을 개성공단-개성(전화국)-문산으로 직접 연결하되, 시범단지 제공서비스로 전화, FAX를 우선 제공하고, 초고속인터넷은 시범단지에 통신서비스가 제공된 다음 협의기로 하였다. 또한 합의서 이행에 필요한 요금, 정산 등에 대한 부속합의서를 빠른 시일내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통신요금은 1분당 0.5달러 범위내에서 결정하기로 함으로써 입주기업들의 통신요금 부담이 완화되어 개성공단의 국제 경쟁력 증대와 남북간 교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개성공단사업 추진기반 구축

가. 관리 체계 정립

(1)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개성 현지에서 공단의 종합적인 관리·운영을 맡게 될 관리기관은 북한법에 따라 설립되는 기관으로,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 및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설립 운영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관리기관의 발족을 위해 2004년 6월 22일 이사장에 김동근 전 한국 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을 임명하고 동년 6월 29일 현대아산(주), 한국토지공사 등 개발사업자를 중심으로 「개성공단 관리기관 창설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준비위원회는 개성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준칙 등 세부규정을 수립, 관리위원회 창설과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개성공업지구법」상의 관리기관 명칭을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로 하기로 북측과 합의하고, 10월 20일 개성 현지에서 사무실 개소식 행사를 개최, 공식적으로 업무를 개시하였다.

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는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을 받았으며, 대출금은 관리위원회의 청사건립 및 운영비 등 225억원(’04년 46억)으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관리위원회는 기업창설 승인 및 등록, 영업허가, 건설허가와 준공검사, 토지이용권 및 건물 등록, 기업 경영활동 지원, 기반시설 관리, 출입증명서 발급, 환경보호, 소방대책 등 개성공단의 종합적인 관리·운영 업무를 수행한다.

관리위원회는 북측 법률에 따라 북측 지역에 설립되는 법인이지만, 우리측 개발사업자에 의해 설립·운영되어 북측 지역에서의 승인·등록·허가 등 행정업무를 우리책임과 권한으로 시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국내의 산업단지공단과 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특수한 형태의 기관이라 할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개소식

관리위원회는 앞으로 현대·토공 등 개발사업자 및 우리정부의 '지원단'은 물론이고, 북한의 개성공단사업 추진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도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입주기업의 생산·영업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관리위원회 사무실은 개성공단 시범단지 인근에 부속건물을 포함 1,150평 규모의 임시건물로 건축되었으며, 1단계 100만평 개발이 완료되는 2007년경에는 개성공단 중심부에 본건물을 건축, 완전한 면모를 갖추어 예정이다.

한편, 2004년 10월 27일 관리위원회는 개성 현지와 업무 연락 및 출입업무를 담당할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서울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의 현판식을 가졌다. 서울사무소는 개성공단으로의 인원왕래·물자반출입, 개성~서울간 및 관리위원회~지원단간 업무연락을 수행하고 있다.

(2)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

「사단법인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이하 '지원협회')는 관리위원회에 대한 업무지원의 효율화를 위해 국내 사단법인으로서 2004년 11월 3일 통일부의 등록단체로 등록을 하였다. 이 지원협회는 11월 8일 관리위원회와 업무지원 관련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11월 26일 지원협회에 대해 관리위원회에 업무지원을 위한 협력사업을 승인하였다.

관리위원회는 법적으로 북한법인에 해당되는 관계로, 지원협회가 관리위원회와 맺은 협약에 따라 정부 및 국내기관이 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기금) 확보·지원, 관리위원회 근무인원 파견, 입주업체 지원 등을 지원협회를 통해 가능하도록 하였다.

(3)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정부는 개성공단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04년 8월 16일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출범준비팀」을 구성하여 공단개발 운영대책 수립, 전략물자 반출입 문제해결, 입주기업 지원대책 강구, 기반시설 공사계획, 지원단 설립준비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2004년 10월 5일 통일부의 조직으로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을 설치하고 단장(국장급)과 4개과(지원총괄과, 운영지원과, 투자지원과, 건설지원과)의 조직으로 통일부·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노동부·건설교통부 등 8개 정부부처 27명의 인원이 개성공단 개발사업 지원업무를 총괄해 나가도록 하였다.

지원단은 개성공단사업 전반에 대한 총괄·조정업무를 담당하며, 노무관리·통행통관 절차 등 각종 제도 수립, 입주기업 지원, 투자유치, 기반시설 건설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지원단이 출범함으로써 개성공단 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종합적·체계적 지원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정부는 관계부처간 업무협조는 물론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지원단은 개성공단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관계 전문가 등 자문 기구의 도움을 받고 있다. 「개성공단 포럼」(이하 ‘포럼’)은 개성공단 개발·운영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반 정책·전략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는 등 개성공단 사업 추진과정에서 실질적 자문기구 역할을 하고 있다. 포럼은 2004년 8월 31일 개성공단 관련단체, 학계, 전문가, 개발사업자, 지원기관 등의 관계자 30여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포럼내에 운영위원회와 총괄·분양전략·인프라·인력문화 등 4개 팀을 구성, 기능별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단 개발방향 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의 장으로 기능하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성공단사업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하게 될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개성공단 운영 및 투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2004년 12월 29일 북한의 법제도·경제특구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전문가 6명을 선정하여 「개성공단 법률자문회의」(이하 ‘법률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다.

법률자문회의는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 법령의 제·개정, 해석·적용, 법적문제 처리방향, 법적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북측의 「개성공업지구법」 및 하위규정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세부규정(시행세칙·준칙) 등을 정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개성공단 법률자문회의 자문위원 명단 】

(위촉기간 : 2005.1.1~2005.12.31)

성 명	현 직	분 야
이철수	이화여대 법과대학 교수	노동법
유 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기 업
이영진	서울고등법원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제도연구법관 겸임)	사 법
이효원	법무부 특수법령과 과장(검사)	공 법
김형기	삼성금융연구소 금융산업1팀(정책제도) 수석연구원	상 법
김광길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과장(변호사)	현장실무

나. 지원 대책 마련

정부는 개성공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입주기업 대표 면담, 입주기업책임자회의, 개발사업자(현대아산(주)·한국토지공사)·관리위원회·지원단간 정례회의, 「정책고객과의 대화」 등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거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1) 전략물자 반출 문제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설비·자재 반출과 관련, 개성공단의 특수성(우리 기업이 최종사용, 우리측에 의한 공단관리), 다자간 국제협약인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가입국으로서의 의무,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른 국내기업 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전략물자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한국무역협회 산하에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를 설치하는 등 전략물자 반출에 대한 사전 통제체제를 구축·운영하고 개성공단으로 반출되는 물자에 대해서도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다양한 사후통제·관리체제를 수립하였다.

한편, 미국과는 EAR상의 수출통제품목 반출문제와 관련하여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2004년 8월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미국 방문을 통해 바세나르협약(WA) 등 전략물자와 EAR 관련 수출통제품목의 개성공단 반출 문제 해결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였다.

미국측은 기본적으로 개성공단 사업의 의의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이며, 지금까지 형성된 한·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관련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개성공단 물자 반출과 관련, 양국 실무자간 제1차 한·미실무협의회(2004.9), 미 상무부 주최 국제회의(2004.10) 등을 통해 한미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결국 개성공단 전략물자 반출문제는 원칙적으로 우리정부의 책임하에 사전·사후 통제관리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미국 EAR 관련 수출통제품목 반출에 대해서는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해의 폭을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성공단 전략물자 반출 통제체제에 대한 우리정부의 입장과 방침을 미국 이외 다른 우방국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설명, 양해를 구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다.

(2) 원산지 및 판로 문제

개성공단 제품이 해외 시장에 수출되는데 있어서 원산지 결정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제품의 원산지가 북한산으로 인정될 경우 상대적으로 고율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주요국에 대해서는 시장 진입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우선 단기적으로는 내수용으로 판매하거나, 수출제한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2004년 11월 29일 노무현 대통령과 리시엔룽 싱가포르 총리간에 실질적인 협상



리빙아트 생산제품

타결을 선언한 한국·싱가포르 간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싱가포르가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하여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제품과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이 협정은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싱가포르에 수출되는 개성공단 생산제품이 특혜관세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선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단지 조성이후 제품생산의 본격화에 대비하여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FTA상의 특혜관세를 받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해외 판로 확대 방안의 하나가 될 것이다.

아울러 개성공단 제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돕기 위해 국가별로 북한산 제품에 대한 진입규제, 쿼터규제, 관세율, GSP세율 등을 조사하는 한편 개성공단제품 홍보 및 마케팅 등 다각적인 판로 확보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3) 금융 지원

정부는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기업의 투자재원 부담을 덜기 위해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부천공업(주) 등 입주 기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을 대출키로 하였다.

총 투자 소요액의 약 70% 수준에서 대출하고 자기자금을 30% 정도 투입하도록 하였다. 대출조건은 일반 경험자금과 마찬가지로 대출기간은 최대 8년(3년 거치), 지원금리는 3.3%~4.0% 수준으로 지원키로 하였다.

다만, 개성공단은 「개성공업지구법」 및 「개성공업지구부동산규정」 등에 의하여 사유재산권이 인정되고, 토지, 건물 등에 대한 저당권 설정이 가능함을 감안, 개성공단 소재 자산을 정규담보로 인정하여 최대 50%까지 지원키로 하였다.

입주기업들이 건의한 '후취담보비율(토지 및 건축물 최대 50%, 제조설비 최대 30%) 상향조정' 건에 대하여는 남북협력기금 대출시 실 건축비 소요분에 대해 후

취담보비율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남북경제협력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는 손실에 대해서는 20억원 범위내에서 손실금의 90%까지 보전하는 손실보전제도를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함으로써 투자위험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4) 통행 등 절차 간소화

개성공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경의선의 군사분계선 출입에 따른 절차 간소화가 선결 문제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군사분계선 출입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2004년 7월 8일 「개성공업지구방문및협력사업승인절차에대한특례」(이하 ‘특례’)를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 방북승인 처리기한을 20일에서 10일로 단축 ▲ 방북신고를 ‘방문 7일전’에서 ‘4일전’ 까지 단축 ▲ 협력사업승인 처리기한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지구출입·체류합의서」 발효 후 신변안전 보장서류 제출 생략 ▲ 협력사업 승인신청 구비서류를 11종에서 2종으로 축소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기업인에 대한 현장 민원 편의 제고를 위해 통일부에서 해오던 방문증명서의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 방문신고 확인인 날인 등은 11월 23일부터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가능하도록 업무를 위임하였다.

이어서 2004년 12월 31일에는 ‘특례’를 개정, ▲ 북한방문승인 처리기한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 ▲ 단수 방북자의 신원진술서 제출을 생략 ▲ 출입계획 제출로 북한방문신고를 갈음하게 하는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였다. 이로써 입주기업의 통행관련 절차가 크게 개선되었다.

한편, 현대아산은 개성공단을 수시로 왕래하는 기업인들의 교통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2004년 9월 8일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9월 20일부터 시범기간을 거쳐 주 5일(월~금요일) 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남북 왕래자의 출입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운행횟수를 확대하는 문제를 북측과 협의하고 있다.

제6절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1. 개관

민간단체 중심으로 각계 각층에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회문화교류는 서로 다른 가치관과 문화양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 남북한 주민들이 이질감을 해소하고, 상호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 노동자, 농민, 학자, 대학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울과 평양을 오가는 공동행사가 성사되어 남북한 주민간 접촉 기반의 확대에 기여하였다. 특히 역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고구려사 문제 등에서 남북이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하였다. '02, '03년에 이어 개최된 '04년 6.15 4주년 기념행사는 서울이 아닌 인천지역에서 개최되어, 보다 많은 지역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행사로 치루어지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김일성 주석 조문문제, 탈북자 대량입국 등 남북간에 민감한 사안의 발생으로 인해 당국간 대화와 함께 사회문화 교류협력도 다소 소강국면을 맞게 되는 아쉬움을 남겼다. 다만 이런 상황속에서도 민간교류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고 간헐적으로나마 이어짐으로써 일련의 사태가 남북관계의 전면적인 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완충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2. 남북 사회문화 교류 추진

가. 남북공동행사

2004년은 민간단체의 남북공동행사가 쌍방향 교류행사로 정착된 한해였다. 3.1절 민족공동행사는 북측의 사정으로 남과 북에서 각기 개최되었고, 2003년에 사스(SARS)로 개최 되지 못하였던 5.1절과 6.15 남북공동행사는 평양과 인천에서 개



2004 남북노동자 5.1절 통일대회

최되었다.

특히 6.15 남북공동행사는 남북 공동행사로는 처음으로 지방에서 개최되어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행사로 진행되었으며, 농민통일대회는 2001년에 이어 금강산에서 개최됨으로써 정례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한편 2004년 하반기에는 김일성 10주기 조문문제 등으로 남북당국간 대화가 중단됨에 따라 민간교류에도 영향을 미쳐서 8.15와 개천절 남북공동행사가 개최되지 못하였다.

남북공동행사는 종교·노동·농민·청년·여성 등 다양한 민간부문 단체들이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례화 되었으며 남북간 화해협력 분위기 조성 및 통일의지 함양에 크게 기여하였다.

나. 학술교류

2004년 2월 평양에서 개최된 ‘일제 약탈 문화재 반환 공동학술 토론회’에서는 남북이 공동으로 민족사와 관련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더불어 남북이 합의하여 ‘남북역사학자협의회’를 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5월에는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협의회’의 서울행사 참가를 위해 북한위원회 대표단 9명이 서울을 방문하였다. 위안부 및 강제연행피해자 문제 등에 대해 남북이 한 목소리를 내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인한 고구려사 왜곡문제와 맞물려 북한의 고구려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는 더욱 관심을 끌었다. 북한 고구려 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한 사진 전시회 및 학술토론회가 9월 금강산에서 개최되어 향후 고구려 유적 보존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다. 종교교류

남북한 종교교류는 양측 종교단체간 접촉 뿐만 아니라, 종교시설에 대한 복원사업을 남북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조계종이 남북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금강산 신계사 복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대웅전 낙성식이 11월에 남북 공동으로 개최되었다. 이 행사에는 남측의 조계종 관계자와 불교신자, 그리고 북측의 조선불교도연맹이 참석하였다.

천태종이 추진하는 개성 영통사 복원 사업도 빠른 시일내에 추진되어 천태종에서 기와 40만장과 단청용 페인트 20톤 등을 지원하는 가운데 복원이 거의 완료되었으며, 조만간 낙성식과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기독교계에서도 남북기독교간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예장총회」에서는 평양 대동강구역에 400평 규모의 온실과 200평 규모의 예배처소를 건립하는 사업을 남북협력사업으로 추진, 온실을 건립하였고, 12월 현재 예배처소(평양제일교회) 건축을 위한 자재 1차분을 북측에 보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부연회에서는 2001년 이래 추진해온 「평양신학원」운영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북측의 기독교지도자 양성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다.

한국기독교장로회에서도 2004년 5월 금강산에서 총회장 등이 참석, 남북공동기도회를 개최하였고, KNCC(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는 3월 독일에서 개최된 독일교회 초청, 남·북·독일교회 선교대회에 참석, 남북간 선교문제 등을 협의하였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에서는 7월 「조선카톨릭협의회」와 창립30주년 기념 남북공동미사를 평양에서 개최기로 합의하고 150여명이 방북을 준비하였으나, 7.8 조문사태로 사업이 성사되지 못하였다.

「한국정교회」에서는 북측 「조선정교회」와 러시아의 지원으로 평양에 건축 중인 「정백사원」 건축을 위한 내부 시설용품 등 자재를 지원하면서 남북정교회간의 교류를 시작하면서 2005년도 「정백사원」준공식에 우리측 대표단이 참석기로 합의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하였다.

라. 문화예술교류

남북간 문화예술 부문 교류는 남북 공동전시, 애니메이션 공동제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는 2003년에 이어 2004년에도 서울에서 '남북공동 기획, 고구려' 전('04.4.9~6.20)을 통해 북한에서 제작한 고구려 유물 모사품을 전시하였다.

그리고 6.15 공동선언 4주년 기념 남북공동전시 '꽃으로 본 내 나라' 전은 남북의 꽃을 소재로 남북 작가들이 제작한 작품을 평양과 서울에서 교차전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004년 상반기 EBS에서 방영하여 호응을 얻었던 남북합작 애니메이션 '게으른 고양이 덩가'는 사업자인 하나로통신이 북측과 추가제작을 합의, 15편 추가 제작에 들어갔다. 뿐만 아니라 (주)민족네트워드는 북측 인력을 활용한 임가공 형태로 애니메이션 제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 방송교류

KBS는 2004년 6월에 다큐멘터리 '고구려는 살아있다'를 북한과 공동으로 제작하였다. 평양지역 고구려 역사유적은 KBS 취재팀이 맡고, 평양 이외지역의 유적은 북한 조선중앙TV가 촬영함으로써 남북 공동제작의 성과를 거두었다.

MBC는 2004년 6월에 취재팀이 평양을 방문하여 고구려 유적을 취재해 6월 24일 '살아있는 고구려'란 제목으로 TV프로그램을 방영하였다.

SBS는 2004년 2월 평양에서 개최된 '일제 약탈문화재 반환을 위한 남북공동 학술토론회' 취재차 방북하여 고구려 유적인 강서대묘를 취재 방영하였다.

한편, 방송위원회는 8월 13일부터 29일까지 아테네 올림픽 기간동안 올림픽의 주요경기 장면 및 남북 선수들의 경기장면을 북측에 중계해줌으로써 남북방송교류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바. 아테네올림픽 남북 공동입장

남북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개막식에서 사상 최초로 선수단이 공동입장하여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래,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2003년 아오모리 동계 아시안게임과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등 주요한 국제 체육무대에서 남북 공동입장의 기조를 이어왔다.

2004년 제28회 아테네 올림픽(8.13~29)에서도 남북은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개·폐막식에 공동입장을 실현함으로써 30억명이 넘는 시청자들을 포함한 세계인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아테네 올림픽에서는 공동입장 참가인원을 자유롭게 하는 등 제27회 시드니 올림픽때 보다 한 단계 진전했다고 할 수 있다.

제7절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1. 남북교류협력 관련 국내법·제도정비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1990.8.1)을 비롯하여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남북교류협력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이래, 남북교류협력 추진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를 정비해 왔다. 남북관계 상황변화에 맞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법령 적용과정에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고시·훈령 등 하위법령도 갖추어 왔다.

2004년에는 우선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을 개정(2004.1.28)하여 남북협력기금 대출제도 개선안을 시행하였다. 그 동안 경험기업이 제기해 온 애로 및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북한소재 자산에 대한 신용대출 특례를 신설하고 신용대출제도 및 대출조건을 개선하였으며, 손실보조제도 실시를 위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개성공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개성공업지구 방문 및 협력사업승인절차에 대한 특례」를 제정(2004.7.8)하여 개성공단 관련 방북승인 처리기간(20일 ➡ 10일)과 수시방북증 소지자의 방북신고 기간(방문 7일전 ➡ 4일전), 개성공단 관련 협력사업승인 처리기간(30일 ➡ 15일) 등을 단축하였고, 협력사업승인 신청시 제출서류도 대폭 간소화하였다.

이와 동시에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및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도 개정(2004.7.8)하여 매 귀환시마다 방문증명서를 반납하던 규정을 없애고, 수시방문증명서 발급신청시 ‘향후 1년 6월간의 방북예정서’ 제출을 폐지하는 등 방문증명서 관련 신청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였다.

또한, 남북간 청산결제거래 시행 합의에 따라 청산결제를 통해 대금결제를 하는 경우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게임물에 대해서도 승인대상 품목임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남북한 교역대상물품 및 반출·반입승인절차에 관한 고시」도 개정

(2004.7.8)하였다.

한편, 개성공단 시범단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입주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개성공업지구 방문 및 협력사업승인절차에 대한 특례」를 개정(2004.12.31)하여 방북승인 처리기간을 재차 단축(10일 → 5일)하고, 수시 방문증명서 소지자의 북한방문신고를 출입계획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행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추진여건의 변화, 남북간 제도화 진전상황 등을 보아가면서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남북교류협력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뒷받침해 나갈 방침이다.

2. 남북경제협약서 발효 및 제도화 추진

남북경제협력 제도화를 위해 2000년 12월 16일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등 4개 경제협약서를 타결한 이래 남북은 그 후속조치들을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합의를 이루어 나감으로써 남북관계는 이제 정치적인 합의의 수준을 넘어 법적·제도적 단계로 점차 발전되고 있다.

2004년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개성에서 진행된 남북경제제도실무접촉에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가 타결되어 개성공단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일련의 합의서 채택이 마무리되자, 정부는 4개 경제협약서 발효(2003.8.20)의 선례에 따라 그간 채택된 남북간 경제협약서들을 발효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총 9개의 경제협약서들은 북측이 내부절차를 마친 후 상호 발효통지문을 교환하면 정식 발효되며, 정식 발효될 경우 개성공단, 철도·도로연결 등 남북경제협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9개 경제협약서의 후속조치와 남북경제협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데 필요한 다른 제도적 장치들에 대해서도 북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나갈 방침이다.

【 9개 경험합의서 】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2002.12.8 채택	2004.9.23 국회본회의 통과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2002.12.8 채택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2004.1.29 채택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2002.12.6 채택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 · 운영에 관한 합의서	2003.10.12 채택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2002.12.8 채택	2004.12.9 국회본회의 통과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2004.4.13 채택	
남북해운합의서	2002.12.28 채택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2004.5.28 채택	

3. 남북협력기금의 관리 · 운용

가. 남북협력기금 조성 현황

남북협력기금은 1990년 8월 1일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을 근거로 남북교류협력의 촉진과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목적으로 1991년 3월 20일 최초로 정부출연이 이루어짐에 따라 설치 운용되고 있다.

남북협력기금은 주로 정부출연금과 운용수익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기타 일부 민간의 출연도 이루어지고 있다. 남북협력기금은 1991년에 정부출연으로 250억원을 조성한 이래 2004년 12월말까지 정부출연금 2조 964억원, 민간출연

금 23억원, 운용수익금 3,248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2조 3,527억원, 기타 수입금 56억원 등 총 4조 7,817억원이 조성되었다.

특히 2005년도 정부출연금 규모는 2004년도(1,714억원)에 비해 약 3배가 증가한 5,000억원으로 대폭 증액되었다. 2005년도 남북협력기금 정부출연금 증액은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의지의 표현이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 남북협력기금 조성 현황 】

(2004.12.31 기준, 단위: 백만원)

연도	정부출연	민간출연	운용수익 등	공자예수금*	계
1991	25,000	—	237	—	25,237
1992	40,000	—	5,118	—	45,118
1993	40,000	3	4,778	—	44,781
1994	40,000	1	9,387	—	49,388
1995	240,000	119	14,589	—	254,708
1996	100,000	132	18,410	—	118,542
1997	50,000	288	27,874	—	78,162
1998	—	—	40,280	—	40,280
1999	—	3	23,013	149,831	172,847
2000	100,000	542	30,392	254,852	385,786
2001	500,000	1,080	29,406	310,000	840,486
2002	490,000	78	42,036	505,000	1,037,114
2003	300,000	1	46,515	823,000	1,169,516
2004	171,400	1	38,371	310,000	519,772
계	2,096,400	2,246	330,406	2,352,683	4,781,735

* 공자예수금은 경수로 사업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조달한 금액

나. 남북협력기금 집행 현황

남북협력기금은 1999년까지는 비료·쌀 지원 등 정부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과

경수로 건설사업 등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5호의 '민족공동체 회복지원' 항목의 자금으로 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경제 및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이산가족 교류가 성사됨에 따라 기금지원 분야도 대폭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남북협력기금은 현재 크게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유·무상 지원과 민족공동체 회복을 위한 유·무상 지원으로 대별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구체적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다.

남북교류협력 무상지원 사업은 2004년 12월말까지 총 332억원이 집행되었다. 2004년도에는 인적왕래 지원 11억원, 사회문화협력 지원 31억원 등 총 42억원이 집행되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인적왕래 분야에 금강산 방문경비 지원 7억원, 6.15공동선언 4주년 국제토론회 지원 14억원, 남북노동자 5.1절 공동행사 지원 13억원 등 7건의 지원이 있었고, 사회문화교류 분야에 천태종 개성 영통사 복원사업 지원 5억원, 조계종 신계사 복원사업 지원 5억원,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원산농민기술풍습소 개·보수 지원 4억원 등 10건의 지원이 있었다.

남북교류협력 유상지원 사업은 2004년 12월말까지 총 1,388억원이 집행되었다. 2004년도에는 교역경협 자금으로 474억원(교역자금 대출 64건 137억원, 경협자금 대출 12건 237억원) 대출이 이루어졌다. 이는 2003년 187억원(교역자금 대출 79억원, 경협자금 대출 108억원) 대비 153% 대폭 증가한 규모이다.

민족공동체 회복 무상지원 사업은 2004년 12월말까지 총 1조 1,647억원이 집행되었다. 2004년도 이산가족교류 지원사업에 32억원이 집행되었으며,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제9차 및 제1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지원 14억원,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설계비 지원 13억원 등이며 총 5건의 지원이 있었다.

2004년도 인도적지원사업은 46건 1,225억원이 집행되었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비료 30만톤 지원 972억원, 용천재해 긴급복구 관련 자재·장비 등 지원 31억원, 유진벨 결핵퇴치 지원 10억원, UNICEF를 통한 어린이 등 취약계층 지원 12억원 등이다.

2004년도 경제분야 협력기반 조성사업은 총 11건이 집행되었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 604억원, 개성공단 기반시설 건설비 지원 25억원, 금강산 관광지구내 도로포장 지원 15억원 등이다. 2004년도 사회문화

분야 기반조성 사업은 아테네올림픽 남북선수단 공동입장 지원 6천2백만원 1건이 있었다.

민족공동체 회복지원 유상지원 사업은 2004년 12월말까지 총 1조 9,814억원이 집행되었다. 2004년도에는 대북 자재·장비 차관 대출 397억원, 대북 식량차관 40만톤의 일부인 1,020억원, 개성공단 관리기관 소요경비 대출 43억원, 경수로사업 본공사비 대출 870억원 등 총 5건 2,329억원이 집행되었다.

한편, 정부는 2001년부터 남북협력기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집행 이전에 기금의 사용내역 등을 국회에 사전보고 하고 있다. 이는 2000년말 국회의 남북협력기금 정부출연금 의결시 부대 의견에 따른 것으로, 2001년 1월 WFP를 통한 옥수수 10만톤 대북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2004년 11월 통일교육활성화를 위한 금강산 체험연수경비 지원까지 총 46건 1조 6,902억원의 승인사업에 대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사전보고를 하였다.

【 연도별 · 용도별 남북협력기금 집행실적 】

(2004.12.31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자금종류	91~99	2000	2001	2002	2003	2004	합계	
경상사업	남교협지 북류역원	인적왕래지원		277 (1)	253 (1)	23,686 (9)	1,142 (3)	1,056 (7)	26,413 (20)	
		사회문화협력지원	980 (3)	637 (1)	102 (1)		654 (2)	3,098 (10)	5,472 (16)	
		교역경협손실보조	1,268 (1)						1,268 (1)	
		소 계	2,248 (4)	914 (2)	355 (2)	23,686 (9)	1,796 (5)	4,154 (17)	33,152 (37)	
	민족공동체복지회지	이산가족교류 지원	986 (3)	2,830 (5)	1,298 (5)	2,029 (6)	2,996 (6)	3,158 (5)	13,297 (19)	
		인도적 지원사업	260,827 (13)	97,737 (9)	97,615 (25)	122,585 (30)	150,134 (36)	122,547 (46)	851,443 (119)	
		교류협력기반조성사업	4,882 (1)	15,994 (4)	89,850 (2)	36,789 (7)	76,318 (8)	76,096 (12)	299,927 (17)	
		- 경제분야협력기반조성	4,882 (1)	14,578 (2)	89,850 (2)	36,789 (7)	76,318 (8)	76,033 (11)	298,449 (14)	
		- 사회문화분야기반조성		1,416 (2)				62 (1)	1,478 (3)	
		소 계	266,695 (17)	116,560 (18)	188,763 (32)	161,402 (43)	229,447 (50)	201,801 (63)	1,164,668 (155)	
		합계	268,943 (21)	117,474 (20)	189,118 (34)	185,088 (52)	231,243 (55)	205,954 (80)	1,197,820 (192)	
	용자사업	남교협지 북류역원	교역경협사업 자금대출		500 (1)	46,072 (10)	36,157 (8)	18,710 (31)	37,377 (76)	138,816 (123)
			- 교역 자금대출		500 (1)	1,072 (9)	390 (5)	7,933 (29)	13,677 (64)	23,572 (108)
			- 경협사업 자금대출			45,000 (1)	35,767 (3)	10,777 (2)	23,700 (12)	115,244 (15)
소 계				500 (1)	46,072 (10)	36,157 (8)	18,710 (31)	37,377 (76)	138,816 (123)	
민족공동체복지회지		민족공동체복지회지 대출		86,740 (1)	18,955 (1)	127,325 (2)	192,053 (4)	145,957 (4)	571,030 (7)	
		경수로사업 대출	67,523 (1)	325,936 (1)	300,284 (1)	300,883 (1)	328,745 (1)	86,984 (1)	1,410,355 (2)	
		소 계	67,523 (1)	412,676 (2)	319,239 (2)	428,208 (3)	520,798 (5)	232,941 (5)	1,981,385 (9)	
합계		67,523 (1)	413,176 (3)	365,310 (12)	464,365 (11)	539,508 (36)	270,318 (81)	2,120,201 (132)		
총계		336,466 (22)	530,650 (23)	554,428 (46)	649,454 (63)	770,751 (91)	476,273 (161)	3,318,021 (324)		

▶ () 는 금사업 건수

【 남북협력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

(2004.12.31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금 액
조성 및 지출	조성(A)	정부출연	20,964
		민간출연	22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23,527
		운용수익	3,248
		기타수입금	56
		계	47,817
	지출(B)	경상지원	11,978
		운영비용	2,925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상환	7,147
		계	22,050
순조성액(A-B)		25,767	
조성(B)	투자자산	대출잔액(C)	20,417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600
	유동자산	예치금	3,395
		유가증권	1,355
	보유자산액(현보유자금*)		25,767(5,350)

* 현보유자금 5,350억원 = 조성액(A) 47,817억원 - 사용액(B+C) 42,467억원

아울러 정부는 교류협력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금지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2003년 2월에는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및 「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등 기금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소액 대출(30억 미만 교역자금대출, 50억 미만 경험자금대출)에 대해 관계부처의 협의 및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절차를 생략하는 등 지원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였고, 중소기업에 대한 포괄(실적한도)대출방식의 도입, 금리인하 등 지원조건을 개선하였다.

2004년 1월에는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및 「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등 기금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소요자금의 70~80%에서 80~90%로 대출규모를 확대하였고, 신용대출 대상 기업신용등급을 5등급에서 6등급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또한 신용대출 비율을 종전보다 10% 인상하고, 신용보증서 제출시 미보증금액에

대해 신용대출, 북한 소재 자산을 담보로 인정, 신용대출 실시 등 대출조건을 완화함으로써 교역자금 대출이 2002년 5건 3억9천만원, 2003년 29건 79억3천3백만원, 2004년 64건 136억7천7백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남북간 교역의 안정성 제고와 경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2004년 5월부터 교역분야 손실보조제도를, 2004년 9월에는 경협분야 손실보조제도를 실시하였다. 2004년 9월부터는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경협자금을 대출승인 하면서 개성공단 소재 자산을 정규담보로 인정하는 등 대출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개성공단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제도 개선조치를 통해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을 실질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남북경협이 보다 활성화 되고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남북간의 상호 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 조정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정부내 부처간 협의기구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 설치되었다.

동 협의회는 위원장인 통일부장관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관계부처의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도록 되어 있다.

최근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개성공단 건설사업 등이 본격화됨에 따라 남북간 건설교통 분야 교류협력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04년 10월 건설교통부 차관을 위원으로 추가 지명하였다. 이에 따라 2004년 12월말 현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은 12개 부처, 총 13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1989년 이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총 139회 개최하여 모두 25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고, 2004년에만 총 18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모두 36개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이중 「대북 비료지원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등 인도적 지원 부문이 11

건, 「개성공단 기반시설 건설비용 남북협력기금 지원」 등 개성공단 건설 관련 부문이 7건, 「남북협력기금 대출 및 손실보조제도 개선」 등 제도개선 부문 6건, 「이산가족 교류촉진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등 이산가족 교류 부문 3건, 기타 「통일 교육 활성화를 위한 금강산 방문경비 지원계획」 등이 9건을 차지하였다.

【 2004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현황】

회차	의결일자	안건	
		의안번호	의안
122	'04.1.15	218	남북협력기금 대출 및 손실보조제도 개선
123	'04.2.21	219	2003년도 남북협력기금 결산보고
124	'04.3.23 (220) '04.3.29 (221~223)	220	제9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
		221	대북 비료지원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222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223	WHO 등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125	'04.4.16	224	2004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 수정
		225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 총사업비 변경
126	'04.4.28	226	북측 용천재해 긴급구호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127	'04.5.10	227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228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128	'04.5.31	229	2005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
129	'04.6.25	230	개성공업지구 방문 및 협력사업승인절차에 관한 특례안
		231	남북한교역대상 물품 및 반출·반입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개정
		232	2004년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출입시설 신축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130	'04.7.2	233	제10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
131	'04.7.14	234	대북 식량차관 제공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132	'04.7.23	235	WFP를 통한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133	'04.9.8	236	개성공단 기반시설 건설비용 남북협력기금 지원
		237	개성공단 관리기관 소요경비 남북협력기금 대출
		238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기업(7개) 협력사업(자) 승인
		239	금강산 관광지구 내 도로포장 남북협력기금 지원
		240	아테네올림픽 남북선수단 공동입장에 따른 남북협력기금 지원
134	'04.9.17	241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기업(4개) 협력사업(자) 승인
135	'04.9.24	242	2004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 수정
		243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 승인
136	'04.10.19	244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기업(2개) 협력사업(자) 승인
137	'04.11.9	245	이산가족 교류촉진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246	대북 비료지원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247	용천재해 복구용 자재·장비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248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소요경비 남북협력기금 대출조건 변경 승인
138	'04.11.9	249	농산물 대북지원 수송비 보조를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250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금강산 방문경비 지원계획
		251	남북한교역대상 물품 및 반출·반입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개정
139	'04.12.24	252	개성공업지구방문 및 협력사업승인절차에 대한 특례개정
		253	UNESCAP의 대북 기술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제4장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제1절 남북이산가족 교류

제2절 인도적 대북지원

제3절 새터민(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4절 북한인권 · 환경문제 개선 노력

제4장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제1절 남북이산가족 교류

남북 분단상황이 반세기를 경과함에 따라 이산가족들이 고령화되면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남북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노력해 왔다. 고령 이산가족들에게 시급한 생사·주소확인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상시적인 서신교환과 상봉 확대 등 이산가족 교류의 정례화·제도화를 위해 장관급회담과 적십자회담 등 여러 형태의 남북간 대화를 통해 북측의 호응을 촉구하여 왔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도 부터는 이산가족 상봉이 금강산지역에서 설, 추석 명절과 6·15 남북공동선언일을 계기로 3차례 이루어짐으로써 사실상 상봉 정례화와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합의 등 교류 제도화 단계에 진입하였다. 그러나 2004년 하반기부터 전반적인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이산가족 교류를 위한 사업들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1. 당국차원의 교류

가. 이산가족 상봉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남북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합의한 이후 2003년까지 8차례의 이산가족 상봉을 실시하여 8,045명의 이산가족들이 상봉의 기회를 가졌다. 2000년 8월 1차 상봉부터 2001년 2월 3차 상봉까지는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 상봉 형식으로 실시되었으며 2002년 4차 상봉부터는 금강산에서 순차 상봉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3년에는 설, 6·15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추석 등을 계기로 3차례의 상봉이 이루어졌으며, 2004년에도 제9차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제1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7월 11일부터 16일까지 2차례 이루어져 현재까지 10차례의 상봉행사를 통해 총 9,977명이 상봉기회를 가졌다. 그러나 2004년 하반기부터 남북관계가 냉각되면서 상봉행사 실시가 지연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였다.

【 당국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현황 】

(단위 : 건)

구분	연도별	'85	'00	'01	'02	'03	'04	총계
생사확인		65	792	744	261	963	681	3,506
서신교환			39	623	9	8		679
방남상봉		30	201	100				331
방북상봉		35	205	100	398	598	400	1,736

(1) 제9차 이산가족 상봉

2004년 2월에 개최된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제9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3월말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산가족 상봉은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북측 이산가족 100명이 먼저 재남 가족 486명을 상봉하고, 이어서 4월 1일부터 3일까지 우리측 이산가족 100명과 동반가족 43명이 재북가족 235명을 상봉하였으며 북측에서도 최초로 동반가족 1명이 행사에 참가하였다.

(2) 제10차 이산가족 상봉

2004년 5월에 개최된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제1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6월에 금강산에서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북측이 쌍방 적십자간 접촉을 통해 일정 등을 재확정하자고 제의함에 따라 6월 5일부터 7일간 평양에서의 남북적십자간 접촉을 통해 7월 11일부터 16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우리측 이산가족 100명과 동반가족 49명이 먼저 재북가족 237명을 상봉하고, 이어서 7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북측 이산가족 100명이 재남가족 486명을 상봉하였다.

2004년도에 실시된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주요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산가족상봉

【 2004년 이산가족 상봉현황】

구 분	9차 상봉	10차 상봉
일정	3.29~4.3	7.11~16
상봉 횟수	단체상봉 1회 개별상봉 1회 참관상봉 1회 송별상봉 1회 동석식사 2회	단체상봉 1회 개별상봉 1회 참관상봉 1회 송별상봉 1회 동석식사 2회
참관	삼일포(금강산)	현대문화회관 교예단 공연관람(금강산)
상봉 가족수	남측 147명이 재북가족 235명 상봉 * 남측 가족보호자 동반 47명 북측 101명이 재남가족 486명 상봉 * 북측 가족보호자 동반 1명	남측 149명이 재북가족 237명 상봉 * 남측 가족보호자 동반 49명 북측 100명이 재남가족 471명 상봉
기타	방북단에 납북자 가족1명, 국군포로 가족 1명 포함	방북단에 납북자 가족 1명, 국군포로 가족 1명 포함

나.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교환

정부는 이산가족들이 고령화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생사·주소확인 등 시급하고도 손쉬운 사안부터 추진하면서, 나아가 서신교환과 상봉, 재결합으로 확대되어 이산가족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교환은 이산가족 교류의 기본적인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측은 이산가족찾기 신청자 수가 10여만명에 이르고 있는 현실을 감안, 빠른 시일내 생사·주소 확인 및 서신교환 규모를 대폭 확대해 나가자는 입장에서 북측과의 각종 회담과 접촉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설득하고 있다.

그동안 남북간에는 2000년 개최된 제2차 적십자회담에서 시범적인 생사확인

서신교환 실시에 합의한 이후, 2001년도에 2차례 생사·주소 확인사업을 통해 2,267명, 1차례 서신교환사업을 통해 남북 각각 300명씩 600명이 서신을 교환하였다. 그러나 이후 북측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더 이상 진전을 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10차례의 이산가족방문단 교환과정에서 총 21,679명이 생사를 확인하였으며 2차례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한 2,267명을 포함하면 총 23,946명이 생사를 확인하였다. 서신교환은 1차례 시범사업에서의 600건과 이산가족 상봉행사시 79건 등 총 679건이 이루어졌다.

다.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정부는 현행 이산가족 교류방식으로는 단기간내에 많은 이산가족들이 상봉 기회를 갖기에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2000년 제2차 남북적십자회담 부터 상설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을 북측에 제의하였다. 그 후 2003년 11월 제5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금강산 지역에 이산가족면회소를 우리측이 전담하여 건설하고 관리·운영 하기로 북측과 합의하여 2004년부터 설계 등 사전 준비작업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왔다.

현재 측량 및 지질조사 등 현장에서 실시하여 할 분야를 제외하고는 설계작업을 마무리 하였으며 향후 현장작업을 위한 북측과의 협의가 완료되면 2005년 부터는 공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빠른 기간내에 시설을 완공함으로써 더 많은 이산가족들이 상봉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민간차원의 교류

제3국을 통한 생사확인, 상봉 등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는 1988년 「7.7선언」 이후 조금씩 증가되어 왔다. 정부는 당국차원의 이산가족문제 해결 노력과 병행하여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보다 촉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이산가족들의 북한주민접촉 승인기간은 5년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산가족 1세

대는 신고만으로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산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사확인 80만원, 상봉 180만원, 교류 지속경비 40만원 등 교류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비지원 회수도 종전의 1 회에서 최대 3회까지로 확대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민간의 노력으로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는 상당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989년 민간차원의 교류가 시작된 이래 2004년 12월말 현재까지 이산가족들의 재북가족 접촉승인은 총 17,437건으로 이중 19%인 3,322건이 제3국을 통해 생사가 확인되었으며, 1,441 가족이 제3국에서 상봉하였다.

1998년부터는 개별적인 방북상봉도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2004년 12월말 현재까지 총 25건이 성사되었다. 2004년 한해 동안에는 생사확인 209건, 서신교환 776건, 제3국 상봉 187건, 방북상봉 1건이 이루어졌다.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교류는 주로 친척·친지 등 해외동포, 국내 민간주선 단체, 언론매체, 동향인 등의 주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류의 중개지역은 초기에는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이었으나 최근에는 대부분 중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매년 각 지역을 방문하여 이산가족 정책 및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절차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2004년에는 광주, 전주, 대구, 속초지역에서 실시한 바 있다.

【 연도별 이산가족 교류 현황 】

(단위 : 건)

구분 \ 연도별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총계
생사확인	35	127	132	221	135	104	96	164	377	481	447	208	198	388	209	3,322
서신교환	44	93	462	948	584	571	473	772	469	637	984	579	935	961	776	9,388
제3국상봉	6	11	19	12	11	17	18	61	108	195	148	165	203	280	187	1,441
방북상봉									1	5	4	5	5	4	1	25

3.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노력

2004년 12월 현재 휴전이후 납북된 자 중 미귀환자는 486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6.25전쟁 기간중 납북자는 당시 통계연감에 따르면 8만여명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1956년 6월 15일부터 8월 15일 기간중 대한적십자사가 실시한 실향사민 등록에는 7,034명이 등록을 한 바 있다.

한편 국방부는 6.25참전 행방불명자(실종자)를 1만9천여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 중에 미송환 국군포로가 상당수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귀환한 국군포로와 북한이탈주민 등의 증언을 통해 볼 때 2004년말 현재 국군포로 500여명이 북한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중 48명이 탈북과정을 거쳐 귀환하였다.

정부는 그동안 남북장관급회담과 남북적십자회담 등 각종 남북대화 채널을 통한 대북 설득 노력 등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세차례 남북장관급회담과 제5차 남북적십자회담('03.11.4~6)에서 납북자와 국군포로들의 생사·주소 확인작업을 진행할 것을 북측에 강력히 제기하였다.

다만, 북측이 납북자 및 국군포로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근본적인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이산가족교류에 포함시켜 생사확인·상봉을 추진하는 현실적인 접근방법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4년도 제9~1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시 5가족 21명이 상봉한 것을 포함하여 그간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해 19가족의 납북자와 국군포로 가족이 상봉하였으며, 88명의 생사를 확인하였다.

한편, 정부는 납북자가족모임, 납북자가족협의회,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등 납북자 관련단체들의 의견수렴 및 정부정책 설명 기회를 수시로 갖는 등 관련 단체들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문제해결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였다.

제2절 인도적 대북지원

북한에 대한 지원은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도주의 정신과 북한주민이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는 동포애 정신을 구현한다는 당위적 측면과 남북화해협력의 실현이라는 실용적 측면을 동시에 지닌다. 대북지원은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함은 물론, 북한주민의 생활고를 덜어주고 우리의 동포애를 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한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인도적 지원은 국제적으로도 지원대상국의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는 것이 기본원칙이며, 이러한 견지에서 정부는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합리적 범위내에서 성의껏 돕는다는 입장에서 북한의 식량사정, 남북관계 상황, 국제사회의 지원동향 등을 고려하면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대북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다.

【 대북지원 현황 】

(단위 : 만불)

구분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누계
한 국	정부	23,200	305	2,667	1,100	2,825	7,863	7,045	8,375	8,702	73,594
	민간	25	155	2,056	2,085	1,863	3,513	6,494	5,117	7,061	42,477
	계	23,225	460	4,723	3,185	4,688	11,376	13,539	13,492	15,763	116,071
국제 사회	5,565	9,765	26,350	30,199	35,988	18,177	35,725	25,768	13,932	16,323	217,792
총계	28,790	10,225	31,073	33,384	40,676	29,553	49,264	39,260	29,695	41,943	333,863

1. 정부차원의 지원

가. 직접 지원

정부는 비료·종자·농약 등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북한 식량난의 근원적 해결에 도움이 되고 지원의 효과와 분배투명성 확보 등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1999년에는 북한의 식량증산을 돕기 위해 최초로 정부가 구입한 비료 및 대한적십자사가 모금하여 구입한 4만톤 등 총 15만 5천만톤의 비료를 지원하였다. 이후 2000년도에 20만톤, 2001년에 20만톤, 2002년과 2003년에 30만톤의 비료를 당국차원에서 지원하였다.

2004년에도 당국차원에서 총 30만톤의 비료를 북한에 지원하였다. 북한은 제 13차 남북장관급회담(2.3~6)에서 봄철 비료 지원을 요청해왔으며 2월 25일 북한 적십자사 위원장 명의로 재차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결정하고 4월부터 6월까지 복합비료 16만톤, 요소비료 2만 8천톤, 유안비료 1만 2천톤 등 20만톤을 남북적십자간에 합의된 절차에 따라 전달하였다. 북한 적십자사는 6월 28일 우리측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여 왔다.

또한 북한적십자사가 9월 1일, 10월 4일, 10월 12일 등 3차례에 걸쳐 비료 지원을 요청해옴에 따라 정부는 10만톤 추가지원을 결정하고 복합비료 8만 1천톤, 요소비료 1만 4천톤, 유안비료 5천톤을 남북적십자간 합의된 절차에 따라 11월부터 12월까지 전달하였다. 이에 북한적십자사는 12월 24일 지원에 대해 감사표시를 전달해 왔다.

나.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북한은 1995년부터 계속된 수해와 가뭄 등으로 경제와 식량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었으며 1995년 국제사회에 처음으로 식량 지원을 요청하였다. 정부는 식량난을 겪는 북한동포들이 현실적인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1995년 대북지원을 시작

한 이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북한의 지원요청 이후 국제기구의 대북지원 사업도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 정부는 1996년부터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아동기금(UNICEF) 등 UN기구를 통한 긴급구호 차원의 인도적 지원활동에 참여해왔다.

정부는 2001년부터 북한의 식량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WFP를 통해 옥수수 10만톤을 지원하였으며, 2004년에도 옥수수 10만톤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12월말부터 지원을 시작하여 2005년 2월말까지 전달을 완료할 예정이다. 옥수수 포대에는 우리 정부가 WFP를 통해 지원하는 물자임을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하였다.

한편 북한의 말라리아 환자가 3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말라리아 발병 확산이 심각히 우려됨에 따라 정부는 말라리아 방제사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01년, 2002년 말라리아 약품과 모기장, 진단장비 등 각종 기자재를 국제보건기구(WHO)를 통해 북한에 전달하였다.

2003년에도 WHO를 통한 말라리아 방제사업을 지속하여 30만명분에 해당되는 약품과 기자재를 지원하였다. 2003년 11월 상해에서 개최된 WHO 말라리아관리 워크숍에 참석한 북측관계자는 말라리아 환자 발생이 감소했다고 발표하면서 우리측의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정부는 2004년에도 말라리아 방제사업을 지속하였다.

또한 2003년에는 북한 어린이의 심각한 영양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 발생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유엔아동기금(UNICEF)을 통해서 어린이 영양식, 의약품 등에 50만불을, 2004년에는 어린이 영양식과 의약품 지원을 확대하여 100만불을 지원하였다.

【 정부차원 대북지원 현황 】

(2004. 12. 31 현재, 일부는 정산중)

기 간	지원 규모	지 원 내 역
1995년	2억3,200만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산 쌀 15만톤 직접지원 - 1,850억원(1\$당 800원 적용)
1996년	305만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FP 200만달러(혼합곡물 3,409톤) - UNICEF 100만달러(분유 203톤) - WMO 5만달러(기상자재) - 24억원(1\$당 790원 적용)
1997년	2,667만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FP 600만달러(혼합곡물 9,852톤) - UNICEF 34만달러(ORS공장비용) - WFP 1,053만달러(옥수수 5만톤, 분유 300톤) - UN기구 980만달러 - WFP 400만달러(CSB 8,389톤), UNICEF 360만달러(분유 781톤), WHO 70만달러, UNDP 120만달러, FAO 30만달러 - 240억원(1\$당 900원 적용)
1998년	1,100만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FP 1,100만달러(옥수수 3만톤, 밀가루 1만톤) - 154억원(1\$당 1,400원 적용)
1999년	2,825만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료 11.5만톤 직접지원 - 339억원(1\$당 1,200원 적용) - 한적 및 정부 비료지원(3.30~6.22) 총 15.5만톤462억원
2000년	7,863만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료 30만톤 직접지원 - 944억원(1\$당 1,200원 적용)
2001년	7,045만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의 150만벌 직접지원(353만달러/46억원) - 비료 20만톤 직접지원(4,921만달러/638억원) - WFP를 통해 옥수수 10만톤 지원(1,725만달러/223억원) - WHO를 통해 말라리아방제 지원(46억원/6억원) - (1\$당 1,296원 적용)
2002년	8,375만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FP를 통해 옥수수 10만톤 지원(1,739만달러/234억원) - WHO를 통한 말라리아방제 지원(59만달러/8억원) - 비료 30만톤 지원(6,577만달러/832억원)
2003년	8,702만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료 30만톤 지원(6,698만달러/836억원) - WFP를 통해 옥수수 10만톤 지원(1,619만달러/191억원) - WHO를 통한 말라리아방제 지원(66만달러/8억원) - UNICEF를 통한 어린이 영양식·의약품 지원(50만달러/6억원)
2004년	11,512만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료 30만톤 지원(8,851만달러/1,028억원 상당) - WFP를 통한 옥수수 10만톤 지원(2,400만달러/264억원 상당) - WHO를 통한 말라리아방제 지원(67만달러/7.5억원) - UNICEF를 통한 어린이 영양식·의약품 지원(100만달러/12억원) - 용천재해 긴급구호 및 WHO 지원(94만달러/11.3억원)

2. 민간차원의 지원

민간차원에서는 1995년 이후 2004년말까지 총 5,109억원 상당을 지원하여 인도적 차원의 지원총액 13,012억원 상당의 37%에 달하고 있다. 초기의 민간지원은 대한적십자사가 국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기탁받은 물품을 국제적십자연맹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1997년 5월까지 모두 19차례에 걸쳐 496만 달러(39억 7천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지원하였다.

1997년 5월 26일 남북적십자간 제1차 합의서가 채택됨에 따라 민간차원의 지원도 남북 직접전달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지원창구는 대한적십자사를 단일창구로 운영하였다. 1997년 6월 남북적십자사간 합의에 의해 구호물품이 지원되기 시작한 이래로 1998년 12월까지 총 433억원 상당의 구호물품이 대한적십자사 창구를 통해 지원되었다.

1999년부터는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에 따라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된 민간단체도 독자창구로서 지원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민간단체 독자창구는 1999년 10개 단체로 시작한 이래 꾸준히 증가하여 2004년말 현재 33개 단체가 활발한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995년부터 2004년까지 민간차원 대북지원액은 5,109억원으로서 국제적십자사를 통해 40억원(0.8%),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1,499억원(29.3%), 독자창구를 통해 3,570억원(69.9%)을 각각 지원하였다. 2004년에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441억원, 독자창구를 통해 1,220억원 등 총 1,661억원의 대북지원이 이루어졌다.

대북지원의 내용도 초기의 식량위주의 일회성 지원에서 농업개발·보건·의료취약계층 지원 등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으로 발전하였으며, 지원품목도 농자재·농기구, 전문의약품·의료기기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정부는 보건의료, 어린이 등 취약계층 지원 및 농업개발 분야의 지원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2000년 7개 단체(7개 사업) 33.8억원, 2001년 12개 단체(15개 사업) 38.4억원, 2002년 14개 단체(18개 사업) 54.5억원, 2003년 16개 단체(16개 사업) 75.3억원, 2004년 23개 단체(25개 사업) 88.7억원 등 5년간에 걸쳐 총 290억원 상당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였다.

이 같은 정부의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민간차원 대북지원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지원 효과를 제고하는 한편,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민간의 대북지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분배확인 및 사업협의 등을 위한 방북인원도 꾸준히 증가하여 1998년 34명에서 1999년 49명, 2000년에는 144명, 2001년에는 384명으로 증가하였다. 2002년에는 직항로를 통한 민간단체 기증자의 현장확인 형식의 방북 4차례 921명을 포함하여 1,715명이 방북하였고 2003년에는 5차례 674명의 직항로를 통한 방북을 포함하여 1,670명이 방북하였다. 2004년에는 2차례 203명의 직항로 방북을 포함하여 총 1,950명이 방북하여 대북지원을 통한 남북간 인적교류 확대에 기여하였다.

정부와 민간은 대북지원이 10년째로 접어들면서 대북지원 방식의 전환 필요성을 인식하여 2004년 9월 1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북민협」 상임운영단체와 통일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를 발족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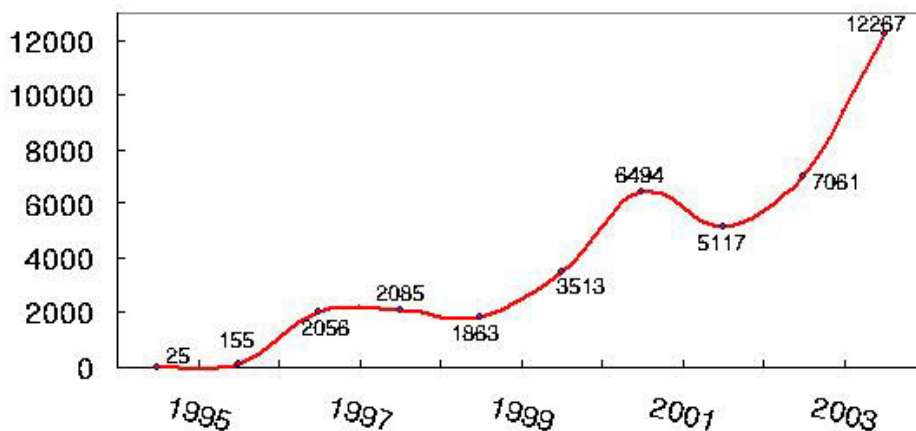
민관정책협의회는 민간과 정부간 포괄적 지원전략을 모색하는 정책협의 틀로 민관이 역할분담과 협력을 통해 상호 보유한 지원자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지원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민간단체 주요 지원분야 】

지원분야	사 업 내 용
보건 의료	결핵퇴치, 병원 현대화(어린이심장병센터 설치) 지원, 제약설비(정제·시럽제·환제 등 생산설비) 지원, 제약공장 복구(수액제공장 건설) 지원, 의료기자재 지원, 의약품(항생제·구충제·영양제 등) 지원
농업 개발	옥수수 종자개량 증산 지원, 감자종자 개량·생산(씨감자 재배시설 운영), 젖소 닭목장 설치 운영, 산란종계장 설치 운영, 젖염소 종축 유가공설비 지원, 채소온실 설치 운영, 농기계수리공장 건설 운영, 묘목생산시설(양묘장) 설치, 농기계(콤바인, 경운기, 이앙기, 손수레 등) 및 농자재(종자·비료·비닐하우스 등) 지원
취약 계층	영양식공장 설치 운영, 빵공장 설치 운영, 국수공장 운영지원, 육아원 운영 및 어린이 급식지원, 유아용품 생필품 지원 등

【 민간차원 대북지원 추이 】

단위 : 만달러



【 민간차원 대복지원 현황 】

(2004.12.31 현재)

연 도	규 모	내 역
'95	25만달러 (1.9억원)	- 담요 8천매
'96	155만달러 (12.4억원)	- 밀가루, 분유, 식용유 등
'97	2,056만달러 (182.1억원)	- 옥수수, 밀가루, 감자, 라면 등
'98	2,085만달러 (275.3억원)	- 밀가루, 옥수수, 식용유, 비료, 분유, 설탕 등
'99	1,863만달러 (223.6억원)	- 한적창구 : 식량 7,196톤, 비료 4만톤, 씨감자, 식용유, 라면 등 - 독자창구 : 식량 5,051톤, 비료 1,484톤, 의약품 등
'00	3,513만달러 (421억원)	- 한적창구 : 113억 2,992만원 - 식량, 비료, 한우 500두, 의약품 등 - 독자창구 : 13개 단체 307억 3,871만원 - 의약품, 의료장비, 의류, 농기계, 비료, 밀가루, 설탕, 분유 등
'01	6,494만달러 (844억원)	- 한적창구 : 286억원 - 식량 14,175톤, 비닐 552톤, 내의 159만벌, 의약품 등 - 독자창구 : 19개 단체 558억원 - 의약품, 의료장비, 의류, 농기계, 비료, 밀가루, 설탕, 분유 등
'02	5,117만달러 (641억원)	- 한적창구 : 90억원 - 동내의 118만벌, 라면 39만개, 분유, 의약품, 의류 등 - 독자창구 : 25개 단체 551억원 - 의약품, 의료장비, 의류, 농기계, 비료, 밀가루, 설탕, 분유 등
'03	7,061만달러 (847억원)	- 한적창구 : 70억원, 생필품, 밀가루, 농자재 등 - 독자창구 : 29개 단체 777억원 - 의료장비 및 의료용품, 농기계 및 농자재, 유가공설비 및 축산용품, 건축용 자재 정비, 밀가루, 분유, 설탕, 의류 등
'04	12,267만달러 (1,661억원)	- 한적창구 : 441억원 - 밀가루, 분유, 발효기, 운동화, 연탄 등 - 독자창구 : 33개 단체 1,220억원 - 밀가루, 설탕, 경운기, 온실비닐 등 농자재, 보일러, 학용품, 피복, 감귤, 타일 등 건축자재, 결핵약, 항생제, 의료설비 등
계	42,477만달러 (5,109억원)	

3. 용천재해 복구지원

2004년 4월 22일 오후 1시경 평안북도 용천역 인근에서 대형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 4월 23일 북한은 UNOCHA(유엔인도주의조정국), IFRC(국제적십자연맹), WFP(세계식량계획) 등 국제기구들과 중국을 비롯한 평양 주재 외국 대사관들에 사고 발생사실을 알리면서 용천사고 현장 사진과 동영상을 국제사회에 공개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다. 사고 발생 당시 북한을 방문중이던 이윤구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북한의 조선적십자회로부터 용천사고에 대한 긴급지원을 공식 요청받았다.



용천재해 복구물품 지원

우리 정부는 동포애와 인도적 차원에서 용천사고를 ‘우리의 불행’으로 인식하고 사고 다음날부

터 다방면에 걸쳐 긴급 대북지원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4월 23일 고건 국무총리는 용천 관련 비상 국무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고를 당한 북한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면서 관계부처에 조속한 지원대책을 마련할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통일부, 대한적십자사 등의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비상 지원 대책기구인 ‘용천재해대책 실무기획단’이 구성되고 세부 지원대책을 결정하였다.

한편 용천재해 지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호응도가 매우 높아서 개인, 종교인, 기업가 등 각계 각층으로부터 ARS 등을 통한 성금과 물품의 기탁이 줄을 이었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등 정치권도 북한을 돕는데 의견이 일치되었으며, 대북지원 민간단체들도 사태의 긴급성을 호소하며 직접 대북지원에 나서게 되었다.

4월 26일 남북간 전화통지문을 통해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의 긴급구호품 전달계획을 북측에 통보하였으며, 4월 28일에 의약품, 라면, 생수, 모포 등의 긴급구호품을 적재한 첫배가 출항하였다.

한편 같은날 용천재해 구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 실무회담을 북측에 제의

하였으며, 북측이 즉각적으로 수용함으로써 4월 27일 개성 자남산 여관에서 「용천 재난구호회담」을 개최하였다. 북측은 긴급구호품은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어느 정도 수요가 충족된다고 하면서 철근, 시멘트, 건설장비 등의 복구용 자재·장비 13개 품목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 회담을 계기로 우리의 대북 지원활동은 긴급 구호물품보다는 자재·장비의 지원에 비중을 두면서 본격화 되었다.

10차례의 115억원 상당의 긴급구호품은 인천-남포간 정기 해운항로를 주로 이용하고, 일부는 항공편을 이용하여 평양 순안공항으로 전달하였다. 247억원 상당의 자재·장비는 개성까지의 육로 및 남포까지의 해로, 중국 단둥까지의 해로를 경유해서 신의주까지 육로로 수송하는 등 품목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수송방법을 선택하였다. 이를 통해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북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용천 지역 복구와 주민들의 긴급구호에 큰 도움이 되었다. 북측은 8월 30일 용천피해 복구 지원에 사의를 표하면서 지원물자별 분배결과를 우리측에 통보하였다. 한편 이윤구 대한적십자사 총재 일행이 국제적십자연맹 관계자들과 함께 6월 5일부터 8일까지 방북하여 용천지역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우리 지원물자가 주민들에게 분배된 상황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고로 심한 상처를 입은 북한 어린이와 주민들을 위로한 바 있다.

용천재해 지원을 위해 각계 각층에서 기탁한 성금은 170억원에 달했으며, 130억원 상당의 긴급구호 물품이 기탁되었으며, 30억원 상당의 복구용 자재·장비가 기증되었다. 현금과 기탁 물품은 전부 대북지원에 사용하였으며, 부족분 31억원은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하였다. 정부와 대한적십자사는 국민성금의 투명한 사용과 대북지원 경험을 널리 알려 대북 긴급재난지원의 모범으로 삼기 위해서 「용천재해 지원백서」를 발간하였다.

【 용천재해 지원내역 】

구 분		금 액	세 부 내 역
정부, 적십자	긴급구호품	115억원 (962만불)	구호세트, 의약품, 식료품, 생수, 의류 등
	자재 · 장비	247억원 (2,060만불)	덤프트럭 20대, 굴삭기 5대, 휠로더 10대, 시멘트 50,000톤, 수지창 4만㎡, 피치 1,000톤 등
민간		283억원 (2,358만불)	의약품, 라면, 생필품, 담요, 의류, 학용품 등

제3절 새터민(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부는 국내에 입국한 새터민의 자립기반 조성 및 자활능력 배양을 통해 이들을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양성하는 데 정착지원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함께 민간단체의 지원활동도 이루어지고 있다. (‘새터민’은 법률상 용어인 북한이탈주민 대신 써오던 ‘탈북자’라는 용어를 2004년도에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선택한 대체 용어임.)

1. 국내입국 현황

새터민의 국내입국 규모는 1990년대 초반에는 10명 내외로 매우 적은 인원에 불과했으나 199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다. 2003년도에는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2004년도는 전년도보다 47.5% 늘어난 1,894명이 입국하여 다시 증가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 국내입국 현황 】

(2004.12.31 현재)

연도	'90 이전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계
인원 (명)	607	9	9	8	8	52	41	56	85	72	148	312	583	1,139	1,281	1,894	6,304

▶ 국내거주 6,019명, 사망 등 285명

2. 정착지원 체계

정부는 새터민의 성공적인 국내 정착이 남북공동체 형성의 시금석이라는 판단 아래 우리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각종 지원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새터민의 보호신청이 있을 경우 정부는 현지 공관 등에서 임시 보호조치와 함께 국내 입국을 지원하고 국내 입국 후 관계기관의 합동신문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호결정을 한다.

보호결정된 새터민은 3개월간 하나원에서 사회적응 교육을 받고 취적(就籍), 정착지원금 지급, 주거알선 등의 자립 자활에 필요한 초기 정착지원을 받게 된다.

거주지 보호지원은 새터민이 사회에 편입된 이후 부터 시작되는데 이는 정착지원과 신변보호로 구분된다. 정착지원은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북한이탈주민후원회와 사회·종교단체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직업훈련·취업알선·학교편입·자매결연 등의 각종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다. 신변보호는 경찰이 담당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새터민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19개 관계부처로 구성되는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정책·운영·교육훈련·정착지원 등 4개 분야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협의회 아래에 실무협의회를 두어 유관부처간 상호협조와 사전 의견 조율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가. 사회적응교육

정부는 국내로 입국하는 새터민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조기에 안정적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적응 교육을 위해 「하나원」을 운영하고 있다.

「하나원」은 본원과 분원을 합쳐서 동시에 400명, 연간 2,400명까지 보호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하나원은 취업 연계교육,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국사·세계사 교육 등을 강화하는 등 교육내용을 개선하고 2004년 10월부터 교육과정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였다.

하나원에서는 3개월 동안의 교육과정을 통해 이들이 우리사회에 적응하여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 수 있도록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중점은 일차적으로 탈북 및 제3국에서의 은신 도피 생활 과정에서 겪은 심리적 불안과 환경변화에 따른 정서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심리안정과 정서순화에 두고 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이해부족, 언어·사고·생활습관 등의 차이로 인한 문화적 이질감 해소에 역점을 두는 한편,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현장체험 교육과 사회편입 후 원활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새터민의 가족단위 입국이 급증함에 따라 여성·아동 및 청소년 대상의 별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들이 사회진출 후 학교 및 가정생활에 바로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여성을 위해 성남분원에서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기간 중 하나원 인근 초등학교에 취학시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에게는 별도의 학습지도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하나둘학교」를 하나원 내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

연령, 학력, 출신 등이 매우 다양한 새터민들에게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여 민간 프로그램을 공모중에 있다. 현재 정규 프로그램과 주말·휴일프로그램은 물론 일반 국민들과의 다양한 접촉기회를 가질 수 있는 1일 현장체험, 지방 유적지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종교·시민단체의 자원봉사 활동이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1999년 7월 「하나원」이 개소된 이후 2004년 12월까지 총 5,151명이 입소하여 4,703명이 사회적응교육을 수료한 후 사회에 진출하였다.

【 하나원 수료 현황 】

(단위 : 명)

연도	'99	'00	'01	'02	'03	'04	합계
입소	61	297	572	1,111	1,175	1,935	5,151
수료	60	297	572	1,111	1,175	1,488	4,703

나. 초기 정착지원

정부는 국내에 입국한 새터민이 자립·자활능력을 갖추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먼저 새터민이 초기 정착에 필요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착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정착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범위내에서 기본금과 가산금, 장려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다. 기본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100배 상당액의 범위안에서 세대 구성원의 수를 고려하여 1인에서 5인 이상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다. 가산금은 노령, 장애 등 취약계층에게, 장려금은 직업훈련, 취업 등 자립·자활하는 자에게 각각 월 최저임금액의 50배 상당액의 범위안에서 지급하고 있다.

이외에 임대주택 제공과 함께 주거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주거지원금은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1인에서 8인까지 구분하여 각 세대별 평형을 임대하는 데 필요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며, 지방 거주를 권장하기 위해 일정기간 지방 거주자에게는 지방 거주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 거주지 보호

정부는 새터민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보호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부산하 각 지방노동청과 지방노동사무소의 고용안정센터 46개소에 새터민 취업지원 창구를 개설하여 취업보호담당관을 지정하고, 전문적인 진로지도와 함께 직업훈련기관을 안내하고 취업 사업장을 연결시켜 주는 등 다양한 경로



새터민(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공청회

를 통해 취업을 알선해 주고 있다.

새터민이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훈련의 참여율을 높이고 전념할 수 있도록 훈련기간 중 직업훈련수당도 지급하고 있다. 이 결과 2004년도에 1,000여명이 직업훈련을 받았다.

또한, 2000년부터 새터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2분의

1을 2년간 지원해주는 고용지원금 제도는 새터민의 안정된 직장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2004년도에는 218개 사업장에 9억4천5백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지원이 시작된 2000년부터 총 44억4천2백만원이 지원되었다.

【 고용지원금 지급 현황 】

연도	'00	'01	'02	'03	'04	합계
업체 수	91	226	274	240	218	653
지급액(천원)	273,645	999,655	1,130,250	1,094,160	944,612	4,442,322

▶ 중복업체 제외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편·입학한 사람에게는 학비 전액을 면제해주고, 사립대학인 경우 정부가 면제한 학비의 반액을 지원해주고 있다. 또한 북한에서 취득하였던 학력이나 자격을 인정해줌으로써 이들의 자립·자활기반을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04년도에는 총 420명이 5억7천4백만원의 대학학비를 지원받았다.

그리고 사회진출 후 소득과 재산수준에 따라 사회안전망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지정하여 각종 의료비 면제혜택을 받거나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로 편입되도록 적극 주선하고 있다.

한편, 거주지에서의 정착지원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1999년 8월 1일부터 각 기

초자치단체에 거주지보호담당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거주지보호담당관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새터민이 지역사회에 순조롭게 편입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및 상담 등을 담당하고 있다.

【 지역별 거주 현황 】

지역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인원	2,204	341	261	225	107	246	81	1,008	138
지역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계	
인원	110	177	158	149	90	95	31	5,421명	

▶ 2004.12.31 현재 하나원 등 시설보호중인 598명 제외

라. 민간지원단체와의 연계체제

거주지에서는 정부 이외에도 사회·종교단체 등 민간단체에서 각종 생활상담 취업·결연 등 분야별로 다양한 특화된 지원을 해줌으로써 새터민의 안정된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에 의거 설립된 북한이탈주민후원회는 정부와 민간단체의 접촉창구 역할 및 민간단체의 통합·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각종 후원·결연단체간 네트워크화로서 1999년에 창립된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협의회」는 현재 총 63개 단체가 등록되어 아동·청소년, 정착지원, 지역복지, 해외 등 총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한편, 2001년부터 새터민 밀집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지원단체로 구성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가 현재 총 13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역협의회는 지역실정에 적합한 특화된 사회적응 정착프로그램, 지역사회의 안내 및 적응지원, 대상별 직업훈련 알선과 취업확대, 종합사회복지관의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2005년부터는 민간단체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정착도우미제가 실시된

다. 정착도우미는 새터민의 거주지 편입 초기 지역정보제공, 생활안내 및 상담, 복지관과의 연계 등 초기 정착생활을 돕는 역할을 담당한다.

3. 제도 개선

정부는 법 제정 이후 7년여의 기간이 경과하였고 입국 및 국내 거주인원의 급증 등 환경이 변화한 점을 감안하여 지원체계 전반을 재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2004년 7월에 정착금 지급제도를 중심으로 한 「정착지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여 12월에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 · 공포하였다.

【 정착지원 제도개선 주요내용 】

구 분	기존 내용	개선 내용
사회적응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대상 별도 교육기관 없음 ○ 사회적응교육 2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 설립 ○ 사회적응교육 3개월
초기 정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착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금 160배, 가산금 40배 ○ 영구임대주택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착금에 인센티브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금 하향(100배), 장려금 신설(50배), 가산금 상향(50배) ○ 국민임대주택까지 지원
사회 안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급여 우대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인과 동등 적용
취업 · 취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훈련 · 취업에 대한 인센티브 미비 ○ 지원기간 불분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훈련 · 취업에 따른 장려금제 신설 ○ 대학지원기간 5년으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대학 등 지원가능 대학 범위 확대
거주지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변보호 담당경찰이 거주지보호 업무까지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착도우미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변보호와 거주지보호 분리

또한, 새터민의 정착지원 시스템을 ‘보호’ 위주에서 ‘자립·자활’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거주지 실정에 밝은 지방과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종합대책」을 확정하였으며, 향후 관련 규정의 개정 및 제도의 개선·보완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제4절 북한인권 · 환경 개선 노력

1. 북한인권문제

민주국가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중요시하여 인권의 개념을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게 되는 천부적인 권리’로 정의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개개인을 단지 전체조직의 일부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국민’으로서의 의무만을 강조할 뿐 개인의 인권이 제약되고 있다. 또한 유일사상 지배체제로 인해 주민들의 시민적 · 정치적 자유권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의 자유 등 양심에 따른 의사표현도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에게는 우리식의 올바른 인권기준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인권의 기준이라는 관점에서 보편성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식 인권개념’에 따라 북한체제 하에서는 ‘인권이 고도로 존중되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참다운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향유할 뿐 아니라 경제 · 사회 · 문화 생활을 전적으로 보장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4년에도 유엔인권위원회 등 국제인권기구와 개별국가, 비정부기구(NGO) 등에 의해 북한인권문제가 활발히 제기되었다. 2003년에 이어 2004년도에도 제 60차 유엔인권위원회(3.15~4.23, 제네바)는 4월 15일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통해 북한 내의 조직적이고도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관한 계속되는 보고서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이 인권문제를 공개적이고 건설적인 자세로 다룰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유엔인권위 의장단과 협의후 북한인권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을 임명할 것을 유엔인권위 의장에게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6월 15일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특별보고관 운영을 승인하였고, 7월 11일 유엔인권이사회는 비탄 문타폰을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임명하였다. 동 보고관은 북한인권 상황을 조사한 뒤 2005년에 개최될 예정인 제 61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관련 특별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중간단계로서 10월 28

일 제59차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4대 인권협약 가입 등 긍정적인 면을 평가하면서 북한인권상황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광범위하게 제기한 뒤 북한당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시한 바 있다.

개별국가 차원에서도 북한인권에 관한 관심이 증대하였다. 미국 국무성은 4월 25일 발표한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9월 15일 발표한 ‘국제종교자유보고서 2004’에서는 여전히 북한을 종교의 자유가 없는 ‘특별관심대상국’ (Country of Particular Concern)으로 지정하였다.

특히,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미 하원에서 7월 21일 통과된 데 이어 상원에서도 9월 28일 통과된 후 부시대통령이 10월 18일 서명함으로써 발효되게 되었다. 동 법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2005년부터 2008년간 매년 2,400만불을 지원하고,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며, 북한주민의 미국망명 신청시 한국인으로 간주하지 않고, 지역인권대화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정부는 북한인권문제는 인도주의와 동포애에 입각하여 인류사회의 보편적 인권기준에 맞게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당위적 측면과 남북관계 개선과 이를 통한 북한의 변화 유도라는 현실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접근하고 있다.

(북한인권 관련 정부입장)

-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로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인권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 정부는 북한인권문제를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개선하는데 있어서 각 나라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접근방식을 전략적으로 검토·선택할 수 있다고 본다.
- 정부는 평화번영 정책을 통해 남북간 긴장완화와 화해협력을 실현하고, 그 과정에서 북한인권의 점진적, 실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 정부는 북한인권법 등이 6자회담 진전과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조화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다.

나아가, 정부는 현실적으로 북한주민에게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더불어 생존권과 경제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대북 인도적 지원 및 북한의 경제상황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정부는 북한의 인권실상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의 수집·정리 등 정보자료의 체계화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와 협조하여 매년 「북한인권백서」 및 「북한인권보고서 편람」을 발간해 왔다. 아울러 국내 NGO의 워크숍 개최 및 자료 발간 등 활동을 지원하고 국제인권회의에 참석하여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해 오고 있다.

2. 북한환경 개선

2004년은 북한의 환경개선 노력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의미 있는 한해였다. 그동안 환경오염 실태의 외부공개와 국제기구와의 환경협력사업에 소극적이었던 북한당국이 2004년 8월에 UNEP 및 UNDP와 공동으로「북한환경상태보고서 2003」을 작성·발간한 것은 그런 점에서 의미있는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 분야별 북한환경 상태 】

분 야	상 태
산림환경	○ 개간, 땔감용 남벌, 산불, 산사태 등으로 산림면적 감소 ○ 90년 산림법을 제정하고, 나무 심는 날(3월2일)을 지정하는 등 산림회복을 위한 노력 강화
수질환경	○ 북한의 수자원은 풍부하나 강폭이 좁고,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어려움 ○ 최근 인구증가, 하수처리 부족, 산업폐수의 증가로 수질오염 심화
대기환경	○ 산업화와 높은 석탄의존도로 인해 도시 및 공단지역에서 아황산가스(SO ₂), 질소산화물(NOx)등의 오염도 증가
토양환경	○ 홍수, 가뭄, 개간, 산사태 등으로 토질저하 ○ 훼손된 토양환경 회복을 위하여 산림복구, 제방설치, 토양법 제정 등의 노력 강화
생물다양성	○ 풍부한 생물종과 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산림황폐화, 토양침식, 자연재해 등으로 위협받고 있음.

자금 확보를 위한 신탁기금(Trust Fund)조성을 검토하고 있는바, 정부는 신탁기금 공여를 통하여 동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현재 환경과 관련된 남북협력은 주로 민간단체 차원의 묘목지원, 양묘장 조성, 병충해 방제 등 산림복구 분야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 민간단체의 환경분야 대북지원 실적 】

단체명	지원 실적
평화의 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엽송 묘목 25만본, 종자흙떡 163,500개, 종자 50kg, 기타 양묘용 자재('04.4) ○ 솔잎혹파리 방제관련 자재 및 고성군 양묘장 조성관련 자재 16종('04.6) ○ 태양광 발전설비 및 평양 순안양묘장 조성관련 자재('04.7) ○ 금강산 고성군 지역 2차 온실 및 노지 양묘장 조성 관련 건설자재('04.11)
남북강원도협력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솔잎혹파리 및 잣나무넓적잎벌 방제약품 등 방제관련 자재 26종('04.5) ○ 잣나무넓적잎벌 방제약품 등 방제관련 자재 10종('04.6)
대한적십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잣나무 묘목 30만주('04.3)

최근 당국차원에서는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의 일환으로 임진강 주변 산림복구 지원사업을 위한 묘목지원 문제를 협의 중에 있다. 이는 남북 당국차원에서 추진되는 최초의 산림복구 사업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정부는 민간단체 주도로 산림분야에 국한되어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남북간 환경협력 사업을 산림·수질·대기·토양·생물다양성 분야로 확대하고, 당국간 직접적인 환경협력 사업을 모색하기 위하여 북한과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한 과도기적 과정으로 UNEP나 UNDP 등의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적인 남북환경협력사업을 발굴·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들의 대북지원사업을 지원·육성하여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한 남북 환경공동체 형성의 기틀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제5장

대북 경수로사업 추진



제1절 추진경과

제2절 경수로사업 일시 중단

제5장 대북 경수로사업 추진

제1절 추진 경과

1993년 3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으로 야기된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북한 핵시설의 동결 및 해체와 2,000MWe 경수로 발전소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북간의 「제네바 합의(Agreed Framework)」가 1994년 10월 21일 서명·발효되었다.

「제네바 합의」에 따라 1995년 3월 한국, 미국, 일본에 의해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가 설립되고, 1995년 12월 KEDO와 북한간 「경수로공급협정」이 체결되었다. 이후 KEDO와 북한간에는 협상을 통해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 의정서」, 「통행 의정서」, 「통신 의정서」, 「부지 의정서」, 「서비스 의정서」, 「미지급시 조치 의정서」 등 경수로 공사 착수에 필수적인 후속의정서와 각종 세부절차가 마련되었고, KEDO는 1997년 8월 19일 함경남도 금호지구의 경수로 건설부지에서 착공식을 거행하고 부지준비공사에 착수하였다.

한편, 경수로 사업비 조달을 위해 KEDO 집행이사국들은 1998년 11월 9일 예상사업비를 46억달러(환율 1달러=1,100원, 물가상승률 연 2.1%)로 하는 「재원분담결의」를 채택하였다.



경수로발전소 건설 현장

우리정부는 실제공사비의 70%(예상사업비 46억달러 기준 32.2억달러, 3조 5,420억원)를 원화로, 일본은 10억달러(1,165억엔) 상당을 엔화로 기여하기로 하였으며, 미국은 중유비용과 KEDO의 여타 소요재원을 조달하는데 노력하고 KEDO 집행이사국들의 기여액이 부족할 경우 그 부족분 조달에 있어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경수로 사업의 재원이 마련됨에 따라 KEDO와 한전은 1999년 12월 15일 일괄 도급방식으로 1,000MWe 경수로 2기를 시공토록 하는 주계약(Turn Key Contract)을 체결하였으며, 2000년 2월 3일 주계약이 발효되고 북한이 2001년 9월 1일 건설허가를 발급함에 따라 본 공사의 최초 주요공정인 본관 기초 굴착공사를 2001년 9월 3일 착공하였다.

원자로 1호기 공사는 2002년 8월 최초 콘크리트 타설 이후 원자로건물 외벽공사 및 보조건물 기초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호기도 기초 굴착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공사현장의 부지 정지, 진입도로, 취·배수방파제, 물양장(부지해안에 KEDO측이 설치한 부두시설)용수 및 전력공급 설비 등 기반시설 공사와 함께 생활부지 내 근로자 숙소, 식당, 체육시설 등 편의시설도 마련해 나갔다.

공사 착공이후 KEDO와 북한은 「훈련 의정서」와 「품질보장 및 보증 의정서」를 체결·발효시켜 2002년 10월 새로이 북핵문제가 대두되기까지 「경수로공급협정」이행을 위한 13개 의정서 중 8개 의정서를 체결·발효시켰다.

또한 KEDO와 북한은 1998년 이후 연간 수차례의 각종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객화선(주1회)·바지선 운항, 통신망 운용(16회선), 직항공로 운용 등을 합의·시행하였다.

공사 진행과정에서 북측은 2000년 4월 북측근로자 200명에 대한 과도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100명의 근로자를 철수시켰으며, KEDO는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2001년 3월부터 우즈베크 인력을 투입하였다.

현장공사 진행과 함께 2000년 11월 체결된 「훈련의정서」에 따라 북측의 발전소 운영요원 122명과 규제요원 25명의 훈련을 우리측 시설에서 실시하고, 고위정책자 과정 19명의 우리측 시설 시찰도 시행하였다.

제2절 경수로사업 일시 중단

1. 사업 일시 중단 조치

2002년 10월, 북한의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문제로 북핵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고, 북핵문제 해결과 연계되어 추진되던 대북경수로 지원사업은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되었다.

KEDO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2002년 11월 14일 KEDO 집행이사회를 개최하여 북한에 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이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완전 폐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신뢰할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중유공급을 중단하며, 북한 핵문제 전개상황을 보아가면서 경수로 사업 등 여타 KEDO 활동도 검토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2002년 10월 북핵문제 발생이후 후속의정서 및 북한 노무인력 임금협상 등 북한과 진행되던 각종 협상이 중단되었으며, 발전소 완공 후 운영을 담당할 북한요원 훈련도 중단되었다.

KEDO는 또한 2003년 2월 3일 비공식 집행이사회를 개최하여 북한 핵문제로 인해 경수로 사업 추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북핵문제 해결의 진전을 기대하며 당분간 공사속도를 늦추어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방침 하에 전체 공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호기 원자로건물 최초 콘크리트 타설 및 발전소지역 내 부대건물 건설 연기, 원자로 격납용기 철판, 철근 등 보조 기자재의 발주계약 연기 등 불요불급한 공사의 축소 및 순연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한편, 2003년 4월 북경에서 개최된 미국, 중국, 북한간 3자회담에서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진전이 없었고, 2003년 8월 개최된 6자회담도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됨에 따라 미국, 일본, 한국 등 집행이사국간에는 경수로사업 장래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KEDO 집행이사국들은 수차례 공식·비공식 집행이사회와 양자협의 등을 통해 ‘속도조절 하에서의 사업지속’, ‘사업의 일시중단(suspension)’, 또는 ‘사업의 완전종료(termination)’ 등 경수로 사업의 장래문제를 본격적으로 협의하게 되었다.

이러한 협의 결과, 2003년 11월 21일 KEDO 집행이사회는 북한 핵문제로 인해 경수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2003년 12월 1일부터 1년간 사업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2. 사업 중단기간 중 보존 관리활동 시행

2003년 12월 1일부터 경수로 사업의 일시중단이 발효됨에 따라 경수로 사업은 설계, 건설, 제작 등 각 분야의 모든 공정이 원칙적으로 중단되었고, 사업재개에 대비한 보존·관리 조치에 들어갔다.

공사현장에서는 1, 2호기 원자로 건물 철근 및 철판 부식방지 조치, 공용설비의 굴착부위 침수 및 붕괴방지, 도방수로 법면 보호 등 기 완료된 시설물의 보호조치를 마무리하고 지속적인 보존 및 관리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제작중인 기자재는 품질보장 원칙과 비용 최소화 원칙에 따라 품목별로 보호·관리 조치를 취하였으며, 일부 품목은 품질확보 및 작업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 시점까지 공정을 완료한 후 보관조치를 취하고 있다.

부지현장과 제작중인 기자재의 안전한 관리·유지를 위해 부지현장 및 기자재 제작업체에 대한 사업진도 평가와 품질보증 검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1,500여명에 이르던 부지현장 상주인원도 2003년 12월에 우즈벡 인력이, 2004년 2월에는 북한측 인력 100명이 전원 철수하는 등 단계적으로 철수하여 2004년 12월말 현재 금호부지에는 KEDO 금호사무소 직원 6명을 포함하여 120여명의 인원이 체류하고 있다.

한편 북측은 KEDO측의 사업 중단에 대한 불만으로 손실보상을 요구하며, 공사관련 장비 등에 대한 반출을 금지(2003.11)하고, 2003년 12월에는 출입국절차 강화 등 중단기간 중 ‘잠정조치’ 시행 방침을 통보해 왔다.

이에 KEDO는 사업의 일시중단에 따른 보존·관리활동 및 인력과 장비 철수 등 중단기간중 KEDO와 북한간 협조관계 유지를 위해 KEDO 사무총장단이 방북(2003.11월 및 2004.11월), 협의하였으며, 2004년 12월까지 북한과 고위전문가회의(2회)와 실무회의(5회)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협상을 통해 북한이 제기한 ‘잠정조치’ 문제를 2004년 3월 「양해각서」 체결로 마무리하였다. 「양해각서」의 주요내용은 북측의 의정서 준수 및 체류인원의 신변안전보장, KEDO 인원의 부지 출입절차 일부 수정, 물양장 사용절차 합의 등이며, 이로써 중단기간중 공사현장 및 시설물에 대한 보존·관리 활동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북측의 장비반출 금지조치 철회를 위해 KEDO측은 사무총장단 방북과 실무협의를 통해 북측 조치의 부당성을 항의하고 조치철회를 강력히 촉구해 왔다. 우리 정부도 남북장관급회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 주요 계기 시 장비반출 금지조치의 부당성 및 향후 남북경협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지적하면서 협조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북측은 손실보상 없이는 철회가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여대의 장비가 부지내 일정 장소에 통합되어 보관·관리되고 있다.

한편 사업이 중단되기 전인 2003년 11월말까지 경수로사업은 시공 21.6%, 종합 설계 62.3%, 각종 기자재 제작 구매 43.2% 등 약 34.5%의 진척도를 보였으며, 사업비는 집행이사국간 「재원분담 결의」에 따라 조달하여 2004년 12월말까지 15.3억불을 투입하였다.

3. 일시 중단조치 1년 연장 결정

KEDO 집행이사국들은 사업의 일시중단을 결정할 당시(2003.11) 1년간의 중단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북핵문제 해결 진전 상황 등을 보아가며 경수로사업의 장래 문제를 협의·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정부는 중단기간 만료전(2004.11)까지 북핵문제 해결의 구체적 성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낮은 점을 감안, 경수로사업의 「중단조치 1년 연장」 방안을 집행이사국들에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등 이의

합의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KEDO 집행이사회는 2004년 11월 경수로사업 중단조치를 2004.12.1 부터 1년 연장하기로 결정·발표하였다.

정부는 건설현장 인원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KEDO와 북한 간 대화 채널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사업 재개를 위한 보존 및 관리 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관계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시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경수로사업 추진 일지)

- 1994.10.21 「북·미 기본합의」(제네바 합의) 서명
- 1995.1.23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설치
- 1995.3.9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설립
- 1995.12.15 KEDO-북한간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
- 1997.8.19 부지 정지공사 착공
- 1999.12.15 KEDO-한국전력간 「주계약」(TKC) 서명
- 2001.9.3 본관기초굴착공사 착공
- 2002.8.3 원전 1호기 최초 콘크리트 타설
- 2002.10.16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핵개발 의혹 대두
- 2003.12.1 1년간 사업 중단(suspension) 발효
- 2004.11.26 사업중단 1년 연장 조치결정·발표

제6장



통일정책의 지지기반 확충

- 제1절 국민 참여 확대
- 제2절 통일홍보의 다각화
- 제3절 통일교육의 내실화
- 제4절 국제협력강화 및 해외 홍보
- 제5절 북한 정보자료 제공 및 개방 확대
- 제6절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업무 혁신

제6장 통일정책의 지지기반 확충

정부는 통일정책추진의 가장 큰 원동력이 국민적 합의에 있음을 인식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주요 정책 추진과 관련, 국회를 비롯하여 여야 각 당과 사전·사후 협조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 각계각층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아울러 대북정책 추진 현황과 남북관계 현안들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제1절 국민 참여 확대

1. 정책고객과의 대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국민들의 직접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통일문제 및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넓히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열린 통일포럼」과 「장관-정책고객과의 대화」를 추진하였다.

「열린 통일포럼」(이하 포럼)은 장관과 관계 실국장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대북정책 및 남북관계 현안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정부와 국민 간 쌍방향 대화채널이다.

2003년도에 서울과 주요 지방 도시에서 각계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18회 개



장관-정책고객과의 대화

최한데 이어 2004
년도에는 여성단체
대표, 주한 외교사
절, 통일교육 전문
위원 등 직능별로
특화하여 상반기 동
안 총 6회의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970
명이 참석하였다.
포럼은 국민들의 남
북관계 및 통일문제

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돕고, 참여의식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적 합의 기반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

한편, 하반기에는 직·간접 정책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관-정책고객과의 대화」를 실시하였다. 장관과 관계 실국장이 정책 실수요 고객들로부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고객인 국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을 산출하고, 만족도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장관-정책고객과의 대화」는 개성공단입주기업 대표, 남북 사회문화 교류단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 총3회 실시하였으며, 이 밖에 부서장 주최의 정책고객과의 대화도 활발히 추진하였다.

「정책고객과의 대화」, 포럼 참석자들이 제시한 다양한 건의와 애로사항은 세부 정책 추진계획 수립 및 개선 시 적극 검토·반영함으로써 보다 나은 정책을 산출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2. 모니터링단 운영 및 국민여론조사 실시

2004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된 「통일정책 모니터링」은 국민들이 통일부의 정책을 상시 평가하고 그 의견을 정책과정에 환류시킴으로써 정책 품질을 향상시키고

한편, 주요 정책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분석 평가를 통해 정책추진의 효율성과 적실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 「통일정책 평가회의」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평가회의는 분야별 전문성, 직능별 대표성을 고려하여 정치·경제·법률·언론 등 각 분야의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4년에는 정기 평가회의 2회,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수시 자문 등을 통해 대북정책의 효과적 수행에 기여하였다.

【 통일정책 평가위원 명단 】

위촉기간 : 2004.3.1~2005.2.28

성 명	직 책	성 명	직 책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이숙자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길정우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영선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노진환	한국일보 주필	임영숙	서울신문 주필
민병석	남북어린이어깨동무 이사	임혁백	고려대 정외과 교수
박영규	통일연구원장	장달중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백종천	세종연구소 소장	제프리존스	변호사
서명선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조 형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양 건	한양대 법학과 교수		

또한 주요 대북 통일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2004년 정책자문위원회는 통일정책, 북한정보, 교류협력, 사회문화교류, 통일 교육, 남북회담 등 6개 분과위 6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4년 한해동안 총 19 회의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명단 】

위촉기간 : 2004.7.1~2005.6.30

통일정책 분과위 (11명)	북한정보 분과위 (8명)	교류협력 분과위 (14명)	사회문화교류 분과위 (11명)	통일교육 분과위 (12명)	남북회담 분과위 (11명)
양승함 (연세대)	이 호 (한밭대)	김영윤 (통일연구원)	고성준 (제주대)	전태국 (강원대)	장달중 (서울대)
백학순 (세종연구소)	현성일 (통일정책연구소)	조동호 (KDI)	서재진 (통일연구원)	김성운 (단국대)	윤덕용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이신화 (고려대)	윤덕희 (명지대)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신 울 (명지대)	김창환 (한국교육개발원)	구갑우 (경남대)
신성택 (국방연구원)	전현준 (통일연구원)	양문수 (경남대)	이강열 (국민일보)	윤인진 (고려대)	박명림 (연세대)
박종철 (통일연구원)	박형중 (통일연구원)	최연혜 (철도대)	박윤숙 (삼육대)	이원섭 (한겨레신문)	백승주 (국방연구원)
송문홍 (동아일보)	안희창 (중앙일보)	남영숙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이종훈 (동북아시아포럼)	정현백 (성균관대)	백영옥 (명지대)
김경숙 (공주대)	김병조 (국방대)	차은영 (이화여대)	이윤상 (나눔인터넷네셔널)	정숙경 (디지털문화연구소)	이봉철 (한남대)
김민정 (서울시립대)	정영순 (정신문화연구원)	남성욱 (고려대)	김숙림 (민화협)	김민전 (경희대)	이금순 (통일연구원)
김근식 (경남대)		오승렬 (한국외대)	오양렬 (문화예술진흥원)	신수범 (한국교육 학술정보원)	
전재성 (서울대)		안예홍 (한국은행)	이기현 (방송영상 산업진흥원)	이서항 (외교안보연구원)	
황정근 (김&장법률사무소)		박정원 (국민대)	김수일 (부산외대)	정진민 (MBC)	
		한기윤 (중소기업협동 조합중앙회)		이백규 (김&장법률사무소)	
		박상권 (전국경제인연합회)			
		유강근 (법무법인 백두)			

제2절 통일홍보의 다각화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북정책 추진 내용과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정확히 알려 국민적 합의기반을 넓혀 가는 동시에 국민과 함께 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를 적극 전개하였다.

우선 통일홍보의 대상이자 수요자인 국민들의 관심사가 계층 및 세대에 따라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내용 발굴에 힘썼다. 또한 홍보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방법과 매체의 다각화를 추구하였다.

1. 인터넷을 통한 홍보 강화

인터넷은 사용인구가 늘고 정보화가 진전된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홍보 매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높은 정보화 수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일방적 전달이 아닌 쌍방향 홍보가 되기 위해 인터넷, E-mail 등을 적극 활용하였다.

가. 통일부 홈페이지

1996년 12월 개설된 통일부 홈페이지는 대북정책, 남북관계 현안 및 북한동향 등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국문 및 영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관한 포털 사이트로 자리잡아 왔다.

【 2004년도 신규 허가법인 현황 】

2004. 12. 31

단 체 명	대 표 자	단 체 명	대 표 자
남북청소년통일교육진흥원	조동래	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	김성호
통일교육문화원	이성구	평화재단	최석호
북한사회문화학회	전숙자	평화협력원	정세현
한백정보문화연구원	김복산	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	이수성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	김동근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윤장현
북한인권정보센터	김상현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김중배
디팩터스비전	김봉기 · 장국철	등대복지회	인요한
남북청소년교류연대	설용수	한마음남북장학재단	윤석철
나눔인터내셔널	이윤상	평화3000	호인수
통일문화예술인협회	홍성덕	남북학술교류협회	강만길
NK인포메이션센타	허창걸	민족통일평화체육문화축전조직위원회	김원웅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한완상	지금우리가다음우리를	조홍규
국제사랑재단	김기수	한반도평화를추구하는모임	김봉옥
한민족상조협의회	김귀덕		

용 편의를 도모하고 통일부 업무를 분야별로 분류하여 업무현황 자료들을 수록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앞으로도 통일부 대표 홈페이지는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관한 포털 사이트로 위상을 확실히 하며 행정서비스의 실제 수요자인 국민 중심의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통일부는 북한자료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북한자료센터 : unibook.unikorea.go.kr」, 남북회담에 관한 종합적인 자료를 축적해 놓은 「남북회담자료 : dialogue.unikorea.go.kr」, 이산가족교류절차 등을 다루는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 reunion.unikorea.go.kr」, 남북교류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 : inter-korea.unikorea.go.kr」,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통일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이버 통일교육센터 : uniedu.go.kr」를 운영하고 있다.

1998년에 개통된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 : unibook.unikorea.go.kr」는 통일 및 북한관련 자료 10만 여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북한 및 통일관련 자료의 소장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북한영화 상영 및 북한실상 설명회 등 행사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03년에는 홈페이지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북한관련 DB」와 「북한/통일정보」 메뉴를 신설함으로써 통일부 발간물의 원문검색과 북한 및 통일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99년 서비스가 개시된 「남북회담자료 홈페이지 : dialogue.unikorea.go.kr」는 1971년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 개최된 각종 남북회담에 관한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수록되어 있다.

주요 메뉴는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하여 장관급회담, 고위급회담, 적십자회담, 경제분야 회담, 군사분야 회담, 사회문화 분야 회담 등 여러 갈래의 남북회담 진행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요약·정리해 놓은 「남북회담사」, 남북간 최종 합의서와 해설자료를 모아둔 「남북합의서」, 남북대화연표·남북대화 등 남북회담개최 현황자료를 정리한 「회담자료실」, 기타 판문점 현황자료, 「남북대화」 영문판인 「South-North Dialogue」, 남북간 합의서 영문판 「Intra-Korean Document」 등이다.

2004년에는 일러스트레이션화한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과 도서검색 및 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소장 도서의 체계적 관리를 기하는 한편 자료 이용자들이 관련 정보 검색을 하는데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산가족 정보통합센터」는 이산가족 정보교류 및 가족상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998년 12월에 개통되었으며, 「남북이산가족찾기」, 「그리운 가족」, 「가고픈 고향」, 「자료실」, 「열린마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4년 12월말 기준 12만 4천여명의 남북 이산가족찾기 신청이 등록되어 있으며, 2000년 8.15 상봉을 계기로 시작하여 2004년 말까지 10차례의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사업과 2차례의 생사확인·서신교환 추진의 일선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2004년 말에는 영상, 사진, 음성서비스 코너를 정비하고, 상봉행사시 선정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이버민원의 처리상태 알림기능으로 사용자 편의를 더욱 개선하였다.

향후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에 따른 면회소 상봉을 추진하게 되면 본격적인 이산가족교류를 지원할 것이며, 10만 이산가족대상 영상기록 사업을 추진하여 가족상봉 염원을 해소하고자 노력할 예정이다.

2003년 개통된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은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민원의 신청과 승인 등을 인터넷으로 처리하고, 물자 반출입 내역을 전자문서거래(EDI) 형식을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이다.

주요 메뉴로는 북한 및 남한 방문, 북한주민접촉, 협력사업, 교역물품 반출입, 수송장비 운행 등이 있으며, 신원진술서 등 각종 부가서류 제출을 비롯하여 신청, 승인, 조회 및 승인서 발급에 이르기까지 남북교류 관련 민원의 전 과정을 인터넷 상에서 처리하고 있다.

통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사이버통일교육센터 : uniedu.go.kr」는 통일교육에 있어서 시간과 공간상의 제약을 극복하고 통일교육 서비스를 능동적·적극적으로 제공하고자 2000년 10월 13일 개통되었다. 2004년에는 방문자수가 300만명을 돌파하는 등 통일교육 포털 사이트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 통일교육센터는 교사와 학생 등 통일교육 관련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청소년 통일배움터」 코너는 '통일만화', '가상 북한여행', '북한의

여힘으로써 공청회가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는 한편,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기여하였다.

전자공청회는 정보화 시대에 사이버공간을 활용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네띠즌 토론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국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쌍방향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 2004년 인터넷 전자공청회 개최 현황 】

구 분	개 최 기 간	주 제	의견제시 건 수	내용조회 건 수
제1차	5.24~6.6	통일문제에 대한 청소년층 관심 제고방안, 통일 이후 우리의 삶	1,137	16,619
제2차	9.13 ~ 9.26	탈북자 대체용어 제안, 소강국면인 남북관계 대책	2,029	29,095
제3차	11.24 ~12.7	2004년도 남북관계 평가 및 내년도 추진방향, 개성공단의 경제적 효과	1,233	35,910

또한 통일부는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개념을 국민들이 보다 친근하게 이해하고 국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한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다양한 사이버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다.

2004년에는 청소년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유도 및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통일 캐릭터 및 통일 캐치프레이즈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공모 결과 캐릭터 부문에서 190편, 캐치프레이즈 부문에서 총 872명이 응모하였으며, 여러 차례에 걸친 내·외부 심사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하였다. 캐릭터 대학(원)생 부문에 「피니 텍니」를, 중·고등 부문에 「설스 & 놀스」를 최우수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캐치프레이즈 부문에서는 「알고 있니? 선 하나만 지우면 더 많은 친구가 생겨」를 최우수상으로 선정하였다. 입상작품은 향후 통일부의 각종 홍보물 제작과 홈페이지 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이다.

앞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통일 및 남북문제에 대해 느끼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모전 등 다양한 사이버 이벤트를 정기

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 2004년 공모전 개최 현황 】

공 모 전	공 모 주 제	당 선 작	
○ 청소년 대상 통일 캐릭터 공모 (4.21~5.31)	○ 청소년들이 통일문제를 '즐겁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이미지 창출	○ 대학생 부문 - 「피니 티니」 - 「풍순이와 진돌이」 - 「무궁과련」	○ 중·고등학생 부문 - 「셜스&놀스」 - 「다숨」 - 「남이와 북이」
○ 청소년 대상 통일 캐치프레이즈 공모 (4.21~5.31)	○ 청소년들이 통일문제를 '즐겁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이미지 창출	○ 「알고 있니? 선 하나만 지우면 더 많은 친구가 생겨」 ○ 「이땅의 허리띠를 풀어요」 ○ 「할아버지 아버지의 소원 이제는 나의 소원」 ○ 「기다림이 아닌 다가감으로」	

2. 홍보자료 발간·보급

2004년도 홍보자료는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남북관계의 추진성과를 올바르게 알리는데 중점을 두어 제작·보급되었다.

각종 홍보자료는 수요자인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관심을 고려하고 세대별·계층별 눈높이에 맞춰 제작·배포하였다. 남북관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나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개발, 전국적으로 널리 보급하였다.

정보화 시대에 맞는 시청각자료의 제작·보급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하철 공익광고 방송을 통해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이미지 광고를 실시하는 한편, 「평화와 번영의 길」이란 홍보용 영상자료를 국문·영문으로 제작·배포하였다.

「평화와 번영의 길」 홍보자료에는 홍보용 영상자료 외에도 분야별 북한 알아보기, 남북관계 현황자료 등이 사진자료와 함께 수록되어 있다.

특히, 통일부는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통일문제가 어렵지 않고, 나의 실생활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몸소 느낄 수 있도록 「청

또한 주요 언론사 논·해설위원, 비정부단체(NGO), 통일부 등록 기자들과 계기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내용과 관련동향을 상세히 설명했다.

다. 통일부 인터넷뉴스 운영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현황을 국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게 알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대북정책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인터넷 뉴스인 「국정브리핑」내에 「통일부 뉴스」(unikorea.news.go.kr)를 운영하고 있다. 2003년 9월에 개설된 이래 ‘정책속보’, ‘보도자료’, ‘포토뉴스’, ‘통계로 본 남북관계’, ‘남쪽에 와보니’ 등 다양한 형태로 대북정책 추진성과를 알려왔다.

‘정책속보’에는 개성공단 개발 등 주요 현안과 남북회담 개최 현황, 금강산관광 협력사업, 남북 철도·도로연결 사업 등 남북교류협력 현황, 대북 비료·식량 지원,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지원 현황 등을 다루고 있으며 2004년 한해 동안 170건의 뉴스를 실었다.

‘보도자료’ 란에는 언론에 배포하는 보도자료를 게재하여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게재하는 등 국민들의 정보자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노력해왔다. 2004년에 게재된 보도자료는 213건이다.

‘포토뉴스’ 란에서는 생생한 사진을 통해 통일부의 활동 모습과 남북관계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전달해왔다. 2004년 한해 동안 84건을 게재하였다.

‘남쪽에 와보니’ 란에는 우리사회에 온 새터민(탈북자)들이 정착과정에서 겪게 되는 경험들을 함께 나눔으로써 다른 새터민들의 빠른 정착을 돕는데 일조를 하고 있으며, 20건의 기사가 실렸다.

이밖에 대북정책 추진현황과 관련소식을 모아 ‘뉴스레터’를 제작하여 약 3,000명의 정책고객들에게 주간단위로 발송하고 있다. 또한 딱딱하고 무거운 주제로 느껴지기 쉬운 통일문제와 남북간 현안문제를 신세대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만화 형식으로 설명하여 젊은 층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004년 한해 동안 통일만화 ‘남남북녀’를 51회 실었다.

라. 통일부 등록기자단 현황

1990년 5월 10일에 설치됐던 통일부 출입기자실이 2003년 9월부터는 정부중앙청사 통합 브리핑실로 전환되었다. 2004년말 현재 등록기자단은 총 73사 210명으로 일간지 32사, 통신 2사, 방송 13사, 영자지 2사 및 인터넷 매체 등 기타 24사로 구성되어 있다

제3절 통일교육의 내실화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통일교육은 학교 통일교육과 사회 통일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학교 통일교육은 각급 학교 등에서, 그리고 사회 통일교육은 공공 교육훈련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통일교육에 관련된 전반적 정책의 수립 및 종합 조정, 각급 학교 및 공공·사회교육기관의 통일교육에 대한 지도·지원 등을 하고 있다. 특히, 1999년 2월 통일교육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운영, 정부의 통일교육 활성화 임무, 학교 및 사회 통일교육 지원 강화 등 범국가적이고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평화공존과 남북화해협력시대에 부응하는 범국민적 통일교육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추진체계를 정립하고 다양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 통일교육 추진체계 확립

가. 통일교육지원법 개정

정부는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통일교육을 보다 체계화·활성화하고, 일부 국민들 사이의 대북의식 갈등 예방과 청소년층의 통일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2004년 5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은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05년 1월 27일 공포(법률제 7355호)되었다. 부칙규정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통일교육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각급 교육기관은 이를 반영토록 하였다. 둘째, 통일교육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구성시 국회의장 추천 수를 현행 6인에서 7인으로 확대하였다. 셋째,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이외 지역주민들의 통일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통일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이러한 법개정을 통해 통일교육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규정됨으로써 국민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혼란을 예방하고 통일교육을 보다 체계화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각 지방의 통일교육을 진흥하고 통일교육 시설 부족문제 등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교육원 전경

2. 통일교육의 다양화

가. 초청교육

정부는 통일교육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정보화 시대에 맞춘 사이버 통일교육 확대, 교육과정 운영평가 및 지속적인 개선대책 추진, 평화번영정책 및 남북관계 진전 이해, 북한에 대한 인식 개선과 국민적 합의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통일교육을 추진하여 왔다.

2004년에는 총 42,706명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구체적 내역은 사회통일교육 전문인력 1,447명, 학교통일교육 전문인력 3,716명(원격교육 331명, 원격-초청 연계교육 230명 포함), 남북교류협력 관련 대상자 12,996명, 공직자 1,268명, 사회각계인사 1,046명, 국내외 순회교육 22,233명 등이다. 특히 지난 한 해동안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관련 대상자에 대한 통일교육 수요는 2003년의 9,152명에 비해 대폭 증가한 12,996명이었다.

이러한 통일교육 수요 증대에 대하여 정부는 통일교육대상별 특성에 따라 시의에 맞게 강의제목과 내용을 조정하고, 초청교육뿐 아니라 개성공단 남측근로자에 대한 현지 출장교육 등 「찾아가는 교육」도 실시함으로써 통일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교육내용은 기본과목과 전문과목으로 구분하여 ‘국제질서 변화와 통일 환경’, ‘평화번영정책과 남북관계 현안’, ‘최근 북한실상과 변화 전망’ 등을 기본과목으로 편성하고,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 실태’, ‘남북교류협력과 경제공동체 건설 방안’, ‘민간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 등 대상별로 특화된 전문과목을 개설하여 운용하였다.

나. 순회교육

순회교육은 국내외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국내교육은 각 지역의 주요 인사나 사회교육기관 단체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고 있다.

해외교육은 재외동포들에게 모국의 통일문제 및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통일문제의 국제적 지지기반 확산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04년도 국내외 순회교육은 총 22,2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중 국내교육은 전국 각 지역에서 21,893명에게 교육수요에 따른 현지출장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해외교육은 동남아지역(일본, 10. 3~9)과 유럽지역(런던 · 마드리드 · 베를린, 10. 28~11.6)에서 재외동포 총 3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다. 사이버 통일교육

정부는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시간적 ·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사이버 공간상의 새로운 통일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2000년 10월 13일 통일교육원에 사이버통일교육센터(www.uniedu.go.kr)를 구축하였다. 사이버통일교육센터는 하루 평균 방문자수가 2천2백여명으로 2004년에는 방문자수 300만명을 돌파하는 등 대국민 통일교육 포털사이트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2004년에는 원격교육용 서버 도입, 원격학사 관리시스템(LMS) 개선, 온라인 강좌 콘텐츠 신규개발 등의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초 ·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통일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원격통일교육 직무연수’ (30시간, 2학점) 과정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통일교육원은 기존의 초청교육은 물론 사이버 공간을 통한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명실상부한 종합 통일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 첫해인

3. 통일교육 지원 확대

가. 학교통일교육 지원

정부는 미래의 통일주역이 될 초·중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통일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및 지원체제를 정비하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각종 정보·자료 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효과적인 통일교육 실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조하여 2001년부터 16개 시·도교육청 통일교육담당 장학사 32명으로 구성된 「통일교육장학협의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04년도에는 최근 급변하는 통일교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학교 통일교육체계 확립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동 장학협의회를 전국의 시·군·구 교육청 소속 장학사들로 확대, 동 협의회 인원을 총 400명으로 구성하였다. 통일교육장학협의회 운영을 통해서도 통일문제에 대한 학교 교육방향을 재정립함과 동시에, 통일교육지원법, 통일교육지침, 남북관계 현안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정확하고도 깊이 있는 인식을 공유하는 계기로 활용하였다.

또한, 학교통일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교육청이 지정한 통일교육시범학교(초등학교 8, 중학교 12, 고등학교 7, 총 27개 교)에 대해 각종 통일교육 교재와 자료를 지원하였다. 이들 시범학교에 대하여는 통일교육지침서를 비롯, 각급 학교 통일교육의 현장에서 필요한 각종 통일교육 교재와 영상자료, 시범학교 전시용 패널, 통일정보신문 등 주·월간 정기간행물 등을 제작·지원하였다. 또한 통일교육원 초청교육을 통해 통일교육 관련 사례발표회, 판문점 견학 등 현장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청소년 세대로 하여금 분단의 아픔을 느끼게 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함양시키기 위해 통일부가 주최하고, 시·도교육청 및 각 지역 통일관이 주관하는 「전국 학생통일글짓기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는 초·중·고 각각 운문 및 산문 분야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전국 총 10,424개 학교에서 1,249,011명이 참가

하였다. 이 중 총 288명의 부문별 입선자에게는 통일부장관상, 시·도교육감상, 통일교육원장상을 시상하고 부상을 전달하였다. 아울러 수상작을 운문과 산문으로 나누어 작품집(운문 : 반쪽이의 꿈, 산문 : 몰다우 감상화의 다섯 번째 칸)을 발간하여 통일교육시범학교 등 각급 학교와 전국 11개 통일관, 시·도교육청, 공공도서관 등 유관기관에 배포하였다.

한편 청소년들이 즐겨보는 방송매체의 청소년 퀴즈프로그램(EBS '코리아 코리아', MBC '생방송 퀴즈가 좋다', KBS '도전 골든벨' 등)에 통일관련 문제 출제를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정부는 대학사회의 통일문제에 관한 연구와 다양한 정책개발 등 대학의 학술연구진흥과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1994년 「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의 설립을 통해 각 대학 산하 통일문제연구소간 통일문제와 관련한 학문적 교류를 지원해 왔다. 2004년도에는 대학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조치의 일환으로, 그간 동 협의회를 통한 단일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전국대학북한학과협의회」등 통일문제와 관련된 전국의 5개 단체(대학)로 지원방식을 다양화 하였다. 이로써 관련단체의 통일문제 현안에 대한 전문성을 더욱 심화·확대함과 동시에 통일교육과 관련한 보다 효용성 있는 정책연구자료의 개발을 유도하였다.

한편, 대학생들의 건전한 통일관 및 대북관 정립과 대학사회내의 통일의식 확산을 위해 1982년부터 「대학생 통일논문 현상공모」를 실시해 오고 있다. 2004년도에는 전국의 대학에서 총 42여편이 응모하였으며, 3차에 걸친 심사를 거쳐 최종 입선작을 선정하였다. 입선작인 우수상(2) 장려상(2) 등 총 4편에 대하여서는 통일부장관 표창 및 장학금을 지급하고, 논문은 작품집으로 발간하여 전국 대학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여 활용토록 하였다.

나. 금강산 체험학습 실시

정부는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금강산 체험학습을 실시하였다. 즉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부정적 인식해소 및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비무장 지대를 가로질러 남북을 오가는 금강산 육로관광을 중심으로 '중·고교생 금

【 통일교육협의회 회원단체 현황 】

2004.12.31 현재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동신대 동북아통일연구소	동학민족통일회
경실련통일협회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민족통일중앙협의회
남북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족문화교류재단
남북사회문화연구소	북방문제연구소	부산여성회
다물민족연구소	세계평화여성연합	북한연구소
대한민국팔각회	굿네이버스	부천시민센터
대한 YMCA 연합회	여성사회교육원	북한문제연구협의회
민족통일촉진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새마을운동중앙회
부천시민연합	좋은 벗들	세계평화청년연합
바른사회밝은정치시민연합	통일교육연구원	수원여성회
서울시민문화단체연석회의	통일경모회	한국가족문화원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통일시대총북연대	영세종립통일협의회
열린사회시민연합	통일기념사업회	원주참여자치시민센터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통일여성안보회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통일건국민족회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시민연대	통일교육문화원
통일교육전문위원회의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통일맛이늦봄문화환목사기념사업
통일민주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문제연구소	한국종교인평화회의	평화통일복지협의회
한겨레통일문화재단	한국청년회의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통일여성협의회	한국대학원리연구회
한국자유총연맹	한민족운동지도자연합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통일문화진흥회	한민족통일촉진협회	한국청년연합회
한민족복지재단	화해평화통일교육전국모임	한국청소년지도자협회
한민족통일여성중앙협의회	한국통일교육학회	한국통일철학회
한국 걸스카우트 연맹	하나로교육복지연구원	한민족통일교육연구소
한반도평화운동본부	경북대 평화문제연구소	한국통일진흥원
남북문화통합교육원	남북소년교류연대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남북문화교류협회	남북사랑나누기협의회	남북청소년교류연맹
남북어린이어깨동무	남북코리아미술교류협의회	남북청소년통일교육진흥원
단국대 정책과학연구소	대한기독교자유연맹	

【 2004년도 지역통일교육센터(부산·광주) 사업실적 】

구 분	사 업 명	기 간	추 진 실 적
부 산	○ 중·고등학교 순회통일교육	7.12~12.16	20회 9,409명
	○ 통일기행 현장체험 교육	7.13~12.18	15회 602명
	○ 한마음 통일문화 축제 - 대학생 통일문제 세미나 - 탈북예술인 초청공연 - 북한미술·공예품 전시회 및 북한영화상영	10.28 10.27 10.25~31	대학생 180명 참석 지역주민 등 400명 관람 지역주민 등 600명 관람
	○ 여성이 만드는 통일세상 (통일문예백일장)	10.27	주부 300명 참가
	○ 찾아가는 통일강좌	7.26~12.14	20회 2,160명
	○ 통일아카데미	7.30~11.30	96명 교육수료
	○ 통일문제 시민포럼	12.21	대학교수 등 200명 참석
	○ 학교통일교육발전 워크숍	12.16	중·고등학교 교사 200명 참석
	○ 지역통일교육센터 운영평가 보고회	12.23	사업추진 관련자 30명 참석
	○ 금강산 통일기행 체험연수	12.24~26	통일문예백일장 입상자 등 50명
광 주	○ 빛고을 통일학교	7.16~12.8	203명 교육수료 및 판문점 견학
	○ 청소년 분단현장 체험교육(금강산)	8.11~13	초·중·고생 33명 참가
	○ 중·고등학교 순회통일교육	9.6~10.11	20회 6,471명
	○ 빛고을 통일문화 축제 - 북한미술공예품전, 생활용품전, 북한 영화상영 - 대학생 통일문제 세미나 - 탈북예술단 초청공연	9.10~11.13 9.21 9.22	지역주민 등 50만 여명 관람 대학생 250명 참석 지역주민 등 600명 관람
	○ 대학생통일수련회	10.23/10.30	대학생 245명 참석
	○ 시민과 함께하는 통일포럼	11.19	시민 등 500명 참석
	○ 통일교육전문위원 초청연찬회	11.26	전국 시·도회장 등 40명 참석
	○ 학교통일교육발전 워크숍	12.16	초등학교교사 250명 참석
	○ 지역통일교육센터 운영평가 보고회	12.21	사업추진 관련자 50명 참석

년에는 총 460여만명의 국민이 통일관을 관람하였다.

한편, 1991년 1월 개관 이래 (주)임진각에서 운영하던 ‘임진각 통일관’은 2004년 11월 30일 경기관광공사에 매각됨에 따라 폐관되었다.

라. 통일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1) 대상별로 특성화된 통일교육자료 개발

정부는 다양한 통일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각급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기관에 보급하고 통일문제 및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통일교육을 위해 개발된 교재들은 크게 통일교육 기본교재, 통일교육총서, 통일문제강좌, 영상교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2004년도에 개발한 통일교육관련 기본교재는 「북한이해」와 「통일문제 이해」이며, 통일교육총서는 「북한농업개혁의 현황과 전망」, 「통일·남북관계사전」, 「갈등을 넘어 통일로」, 「오늘의 마음으로 읽는 내일의 통일」등 4종을 발간하였다. 그리고 통일문제에 관한 주요 쟁점을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고자 ‘통일문제강좌’를 기획하여 「대북협상, 어떻게 볼 것인가」, 「대북지원, 새롭게 보자」, 「먹거리를 통해 본 북한 현실」 등 3종을 발간하였다.

아울러 영상시대에 부응하여 2004년에는 통일교육용 영상교재를 총 4종 제작하였다. 이 영상교재는 일반국민의 남북관계 발전과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학교 통일교육에서 중등과정 도덕 사회과 수업자료로 활용 가능하도록 개발하였다.

이 밖에도 방북 예정자들을 위해 매년 그 내용을 수정하여 「북한방문길라잡이」를 발간 배포하고 있으며, 통일교육원을 소개하는 안내 영상물과 안내 리플렛 등도 제작하였다. 또한 멀티미디어의 보편화 등 교육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시청각 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고, 이를 사이버통일교육센터의 콘텐츠와 연계함으로써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있다.

【 2004년 주요 통일교육자료 발간 현황 】

성격	자 료 명	부수	형태	배포대상
기본 교재	통일문제이해	15,000	책	학교, 교육생, 사회교육기관, 연구기관, 정부기관 등
	북한이해	15,000	책	
통일 교육 총서	북한농업개혁의 현황과 전망	2,000	책	
	통일 · 남북관계사전	3,000	책	
통일 교육 총서	갈등을 넘어 통일로	3,000	책	교육생, 사회교육기관, 연구기관, 정부기관 등
	오늘의 마음으로 읽는 내일의 통일	1,000	책	
통일 문제 강좌	대북협상, 어떻게 볼 것인가	10,000	책	
	대북지원, 새롭게 보자	3,000	책	
	먹거리를 통해 본 북한현실	3,000	책	
영상 교재	남북관계발전사(38분) (대북정책설명자료)	2,000	비디오 CD	각급 학교, 시 · 도교육청
	도덕 · 사회과 ‘통일단원’ (25분)	3,000	비디오 CD	
	청소년용 플래시애니메이션(25분) (북한체험기)	2,000	비디오 CD	
	통일교육 입교식용 영상물(9분) (나의 땅, 나의 하늘)	200	비디오 CD	내부용

(2) 통일 · 북한 관련 방송프로그램 제작진 워크숍 개최

정부는 국민들의 통일의식을 함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방송매체의 통일교육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강산에서 EBS, K-TV, 국방홍보원 등의 통일 · 북한 관련 방송제작 관계 인사들을 초청하여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워크숍 참석자들은 앞으로 통일 · 북한 관련 방송제작진 모임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통일 · 북한 관련 방송프로그램 및 영상물 공동제작, 제작된 영상물의 통일교육교재 활용 등 방송사와 통일교육원간에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제4절 국제협력 강화 및 해외홍보

정부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조기해결과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국제적 협력 확보를 위해 유관국과 정책협의를 강화하는 노력을 전개하였다. 또한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 기반 확산을 위해 능동적으로 해외 정책홍보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재외동포의 민족공동체 의식 고취와 남북관계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는 사업도 추진하였다.

1. 국제적 지지기반 확대

가. 고위정책협의회의 개최

정부는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조기 해결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적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주요국과의 고위정책협의회의를 개최하였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04년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미국(워싱턴)을 방문하여 파월 국무장관,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 럽스펠드 국방장관 등 외교·안보 분야 고위 인사들과 북핵문제를 비롯한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협의를 하고 동북아 평화를 위해 한·미간 협력관계를 더욱 확고히 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개성공단사업 등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지지를 얻어냄으로써 대북정책 추진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하였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의 대한반도정책에 영향력이 있는 주요 인사 및 전문가들과



한·미 고위 정책협의 회의

의 면담 및 토론을 통해 남북관계 현황 및 북한경제와 평화변영정책을 설명함으로써 한반도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지지의 폭을 확대, 심화시켰다.

방미 기간동안 U.S. Institute of Peace 주최 한반도문제 전문가 대상 설명회(9. 1), Washington Post 와의 인터뷰(9.1) 등을 통하여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변영을 위하여 북한의 변화환경 조성 및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동시에 남북관계 진전 상황과 북한의 변화실태를 설명하였다.

또한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동영 통일부장관 겸 NSC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특사로 중국에 파견하였다.

특사는 방중기간(12.21~24) 동안 우방궈(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예방하여 노무현 대통령이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친서를 전달하고 양국 정상간 축적한 한·중 우호협력관계 심화 방안과 북핵문제 돌파구 마련을 위한 한·중간 협력방안을 협의하였다.

또한 탕자쉬엔(唐家璇) 국무위원, 리자오싱(李肇星) 외교부장, 왕자루이(王家瑞) 당 대외연락부장,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부 부부장 등 고위인사들을 만나 북핵문제, 한중관계, 남북관계 등 주요 관심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중 양측은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남북대화와 6자회담이 재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양국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우리측은 북핵 해결 「3원칙」(①북핵불용, ②평화적 해결, ③한국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중국측의 이해를 제고시켰으며, 4차 6자회담의 조기 개최와 북한의 전략적 결단, 유관국들의 유연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이루었다.

특사는 방중 기간중인 12월 22일 북경대학교에서 400여명의 교수·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변영의 동북아 시대와 한반도」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주요 국가의 지지와 통일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및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국제워크숍 개최를 지원하였다. 유선호 의원을 단장으로 김원웅·김학원·이성권 의원 등 4명의 국회의원들은 2004년 8월 9일부터 8월 17일까지 체코·헝가리·독일 등 3개국을 방문하여 의회대표, 각계 유력인사, 연구기관 대표, 전문가 등과 면담을 갖고 대북정책을 설명하는 한편,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나. 통일주재관 운용

정부는 독일통일 직후인 1990년 12월 5일 독일주재 통일연구관을 파견한 후, 1996년 8월부터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적 통일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미·일·중 3개국에 통일주재관을 파견하고 있다.

2004년도에 통일주재관들은 주재국 정부 의회 및 주요 한반도문제 관련 연구소와 교류하면서 남북관계 현황과 대북정책을 설명하며 주재국들의 이해와 지지 확산을 도모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입장과 견해를 파악하여 정부의 대북정책 수립에 반영토록 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또한 현지에서의 당국간 남북대화와 민간급 대북접촉 및 방북을 지원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의 현지 상담창구 역할도 담당하였다.

한편 통일부는 통일주재관들의 활동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활동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5월 10일부터 17일까지 서울에서 통일주재관회의를 개최하였다.

3. 해외 정책홍보 확대

가. 국제사회에 대한 홍보

한반도 통일은 기본적으로 남북간의 문제이지만 한편으로는 국제적 문제이기도 하다. 북핵문제를 조기에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국제적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는 노력이

긴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2004년도에 미·일·중 3개국의 주요 대학에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한 국제적 여론 형성의 장을 마련하였다. 10월 21일 일본 게이오(慶應)대학 주최 국제워크숍에서는 남북관계 현황 및 대북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였으며, 12월 2일 미국 Columbia 대학 주최 국제학술회의에서는 최근 북한 정세 및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12월 18일 베이징(北京)대학 주최 국제학술회의에서는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추구하는 평화번영정책의 기본정신과 내용 및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설명하였다.

【 국제학술회의 개최 지원 현황 】

2004.12.31 현재

지 역	기 관	일 자	주 제
일본(동경)	게이오대학	10.21	미 대선이후 한반도정세 전망
미국(뉴욕)	컬롬비아대학	12.2~3	동북아정세 및 한반도의 평화번영
중국(북경)	베이징대학	12.18~19	변동중의 동북아 역내 안보

통일부는 한·미안보포럼(3.9~12, 미국 워싱턴), 동아시아 전략포럼(3.19~21, 미국 시애틀), 한·미 여론지도층 세미나(7.16~17, 미국 워싱턴), 북핵문제와 동북아 안보 세미나(10.22~23, 중국 북경), 한·중통일포럼(12.20, 중국 상해) 등 해외에서 개최되는 세미나, 국제학술회의 등에 참가하여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이해 확대를 도모하였으며 한반도 주요 현안문제에 대해 참석자들과 의견교환의 기회를 가지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Moody's, Fitch, S&P 등 국제 신용평가기관 등 방한 경제계 인사 및 KEDO 등 국제기구 인사에 대한 설명 활동도 전개하여 한반도 상황과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도 제고에 기여하였다.

또한, 통일부 장·차관을 비롯하여 주요 실무관계자들이 워싱턴포스트지, 일본 아사히신문 등 다양한 해외 언론매체와의 인터뷰(55회) 등을 통해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현황에 대해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게 되었다.

나.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홍보

통일문제와 대북정책은 한민족의 명운이 걸린 문제라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재외동포 사회의 이해와 지지는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재외동포 사회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구축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했다.

통일부는 재외동포 사회의 여론 형성층 인사를 대상으로 한 정책설명 활동을 전개하였다. 2004년 6월 1일에는 「2004 세계한인회장대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당부하였다. 6월 11일에는 영국 런던에서 한국·영국·미국·독일·스웨덴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와 재외동포 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4차 세계한민족통일문제토론회」를 개최하여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현실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포사회의 견해를 청취하였다. 또한 미주지역 통일포럼을 워싱턴(11.30)과 뉴욕(12.1)에서 각각 갖고 남북관계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의견을 교환하였다.

중국·러시아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의 재외동포 신문·방송사 10개처에 「통일칼럼」을 정기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남북관계와 대북정책 추진 현황에 대한 재외동포사회의 이해를 도왔다. 아울러 러시아연방 사할린 새고려신문사의 「무궁화 문학콩쿨」 등 동포 기관과 단체가 주관하는 문화행사와 현지 대학 연구소의 한반도 문제 관련 세미나를 지원하여 재외동포의 민족정체성 고양을 도모하는 한편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동포사회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전개하였다.

【 세계한민족통일문제토론회 개최 현황 】

2004.12.31 현재

구 분	개 최 일	장 소	참 가 인 원	대 주 제
제1차	1991.9.13	서 울	15개국(262명)	21세기를 향한 한민족공동체의 나아갈 길
제2차	1992.8.18~19	러시아 사할린	11개국(154명)	새로운 국제환경 속에서의 한반도
제3차	1993.9.20~23	서 울	17개국(336명)	신한국 창조와 조국통일의 과제
제4차	1994.8.5~7	중국 연변	10개국(25명)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 전망
제5차	1995.8.16~17	서 울	14개국(650명)	통일 번영의 한민족시대 전망
제6차	1996.11.21~23	일본 도쿄	13개국(250명)	한민족통일을 위한 새로운 이해
제7차	1997.9.5~6	서 울	16개국(300명)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의 안정적 변화 유도
제8차	1998.8.17~19	미국 샌프란시스코	10개국(120명)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과 해외동포사회의 역할
제9차	1999.10.1	서 울	6개국(100명)	포용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해외동포의 역할과 과제
제10차	2000.6.17	독일 베를린	23개국(140명)	독일통일 10년과 한반도 통일
제11차	2001.5.24	서울	6개국(230명)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 변화
제12차	2002.7.4	일본 도쿄	5개국(170명)	한반도 평화 협력과 해외동포의 역할
제13차	2003.11.18	호주 시드니	5개국(130명)	평화번영정책과 해외동포의 역할
제14차	2004. 6.11	영국 런던	5개국(80명)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제5절 북한 정보자료 제공 및 개방 확대

1. 북한 정보자료 제공

최근 북한은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정책변화를 보여 왔다. 따라서 정부는 이 같은 북한의 변화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향후 변화전망을 예측하는 데 주력하였다.

2004년도에는 정치·외교·경제·사회·대남 등 전 분야에 걸쳐 700여건의 내부 보고서를 적시에 작성·공급하여 대북 정책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케 하였다.

한편, 계기별 주요 현안문제에 대해 세미나, 워크샵, 간담회, 각종 회의 등을 실시 개최, 전문가들의 견해를 모아 북한에 대한 분석·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려고 노력하였다.

정부는 「주간북한동향」 등 각종 북한관련 정보자료를 북한문제 연구기관 및 전문가,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북한문제 전문가들에 대한 연구 지원 뿐 만 아니라 북한실상에 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있다.

2004년에도 북한의 정세변화의 추이와 분야별 동향을 시의성 있게 분석 평가한 「주간북한동향」을 676호부터 723호까지 매주 발간(48회)하였다. 동 자료는 유관 기관과 통일관련 연구기관, 북한 및 통일문제 연구학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배포하는 한편, 통일부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공개해 오고 있다.

2003년 12월에 발간한 「2004 북한개요」는 정치·군사·외교·경제·사회·문화 등 북한의 전분야에 대한 통일부의 분석·평가 자료와 북한 원전 자료를 활용, 북한실상을 소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북한개요는 실수요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주요 서점에서 시판 중(9,000원)이다.

최근 북한에서는 7.1경제관리개선 조치('02.7.1) 등 각 분야에서 의미있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간의 각 분야별 「북한 변화동향」을 종합 발간하여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북한의 변화실상을 국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의 당·정·군 등 기관 단체들의 조직 및 인물들의 현황을 종합 정리한 「북한 기관 단체별 인명집」과 주요 인물에 대한 세부 활동사항을 정리한 「북한의 주요인물」 자료를 발간, 관계기관 및 유관단체에 제공하였고 북한의 연간 일정별 주요행사 및 공휴일과 1948년 이후 북한의 주요 대남제의 등을 수록하여

도표화한 「2005년도 북한주요행사예정표」도 발간·배포하였다.

또한 최근 북한경제 실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난 1년 동안의 북한경제 관련 동향 자료를 종합 정리하여 평가한 「2004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를 발간·배포하였다.



북한자료 센터

한편, 통일 및 북한문제에 관한 전문인력의 저변을 확대하고 참신한 정책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 1989년부터 신진 연구자에게 북한 및 통일문제 연구 지원사업을 지속하고 있다.(총420여명)

2004년도 신진 연구과제를 분야별로 보면 비무장지대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변화 특성 분석 등 통일정책 관련 연구 8건, 김정일 체제의 동태적 변화와 향후 경로에 관한 연구 등 북한실태 관련 연구 8건, 기타 통일교육 관련 및 남북교류협력 관련 연구 등이 있었다.

신진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는 신진 연구자 논문집(1질: 3권)으로 발간, 전국 도서관·자료실 등에 배포(300질)되었다.

2. 북한정보자료 개방 확대

통일부는 북한실상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

TV의 시간대별 방송 내용을 알 수 있어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볼 수 있게 하였다.

결국 북한정보자료의 지속적 개방 확대정책으로 일반 국민들은 누구나 「북한자료센터」에서 영상자료를 포함한 모든 북한 원전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통일부와 정보교류 협약을 체결한 기관에 대해서는 북한자료의 대출과 복사까지도 대폭적으로 허용하였다. 앞으로도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맞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특수자료」관련 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 북한정보공개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부 록



1. 남북관계 주요일지(2004)
2. 관련 웹사이트
3. 통일부 조직표

부 록



1. 남북관계 주요일지(2004)
2. 관련 웹사이트
3. 통일부 조직표



1. 남북관계 주요일지(2004)



남북관계 주요 일지(2004)

2004. 1

- 1월 2일 ▶ • 정세현 통일부장관, 시무식에서 ‘북한이 변화의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일관된 평화변영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중점과제로 ▲개성공단 및 금강산 특구 등 남북 경협사업 결실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분배투명성 강화 ▲군사분야 협력 등을 제시
- 1월 3일 ▶ • 현대아산, 겨울철 관광객 급감으로 속초~북한 장전항을 오가는 설 봉호를 11일부터 3주간 중단기로 결정
- 1월 5일 ▶ •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은 1월 14일부터 16일까지 고위전문가회의를 갖고, 북측이 경수로 1년 중단에 반발해 허용하지 않고 있는 공사자재·장비 반출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결정
- 1월 6일 ▶ • 통일부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범국민적 통일교육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
- 1월 7일 ▶ •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은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전날 핵동결 관련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북한이 자신들이 취할 조치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재차 대화 의지를 강조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
- 1월 8일 ▶ • 정세현 통일부장관, 주례 브리핑에서 ‘남북교역에 참가하거나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남북교류 협력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이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조기 집행할 계획’이라고 언급
- 1월 9일 ▶ • 정부는 국방부와 국정원, 외교부 등 유관부처 국장급 위원들이 참석

한 가운데 제 제8차 ‘국군포로 대책회의’를 열고 귀환 국군포로들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방안 등을 논의

- 1월 10일 ▶ • 잭 프리처드 전 미국 국무부 대북교섭담당 특사 등이 포함된 미국의 민간 대표단이 영변 핵시설을 포함한 5일간의 북한 방문을 마치고 베이징에 도착
- 1월 11일 ▶ • 북한 노동당기관지 노동신문은 남북경협은 민족간 협력사업으로 그 진전 속도에 미국이 간섭할 그 어떤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지적
- 1월 12일 ▶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동시 일괄타결안의 1단계 조치로 ‘동결 대 보상’에 합의한다면 흑연감속로에 의한 핵활동을 동결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
- 1월 13일 ▶ • 2003년 한해 동안 국내 입국 탈북자는 1281명으로 전년인 2002년 1139명에 비해 12% 증가한 것으로 집계
- 1월 13일 ▶ • 미국과 중국은 6자회담의 조속 재개를 위해 의견을 조율하고 그 결과를 우리 외교부측에 설명(1.14)
- 1월 15일 ▶ • 이산가족면회소 건설부지 측량 및 지질조사를 위한 남북 실무자간 접촉이 15일부터 사흘간 금강산에서 개최
- 1월 16일 ▶ • 남북, 제1차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접촉과 제2차 청산결제실무협의 대표단 명단 교환
- 1월 17일 ▶ • 한·미,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6자회의」에서 용산기지 내 모든 시설과 병력을 평택·오산 지역으로 옮기는데 합의
- 1월 21일 ▶ • 라종일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과 가와구치 요리코 일본 외상, 북한 핵문제를 6자회담의 틀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북한에 핵 프로그램 완전 포기를 계속 촉구하자는 원칙 재확인
- 1월 22일 ▶ • 한·미·일 6자회담 대표, 비공식 협의에서 6자회담 조기 재개를 위해 협력과 조율을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
- 1월 24일 ▶ • ‘북한판 동의보감’의 출판권 침해 관련 소송에서 남한 재판부가 북한 공증기관측이 제시한 문서의 효력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 선고
- 1월 27일 ▶ • 남북은 1.27~29 개성 자남산 여관에서 제1차 남북경제협력제도 실

- 무접촉과 제2차 청산결제 실무협의를 개최
- 1월 28일 ▶ •북측은 남북장관급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정세현 통일부장관 앞으로 전화통지문을 보내 장관급회담 북측 대표단 일부를 교체한다고 통보
- 1월 29일 ▶ •남북은 제1차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접촉에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

2004. 2

- 2월 16일 ▶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통합방위 보고회의에서 북핵문제 평화해결의 전기 마련, 한·미동맹관계 강화, 협력적 자주국방 실현, 남북관계 내실화, 효율적 국가위기관리체계 구축 등 5대 전략과제를 성공시켜 나갈 것을 강조
- 2월 17일 ▶ •참여정부 이후 첫 한미 4자 고위협의회(2+2회의), 한·미동맹, 이라크파병, 북핵문제와 2차 6자회담, 한·미 미래동맹 문제 등 양국간 외교·안보 분야 전반의 협력강화 방안을 포괄적으로 논의
- 2월 20일 ▶ •정세현 장관은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북핵문제는 북한의 핵 야망을 포기토록 하는 한편 북한의 체면을 살리는 방안이 동시에 모색되어야 하며, 미국이 북핵현안 해결에 보다 유연한 입장을 취한다면 2차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
- 2월 23일 ▶ •한·미·일 6자회담 대표단, 2차 6자회담에 앞서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3자 협의회를 갖고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핵프로그램 해법, 핵동결 대 상응조치 등 쟁점 전반을 재점검
- 2월 25일 ▶ •제2차 6자회담이 중국 베이징 다오위타이 팡페이위안에서 개막 (2.25~28)
- ▶ 제4차 남북해운협력 및 제9차 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시작
- 2월 26일 ▶ •남북,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및 해운협력실무접촉에서 쟁점사안들을 집중 논의하고 합의서(철도·도로) 및 공동보도문(해운)을 채택

- 2월 27일 ▶ •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6자회담에서 어떠한 예외도 없는 한반도의 완전 비핵화를 기본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무기 계획과 관련된 모든 것이 논의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 2월 28일 ▶ •6자회담 참가국들은 2차 6자회담을 마치면서 조만간 실무그룹 설치, 2/4분기내 3차회담 개최 등 7개항을 담은 '의장 성명'을 채택
- 남북 적십자사는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제9차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 200명 명단을 교환

2004. 3

- 3월 1일 ▶ •남경필, 권영세, 원희룡, 정병국 의원 등 한나라당 소장파 10여명은 북한주민 국민소득 2배 증진을 목표로 북한 진출 남한 기업들이 법인세 형식의 세금을 북에 내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적극적 대북정책 도입을 당에 요구
- 3월 2일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가 서울 그랜드호텔에서 진행 (3.2~5)
- 육군,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 재개
- 3월 4일 ▶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참여정부의 안보정책 구상을 종합 정리한 「평화번영과 국가안보」를 공식 발간
- 3월 5일 ▶ •남북은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8차회의 결과 ▲개성공단 건설 ▲철도·도로연결 ▲금강산관광 특구개발 등의 주요 경협추진과 관련한 7개항의 합의문 타결
- 3월 6일 ▶ •문학, 예술, 출판 등 탈북 문예인을 중심으로 한 '통일문예인협회' 공식 출범
- 3월 10일 ▶ •노무현 대통령과 요한 페르손 스웨덴 총리,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 및 이라크 등 국제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
- 3월 11일 ▶ •남북은 쌍방 경추위원장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제3차 남북

청산결제실무협의(3.15~16, 파주)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
회 제4차회의와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제3차회의(3.24~26,
개성) 개최에 합의

- 3월 13일 ▶ •통일부, 「남북교역 실무안내」를 발간
- 3월 14일 ▶ •북한, 우리측 정세를 이유로 3.15부터 파주에서 개최기로 한 제3차
남북청산결제실무협의 회담장소를 개성으로 변경할 것을 통지
•통일부 대변인, 북측에 유감을 표시하고 예정대로 회담을 열자고 제의
- 3월 15일 ▶ •남북 양측 적십자사, 제9차 이산가족 상봉단 후보자 각각 200명에
대한 생사 및 주소 확인 결과 회보서 교환
- 3월 16일 ▶ •3.13~15 북한 방문을 마친 캐롤 벨라미 유엔아동기금 총재가 한국
정부와 관련단체에게 방북성과를 설명하고 대북 추가지원을 요청하
기 위해 입국
•남북 노동자 5.1절 통일대회 평양개최 합의
- 3월 17일 ▶ •남측은 북측의 3.16 전화통지문과 관련 김광림 경추위위원장 명의
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남북간 합의된 사항들은 합의된 대로 차질없
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촉구
•통일부, 「2004 통일백서」 발간
- 3월 18일 ▶ •남북, 9차 이산가족 상봉 최종명단 교환
- 3월 23일 ▶ •6자회담 한·일 수석대표, 제2차 6자회담의 합의사항인 실무그룹
조기 개최 및 6월말 이전 3차회담 개최 방안 등을 논의
- 3월 28일 ▶ •대법원 2부,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
장 등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북송금은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관
련한 통치행위가 아니라며 원심대로 유죄를 확정
- 3월 29일 ▶ •금강산에서 제9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진행(3.2~4.3)
•정부는 제12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대북 비료지
원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
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WHO 등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
협력기금 지원(안)」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

2004. 4

- 4월 2일 ▶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는 인터넷을 통한 북한상품의 원산지 증명 서비스의 협조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팩스와 e-메일을 통해 관세청에 전달
- ▶북측은 남북경추위 최영건 북측위원장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4차회의 및 임진강수방실무협의회 제3차회의를 4.8~10 개성에서 진행하자고 제의
- 4월 4일 ▶ •청소년적십자(RCY) 단원 28명, 식목일을 맞아 금강산에서 북측 청소년들과 '우정의 나무심기' 행사 개최(4.4~6)
- 4월 6일 ▶ •경추위 김광립 위원장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4차회의와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제3차회의를 4.8~10 개성에서 개최하자는 북측제의를 동의하고 제3차 청산결제실무협의회를 4.20~22 파주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
- 4월 7일 ▶ •한국과 미국, 일본 등 3개국의 2차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비공식 회동, 북핵문제에 관한 회담일정을 협의
- 4월 8일 ▶ •남북 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 제4차회의와 임진강수해방지 실무협의회 제3차회의 개최(4.8~10, 개성)
- 4월 10일 ▶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제3차회의, 임진강유역에 대한 조사 실시 및 조사항목과 세부조사 내용에 합의
- 4월 13일 ▶ •남북한, 한국토지공사-개성공업지구 개발지도총국장간 개성공단 건설 1단계 1백만평 부지에 대한 토지임차료 계약 체결
- 4월 15일 ▶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통과
- 4월 16일 ▶ •한국을 방문한 딕 체니 미국 부통령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건 국무총리 및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만나 북핵 문제와 이라크 추가 파병, 용산기지 이전, 주한미군 재배치 등 양국 상호관심사를 논의
- 4월 18일 ▶ •ASEM 외무장관 회의(4.17~18),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해결, 한반도 비핵화,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 지지 등을 골자로 한 18개항의 의

장성명을 채택

- 4월 19일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4.19~21), 후진타오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과 상견례를 겸한 첫 정상회담을 개최
- 4월 20일 ▶ •제3차 남북청산결제실무협의회, 2/4분기중 청산결제 시범실시를 목표로 청산결제 거래방식, 신용한도·이자율 등 실무적인 문제들을 협의(4.20~22, 파주)
 - 탈북자가 설립한 인터넷 라디오 방송국 '자유북한방송'이 정식 방송을 시작
- 4월 22일 ▶ •남북한, 제3차 남북청산결제실무협에서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2004년도 합의서' 채택
 - 북한, 평북 용천역에서 대규모 폭발사고 발생
- 4월 23일 ▶ •정세현 통일부 장관, 내외신 주례브리핑에서 북한 용천역 폭발사고와 관련 동포애와 인도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할 생각이라고 언급
 - 통일부, 개성공단 1단계 조성사업에 대해 남북협력사업 승인
- 4월 24일 ▶ •정부, 북한 용천역 열차 폭발사고에 따른 재해대책 관계장관회의 소집, 1차적으로 100만달러 상당 긴급구호 의약품 등 지원키로 결정
- 4월 25일 ▶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4.13 미군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경비임무를 국군에게 위임하기로 한 것과 관련 JSA 안전보장과 관련한 정전협정조항과 쌍방 합의사항을 전면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
- 4월 26일 ▶ •한적, 조선적십자회에 긴급구호품 지원 계획을 통보 및 북측이 개성에서 남북간 접촉을 갖자고 제안한데 대해 동의하는 전통문 발송
- 4월 27일 ▶ •남북한,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남북당국간 접촉을 갖고 용천 재해복구지원 문제를 협의
 - 용천동포돕기본부 공식 출범
- 4월 29일 ▶ •국가인권위원회,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6.25전쟁 이후 남북자 486명의 가족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관련, 실태파악 및 진상 규명을 통한 명예회복과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특별법 제정을 권고

- 평북 용천참사 관련, 남측의 첫 구호물자(의약품 · 모포 · 피복류 · 식료품 등 100만달러) 남포에 도착

4월 30일 ▶ • 북측은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단장이 김령성에서 권호웅으로 교체되었다고 통보

2004. 5

5월 1일 ▶ •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2004년 「남북 노동자 5.1절 통일대회」가 평양에서 진행

5월 4일 ▶ •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 평양에서 개최(5.4~7)

5월 7일 ▶ •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은 군사당국자회담 개최 및 차기 장관급회담 일자(8.3~6)에 합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동보도문을 발표

5월 10일 ▶ • 통일부 장관, 여야에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보고

5월 11일 ▶ • 대한올림픽위원회(위원장 이연택)는 대북전통문을 통해 아테네 올림픽 남북공동입장을 위한 실무회담을 6.8~10 북경에서 개최하자고 제의

5월 12일 ▶ • 북, 제1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개최 제의

5월 14일 ▶ • 남북협력기금 손실보조제도 시행

- 한적, 제10차 남북이산가족상봉행사(6.19~24) 개최 제의

5월 17일 ▶ • 한국토지공사는 북측과 토지임차료 타결(4.13) 후, 통일부로부터 협력사업 승인을 얻고 북측에 개발계획을 제출

5월 18일 ▶ • 정부, 「임진강수해방지에 관한 합의서」(2004.3.5 채택)에 따라 수해방지대책 마련에 필요한 현지조사용 기자재를 경의선 임시도로를 통해 북측에 전달

5월 21일 ▶ • 북한 용천소학교와 탁아소 · 유치원 건립 지원을 위해 시민 · 사회단체로 구성된 '용천소학교 건립위원회'가 공식 출범식을 갖고 용천

소학교 설계가안을 공개

- 5월 22일 ▶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가와구치 요리코 일본 외상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일 정상회담 성과와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
-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협의회’ 서울대회 양미강 실행위원장은 제3회 대회를 9월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
- 5월 24일 ▶ •제4차 남북적십자실무접촉, 6월 19일로 예정된 10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금강산 면회소 건설 문제 등에 대해 논의(5.24~25, 금강산)
- 5월 25일 ▶ •전국 12개 지역에 설치된 ‘북한관’을 ‘통일관’으로 명칭 변경
- 5월 26일 ▶ •제1차 장성급군사회담, 서해상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5.26, 금강산)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4.29 결정을 통해 ‘금강산관광지구 구 관리기관 설립운영규정’, ‘금강산관광지구 세관규정’,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체류, 거주규정’ 등 3건의 규정을 채택

2004. 6

- 6월 2일 ▶ •남북경추위 제9차 회의 남측 대표단 평양 도착
-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북억지력 유지 불변’ 표명
- 6월 3일 ▶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 방안 등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6.3~4, 설악산)
- 6월 4일 ▶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서해안 우발적 충돌방지 조치와 군사분계선에서의 선전활동중지 및 선전활동 제거 등을 내용으로 하는 4개 항목의 합의서 발표
- (주)CS글로벌, 북한 사천강 모래채취사업 승인을 받고 경의선을 통해 최초로 상업적 물자 통과
- 북 경비정 서해 NLL 한때 월선
- 6월 5일 ▶ •남북경추위 제9차회의, 개성공단건설 관련 6월 중 관리기관 구성

등 7개항에 합의

- 한국토지공사,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업체 선정
- 럽즈펠드 미 국방장관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북핵 회담 지연으로 핵 확산 위험 가중 경고

6월 7일 ▶ • 남북 적십자 총재, 제10차 이산가족상봉행사를 7.11~16일 개최하기로 합의

6월 8일 ▶ • 중·미, 6자회담 앞두고 실무회담 개최

6월 9일 ▶ • 남북, 제10차 이산가족 생사 확인 의뢰서 교환
• 북 민족화해협의회, 통일운동단체 탄압 비난 성명 발표

6월 10일 ▶ • 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접촉, 서해상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일대 선전수단 제거 이행에 관한 세부사항 협의
• 여야 의원 27명 '남북교류협력 국회의원 연구모임' 창설

6월 12일 ▶ •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합의서 이행을 위한 남북군사실무회담 개최(6.10~12)
• 범민련 북측 본부, 성명을 통해 보안법 철폐와 체포된 통일애국인사들의 석방 촉구

6월 13일 ▶ • 제3차 6자회담의 공동대책논의를 위한 한국, 미국, 일본 3자협의회 개최(6.13~14, 워싱턴)
• 북한 외무성 대변인, G8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북핵문제 관련 문건 비난

6월 14일 ▶ • 남북경비정, 서해 NLL 인근 해상 5개 구역에서 국제 공용 주파수를 통해 무선교신 성공
• '6.15 남북공동선언 4주년 기념 국제토론회'에 참가하는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측 대표단 김대중 전 대통령 예방

6월 15일 ▶ • 중국, 3차 6자회담을 6월 23일 개최 한다고 공식발표
•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유엔인권위가 4월 채택한 대북인권 규탄결의안을 표결 승인

- 6월 17일 ▶ •북 '남북국회의원 공동세미나' 거부
- 6월 20일 ▶ •WCO 조직위원장은 세계문화오픈(World Culture Open)대회가 9월 미국 뉴욕, 서울, 평양, 판문점 등을 오가며 개최된다고 발표
•6자회담 실무그룹회의 한국대표단, 한·미·일 접촉
- 6월 21일 ▶ •6자회담 실무그룹회의, 북경 조어대에서 개막
- 6월 23일 ▶ •한적, 비료 20만톤의 대북수송 작업 완료
•제3차 6자회담 개최(6.23~26, 북경)
- 6월 24일 ▶ •개성공단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 통신, 통관, 검역관련 부속합의서 논의 및 남북간 통신선 연결방식과 운영문제 협의(6.24~25)
•북·미, 제3차 6자회담에서 첫 양자협의 진행
- 6월 25일 ▶ •남북은 한국수출입은행과 조선무역은행간 '청산결제업무에 관한 합의서'에 가서명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제1차 통신실무자접촉, 통신선로 연결과 통신 연락소 설치·운영문제에 대해 양측 입장 교환
- 6월 26일 ▶ •제3차 6자회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제3차 실무그룹회의를 열어 한반도 비핵화의 첫 단계 조치로 핵동결의 범위와 기간, 검증방법과 상응조치를 구체화하기로 하는 등 8개항의 의장성명을 채택
- 6월 29일 ▶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회담, 군사분계선 지역의 1단계 선전 수단 제거 결과 확인 및 2단계 제거작업 관련 문제 협의
- 6월 30일 ▶ •개성공단 시범단지 2만 8천평에 대한 준공식 개최
•제10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6.30~7.2, 금강산)

2004. 7

- 7월 1일 ▶ •정동영 통일부 장관 취임
•철도청, 남북철도운영준비단 발족
- 7월 2일 ▶ •제10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북측 경의선·동해선 분계역사 등의 건축계획설계 및 향후 일정 등 5개항에 합의

- 7월 3일 ▶ •금강산 당일관광 시작
- 7월 5일 ▶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회담 수석대표 접촉,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 조치와 관련 ‘무선 통신망 상시 운영’ 및 7.6부터 2단계 선전수단 철거 작업 실시에 합의(개성)
- 7월 8일 ▶ • ‘개성공업지구 방문 및 협력사업승인절차에 대한 특례’ 시행
•조평통, 김일성 10주기 남측 조문단 취소 관련 비난 담화 발표
- 7월 9일 ▶ •북한, 남북경추위 북측 위원장 명의의 대남전통문을 통해 7.13~15 속초에서 개최하기로 한 제5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을 예정대로 개최할 수 없음을 통보
- 7월 11일 ▶ •제10차 남북이산가족상봉행사 금강산에서 개최(7.11~16)
- 7월 14일 ▶ •남북은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 채택
•북한 경비정 1척, 연평도 서방 15마일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NLL 남방 0.7마일까지 침범했다가 우리 해군 함정의 경고사격을 받고 7분만에 북상
- 7월 15일 ▶ •열린우리당 임종석 의원 등 여야 의원 86명,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국회 제출
- 7월 19일 ▶ • ‘서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부속 합의서’에 따라 7.19 개최 예정이었던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제3차 실무대표회담이 북한이 답신을 보내오지 않아 무산
- 7월 20일 ▶ •대북식량차관 쌀 40만톤 가운데 국내산 쌀 10만톤의 경의선·동해선 육로를 통해 북한으로 수송 시작
- 7월 21일 ▶ •연평도 동북방 4.3마일 해상에서 북한 어선 1척이 NLL을 월선하여 표류 중 뒤따라 넘어온 북한 경비정에 의해 북으로 예인
- 7월 23일 ▶ •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제11차 회의’ 개최, 정착지원 제도개선 방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확정
- 7월 26일 ▶ •백령도 인근 서해 NLL 해상에서 1~2톤급 소형 어선 2척이 조업중인 어선군에서 이탈하여 NLL을 0.4마일까지 침범, 우리 군 고속정이 출동해 경고방송을 하자 북상

- 7월 27일 ▶ • 동남아 국가에 체류하던 탈북자 1진 입국
- 7월 28일 ▶ • 동남아 국가에 체류하던 탈북자 2진 입국
- 7월 29일 ▶ • 북한 조평통 대변인 성명, 대규모 탈북자 입국은 '남조선 당국의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유인납치 행위이자 백주의 테러범죄'라고 비난
- 7월 30일 ▶ • 조선인권연구협회 대변인, 탈북자 입국 비난 성명 발표
- 7월 31일 ▶ • 노무현 대통령, 안보관계 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앞으로도 대북화해협력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가며 철도·도로연결사업 등 경협사업과 민간교류는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표명

2004. 8

- 8월 3일 ▶ • 정부, 제15차 장관급회담 개최무산 관련 北에 회담 재개 촉구
- 8월 9일 ▶ • 남북 올림픽위원장, 아테네올림픽 공동입장 관련 논의(그리스 아테네)
- 8월 10일 ▶ • 한승주 주미대사·리근 외무성 미주국 부국장, 뉴욕서 북핵문제 논의
- 8월 11일 ▶ • 北·日, 中베이징서 일본인 납치관련 실무회의 개최
- 8월 13일 ▶ • 北 민화협, 8.15통일행사 무산 관련 남한당국 비난 성명 발표
- 8월 14일 ▶ • 남북, 2004 아테네 올림픽 공동입장
- 8월 17일 ▶ • 南, 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접촉 제의
- 8월 23일 ▶ • 北 외무성 대변인, 부시 대통령의 北 최고수뇌부 모독발언 관련 강력비난
- 8월 24일 ▶ • 국가인권위, 국보법 전면 폐지 권고
• 이수혁 외교부차관보, 6자회담 논의차 中·日 방문(8.24~27)
• 北 조평통 대변인, 을지포커스렌즈-04 연습 비난 담화
- 8월 25일 ▶ • 北최고인민회의 상임위, 7.29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 채택 결정 발표
- 8월 26일 ▶ • 헌법재판소, 국보법 7조(반국가단체 찬양·고무 행위 처벌) 합헌결정
- 8월 30일 ▶ • 통일부장관, 남북문제관련 한미고위정책협의차 방미(8.30~9.3)
- 8월 31일 ▶ • 정부, 남북경추위 제10차 회의 연기 관련 北에 유감 표명 및 회담재개 촉구

2004. 9

- 9월 1일 ▶ •탈북자 29명, 中 베이징 일본학교 진입
- 9월 2일 ▶ •과학기술부, 국내 소수 과학자들에 의한 극소량의 우라늄 분리실험 실시 사실과 함께 동내용을 8월에 IAEA에 신고했다고 발표
- 9월 5일 ▶ •北, 남측 정부의 조문불허조치 및 탈북자 처리문제를 이유로 민노당 대표단 방북 불허
- 9월 8일 ▶ •北, 공화국 창건 56돌 경축 중앙보고대회진행
- 9월 9일 ▶ •北 양강도 김형직군에서 대규모 폭발 사고 발생
- 9월 10일 ▶ •中 당 · 정대표단, 北 공식 방문(9.10~13)
- 9월 11일 ▶ •고구려유적 세계문화유산등록기념 남북공동사진전시회 및 학술토론회 개최(금강산, 9.11~12)
- 9월 13일 ▶ •IAEA사무총장, 한국 핵관련 실험에 우려 표명
- 9월 14일 ▶ •개성공단 5개합의서 국회 통외통위 통과
- 9월 15일 ▶ •日, 북한에 조속한 6자회담 참가 촉구
- 9월 17일 ▶ •일본 고이즈미총리, 대북관계 정상화 정책 불변 표명
- 9월 18일 ▶ •정부,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4원칙' 발표(△핵무기 개발 및 보유 의사가 없음을 재차 천명 △핵 투명성 원칙의 확고한 유지 및 국제 협력 강화 △핵 비확산에 관한 국제 규범을 성실히 준수 △국제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핵의 평화적 이용범위 확대)
- 9월 19일 ▶ •송호경 北 아 · 태평화위 부위원장 사망
- 9월 23일 ▶ •北 경비정 1척 서해 연평도 동북방 NLL 침범
- 9월 24일 ▶ •산자부, 국산 청화소다 북한 유입 확인
- 9월 25일 ▶ •北 · 日, 中 베이징서 납치문제 관련 실무협의(9.25~26)
- 9월 28일 ▶ •美 상원, 북한인권법안 만장일치 통과
- 9월 29일 ▶ •탈북자 44명, 中 베이징 캐나다 대사관 진입
- 9월 30일 ▶ •정부, 「북한산 모래 반입 활성화 조치」시행
•中, 캐나다 대사관 진입 탈북자 인도요구

2004. 10

- 10월 1일 ▶ •조평통 서기국,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51주년 즈음 한미동맹 관계를 비난하는 진상공개장 발표
- 10월 2일 ▶ •北조평통 대변인, 남한 핵물질 실험관련 비난 성명 발표
- 10월 4일 ▶ •통일부장관, '대북정책 4대방향' 천명(신뢰, 평화, 실용, 참여)
•北 조평통 대변인, 남측의 DMZ 세계유산 등록 추진 비난 담화 발표
•北 외무성 대변인, 美상원 '북한인권법안' 통과 비난
- 10월 5일 ▶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출범
•美 하원, 북한인권법안 통과
- 10월 6일 ▶ •韓·美, 주한미군 감축계획 합의
- 10월 7일 ▶ •남북,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군사분계선상에서 군사실무책임자 접촉,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을 통한 인원·차량의 통행 과정에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입장 교환
- 10월 8일 ▶ •韓·獨 정상, 남북문제 협의(베트남 하노이)
- 10월 11일 ▶ •北최고인민회의 상임위, 9.21 결정 제35호「개성공업지구보험규정」 및「금강산관광지구부동산규정」채택
- 10월 12일 ▶ •경의선·동해선 철도역사 실시설계 기술협의(10.12~14, 개성)
•北 조평통 대변인, KCNA 기자회견을 통해 남한의 비상계획 백지화 요구
- 10월 13일 ▶ •닝푸쿠이 中외교부 한반도문제 담당대사, 북핵협약차 방한
- 10월 14일 ▶ •北 외무성 대변인, 남한 핵문제 관련 IAEA의 이중적 기준 비난
- 10월 15일 ▶ •이해찬 총리, 제2차 진보정상회의서 북핵 협조 요청(형가리)
- 10월 16일 ▶ •北 조평통 대변인, 열린우리당의 보안법 폐지 4개 대안 관련 담화 발표 열린우리당의 보안법 폐지와 관련하여 내놓은 4개 대안은 본질상 제2의 보안법이라고 비난하는 담화 발표
- 10월 18일 ▶ •부시 美대통령, 북한인권법안 서명
- 10월 20일 ▶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개소식 및 입주기업 건설착공식(개성)

- 10월 21일 ▶ •美백악관, ‘북한인권법은 북한정권을 탈출한 사람들과 북한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 모두를 돕고 북한의 비참한 인권상황에 대처할 유용한 새 도구들을 제공할 것’이라는 성명 발표
- 10월 22일 ▶ •北외무성 대변인, 중통 기자회견을 통해 6자회담 재개 관련,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고 △동결 대 보상에 참가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해 남한 핵문제를 우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3대 조건 제시
- 10월 23일 ▶ •파월 美국무부장관, 북한의 6자회담 재개조건 일축
- 10월 25일 ▶ •파월 美국무부장관, 방한(10.25~26)
•PSI 다국적 해상합동훈련 실시(10.25~26, 미국, 일본, 호주, 영국, 러시아, 프랑스 등 22개국 참여)
- 10월 27일 ▶ •韓·美·러, 6자회담 재개방안과 관련 HEU(고농축우라늄)문제, 동결 대 상응 조치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4차 6자회담의 조속한 개최에 합의(서울)
- 10월 29일 ▶ •한적, 북적에 추가 비료지원 계획 통보

2004. 11

- 11월 1일 ▶ •北 경비정 3척 서해 소청도 및 연평도 인근 NLL 침범, 南 해군 함정의 경고통신과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
- 11월 2일 ▶ •北 인민군 해군사령부, 북경비정 서해NLL 침범 관련 보도 발표
- 11월 4일 ▶ •조지 W.부시, 제44대 미국 대통령 당선
- 11월 9일 ▶ •北경비정 1척 서해 백령도 부근 NLL 침범
•납치 의혹 일본인 실종자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제3차 北日 실무회의 개최(11. 9~15, 평양)
- 11월 12일 ▶ •한적, 이산가족 사망자 107명 기일 대북통보
- 11월 15일 ▶ •정통부, 친북사이트 31개 접속 차단
- 11월 16일 ▶ •北, 남측이 군사분계선까지 장갑차를 끌어들이는 군사적 도발행위

를 감행하여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

- 11월 18일 ▶ ◆韓·러 외무장관, 6자회담 관련 양자회담(칠레, 산티아고)
- 11월 19일 ▶ ◆북적, 금강산면회소 건설관련 실무접촉 제의
◆현대아산, 금강산관광 6주년 기념행사(금강산)
- 11월 20일 ▶ ◆韓·美 정상회담(칠레, 산티아고), 6자회담의 틀안에서 평화적·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재확인
◆北 조평통 서기국, 친북사이트 접속 차단 관련 규탄 보도 발표
- 11월 23일 ▶ ◆남·북·해외 통일단체 대표 실무접촉(11.23~24), 6·15공동선언 실현을 위해 통일운동의 적극 전개 등 3개항 공동보도문 발표
- 11월 25일 ▶ ◆금강산 면회소건설 실무협의 개최(11.25~27), 금강산 면회소 건설에 필요한 측량과 지질조사를 12.10~12.21 금강산 현지에서 갖기로 하고 면회소 착공일정을 이 기간중 협의해 결정기로 합의
- 11월 26일 ▶ ◆KEDO, 경수로사업 중단조치 1년 연장 결정
◆北 조평통, 남측 정부의 「협력적 자주국방계획」비난 담화 발표
- 11월 27일 ▶ ◆韓·中·日 3국 외무장관 회의(라오스 비엔티엔), 6자회담 실질적인 협력강화 합의
◆국경없는 기자회(RSF), 한국정부의 '친북사이트' 접속차단 철회 요구
- 11월 29일 ▶ ◆韓·中·日 정상, 6자회담 진전위해 공동노력 합의(아세안+3 정상회의, 라오스)
- 11월 30일 ▶ ◆남북, 개성공단 통신협의 재개(11.30~12.1)

2004. 12

- 12월 1일 ▶ ◆동해선 남북연결 본도로 이용시작 및 도로이용 대상 확대
◆美 국무부, 北 6자회담 복귀 강력 촉구
- 12월 2일 ▶ ◆韓·英 정상, 6자회담 조기 재개를 위한 공동노력에 합의
◆이수혁외교부차관보, 6자회담 재개 협의차 방미
- 12월 3일 ▶ ◆노무현대통령, 6자회담 진행 중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낮다고

언급

- 한국전력과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개성공단 전력공급방식에 대해 최종 합의

12월 4일 ▶ • NSC, 일반 탈북자 해외여행 제한 없기로 결정
• 北외무성 대변인, 2기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 정립 과정을 주시하겠다고 언급

12월 5일 ▶ • 日외상, 대북 경제제재 신중 필요성 주장

12월 6일 ▶ • 韓·佛정상,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합의
• IAEA 사무총장, 북한의 핵무기 4~6개용 플루토늄 확보 확신 표명
• 북한 어선 1척 서해 NLL 침범

12월 7일 ▶ • 북한 경비정 1척 서해 NLL 침범
• 우리은행 개성공단지점 개점식
• 美國무부, 북한 공격의사 없음을 표명

12월 8일 ▶ • 韓·美, 6자회담 조기개최 방안 협의
• 통일부차관, 남북경협과 북핵해결 병행 추진 강조

12월 9일 ▶ • NSC, 北수역 조난대응 매뉴얼 마련
• 北, 금강산면회소 지질·측량 조사 연기 요청

12월 10일 ▶ • 통일부, 개성공단 왕래절차 간소화 입법예고
• 日, '신 방위계획대강' 각의 승인

12월 11일 ▶ • KEDO 사무총장, 경수로사업 폐기 후에도 KEDO 존속 희망 표명

12월 12일 ▶ • 日 자민당 간사장 대리, 대북 경제제재로 인한 北정권 붕괴 가능성 주장

12월 13일 ▶ • 노무현대통령, 선의를 갖고 북한 설득에 노력하자고 강조
• 北 조평통 서기국, 남한 원로들의 보안법 철폐 등 '개혁법안 비판 권고문' 발표 비난
• 北 외무성, 6자회담 참가 재검토 주장
• 日, 일본인 사망자 가짜 유골사건 관련, 대북 식량지원 일시 중단
• 北·中, 경제장관 회담(베이징)

- 12월 14일 ▶ •日참의원, 대북제재 검토 결의안 채택
- 12월 15일 ▶ •개성공단 첫 제품 생산 기념식 개최
- 12월 16일 ▶ •한완상 신임 한적 총재, 북한측과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협의 의지 표명
- 12월 17일 ▶ •韓·日정상, 북핵 6자회담 조속 재개 노력에 합의
•美국무장관, 대북 침공의도 없음을 강조
- 12월 18일 ▶ •NSC, 6자회담 조기개최 추진 논의
- 12월 20일 ▶ •부시 미대통령,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지속 의지 표명
- 12월 21일 ▶ •나차긴 바가반디 몽골대통령 방북(12.21~22)
•한적, 하반기 대북지원 비료 전달 완료
•통일부장관, 6자회담재개 문제 등 협의차 방중(12.21~24)
- 12월 22일 ▶ •통일부장관, 6자회담 참가국들의 역사적 결단 촉구
- 12월 23일 ▶ •정부, '탈북자수용대책 개선안' 발표
•中, 탈북자 외국공관 진입 엄중 대처 입장 표명
- 12월 24일 ▶ •北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평양)
•북적, 비료 10만톤 추가지원 사의 전달
•日, 북한에 납치문제 재조사 공식 요구
- 12월 26일 ▶ •노무현 대통령,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하다면 시기·장소 불고려 입장 표명
- 12월 27일 ▶ •조평통 서기국, '참여정부 2년간 반통일행적 결산서' 발표
- 12월 28일 ▶ •日, 납치문제관련 6개항의 대북방침 결정
- 12월 29일 ▶ •동해상 표류 북한 선원 2명 구조, 송환
- 12월 30일 ▶ •KT-조선체신회사, 개성공업지구통신공급에관한합의서 체결
•조평통, 국방부의 주적표현 수정관련 비난 기자회견
- 12월 31일 ▶ •南北군함 서해 NLL서 1시간 대치
•조평통, 한나라당의 '한민족선진공동체통일방안' 비난 담화



2. 남북관계 관련 웹사이트

남북관계 관련 웹사이트

분 류		기 관	site
국 			

분 류		기	관	site
국	언	KBS 아름다운 통일		tongil.kbs.co.kr
		조선일보 NK리포트		www.chosun.com/special/0001/nk1008.html
		중앙일보 북한네트		nk.joins.com
		대한매일 북한정보		www.kdaily.com/korea/service_north.php
		한겨레 북한/통일		www.hani.co.kr/section-003100000/home01.html
	론	문화일보 통일시대		www.munhwa.co.kr/tongil/tongil_main.html
		세계일보 통일 · 북한		netizen.sgt.co.kr/north_syber/index.asp
		연합뉴스		www.yonhapnews.co.kr
		통일정보신문		www.unityinfo.co.kr
		내	단	남북나눔운동
북한인권시민연합				www.nkhumanrights.or.kr
남북문화통합				www.multicorea.org
북한이탈주민후원회				www.dongposarang.or.kr
유니피아사이버통일운동				www.unipia.org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www.onekorea.or.kr
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www.kcrc.or.kr
	탈북자동지회			www.nkd.or.kr
	기독교북한선교회			www.cmnk.or.kr
	좋은 벗들			www.jungto.org/gf
	코리아스코프			www.koreascope.org
	기 타		북한인명사전	
교육인적자원부- 인터넷평화학교			tongil.moe.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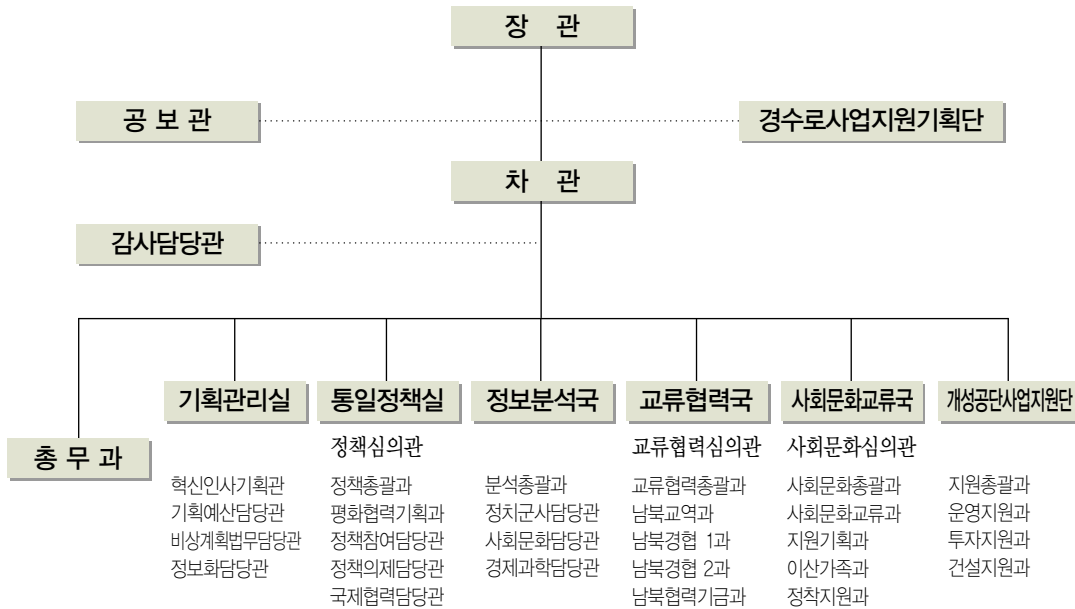


3. 통일부 조직표

통일부 조직표

* 2005년 2월 현재

◆ 본 부



◆ 소속기관



2005 통일백서

2005년 2월 인쇄

2005년 2월 발행

발 행 처 **통일부 통일정책실**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 정부종합청사
Tel : 723-4867, 3703-2339
Fax : 3703-2407

편집 · 인쇄 **양동문화사**
Tel : 2266-0892
